

# Russia Policy Review

## 러시아 폴리시 리뷰

전당대회를 앞둔 중국: 실크로드 맥락  
북한의 위험한 핵·미사일 실험은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한미 정상회담 결과 중 일부에 대해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과 한·러 관계 현황  
러·일 관계: 새로운 방향의 모색  
러시아의 대(大) 유라시아 정책 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통제 없는 핵무장: 러·미 회담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정치체제적 대응 (I)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정치체제적 대응 (II)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한·러 국민 인식의 변화: 뜨는 러시아와 지는 중국  
러시아 문화와 문화 정책의 특수성 - 러시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Russia Policy Review

## 2017

Vol.1 | No.2 October

『러시아 폴리티카 리뷰』는 러시아의 시각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내의 국제문제 및 정책 연구자들에게 러시아의 시각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방향성, 전문성, 확장성을 지향하는 선별된 자료를 소개해주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책저널이다.

Russia Policy Review

통권 제2호 2017년 9월 30일 발행

발행인 / 강덕수(한국외국어대학교)  
편집인 / 김석환(한국유라시아연구소)  
편집 및 운영위원 /

바실리 미헤예프(MEMO)  
강덕수(한국외국어대학교)  
김석환(한국유라시아연구소)  
김현택(한국외국어대학교)  
손성환(前주스웨덴 대사)  
홍완석(한국외국어대학교)  
황성우(한국외국어대학교)

번역위원 / 서유경(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연구소  
주 소 /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전 화 / 031-330-4852

팩 스 / 031-330-4851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us.or.kr>

디자인·편집 / (주)이환디앤비(02-2254-4301)

인쇄인 / 송용수

인쇄처 / (주)이환디앤비

ISSN 2586-100X

비매품

※ 본 잡지의 내용을 허가없이 무단전재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중국: 실크로드 맥락  
바실리 미헤예프, 세르게이 루코닌 | 3

북한의 위험한 핵-미사일 실험은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올레그 다비도프 | 7

한미 정상회담 결과 중 일부에 대해  
올레그 다비도프 | 11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과 한-러 관계 현황  
알렉산드르 표도롭스키 | 14

러일 관계: 새로운 방향의 모색  
비탈리 스비트코 | 17

러시아의 대(大) 유라시아 정책 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예브게니 카나예프 | 21

통제 없는 핵무장: 러미 회담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알렉산드르 사벨리예프 | 27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정치체제적 대응 (I)  
바실리 미헤예프 외 (토론) | 36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정치체제적 대응 (II)  
바실리 미헤예프 외 (토론) | 51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한-러 국민 인식의 변화: 뜨는 러시아와 지는 중국  
최우익 | 70

러시아 문화와 문화 정책의 특수성 - 러시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함영준 | 78

# Russia Policy Review

## 러시아 폴리시 리뷰

전당대회를 앞둔 중국: 실크로드 맥락

북한의 위험한 핵·미사일 실험은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한미 정상회담 결과 중 일부에 대해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과 한·러 관계 현황

러·일 관계: 새로운 방향의 모색

러시아의 대(大) 유라시아 정책 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통제 없는 핵무장: 러·미 회담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정치체제적 대응 (I)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정치체제적 대응 (II)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한·러 국민 인식의 변화: 뜨는 러시아와 지는 중국

러시아 문화와 문화 정책의 특수성 - 러시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저널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362-2009-1-B00005)

---

# 전당대회를 앞둔 중국: 실크로드 맥락

---

바실리 미헤예프, 세르게이 루코닌

---

2017년 중반 전당대회를 앞둔 중국 국내정치는 시진핑의 통제로 안정된 상황이었다. '신뢰할 수 없는' 당원과 군인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반 부정부패 숙청을 감행하고 '당의 핵심' 시진핑을 둘러싼 역대 최강의 선전 캠페인을 지속해온 중국 지도부는 2017년 가을로 예정된 중국공산당 제19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내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 후에 유죄판결을 받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원 보시라이가 시진핑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었던 이전 제18차 전당대회와는 달리, 현재 중국 최고 지도자에게는 적수가 없는 상태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요직을 둘러싼 암투는 이제 정당 정치적 성격보다는 정당 관료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바로 충신들 가운데 누가 권력을 잡느냐가 문제 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시진핑은 지도부 및 사회부패 세력과의 투쟁과 안정 유지 측면에서의 국내 정치적 성과뿐 아니라, 실크로드 이니셔티브(혹

은 중국 정부가 말하는 '일대일로')와 이를 기반으로 한 중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 미국과의 무역전쟁 방지를 포함한 미중관계 개선 등 대외 정치적 성과를 전당대회에 보고하려고 한다. 후자는 경제 및 수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에 특히 중요한 사항이다.

2017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는 제1차 실크로드 정상회담(이하 일대일로 정상회담)이 열리며, 이 회담은 2017년 초부터 언급된 것처럼 실크로드 이니셔티브를 근본적으로 격상시켜 줄 것이다.

첫째, 실크로드 프로젝트에는 정치 및 군사-정치적 요인들이 개입되어 있다. 중국은 회담을 격년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그럼으로써 중국에 충성하는 세계 리더들과 실크로드 프로젝트 참가자들과의 정례적 정치대화의 장을 중국의 패권 하에 둘 계획이다. 중국은 다른 포맷(SCO, BRICS, APEC, ASEAN+, EAS 등)과 비교할 때 실크로드 포맷이 우위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중국이 이 회담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고 중국이 정상급 및 고위급 회담의 의제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 문제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중국은 2017년 6월 말에 신 실크로드 비전을 확장한 ‘일대일로’ 건설 해양협력구상 발표한다. 이 구상은 아세안 회원국들에게 남중국해 안보 문제의 중국식 해법을 제안한다.

동시에 중국은 실크로드 구상의 군사-해양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중반 남중국해(브루나이), 인도양(파키스탄의 파다르, 스리랑카, 몰디브), 페르시아만 인근(오만, 지부티)에 위치한 중국 해군기지는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새로운 군사 기지 건설의 목적은 형식적으로는 해적과 테러리스트 등의 위협으로부터 해양 실크로드의 군사안보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중국을 ‘불신’해온 일련의 국가들(인도, 일본, 베트남)은 중국의 이러한 행동을 중국이 황해와 남중국해뿐 아니라, 중국해안으로부터 더 먼 지역에서 그리고 더 큰 세계적 차원에서 군사-정치적 패권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둘째, 실크로드 구상의 방향성 자체가 변하고 있다. 이 구상은 처음에는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그리고 이들을 통해 유럽까지 연결하는 역내 지정학적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이제 실크로드 구상은 호주,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프리카와 남미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남미에 대해서 브릭스 개발은행 및 2017년 9월 중국에서 차기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브릭스 포맷을 전적으로 활용한다. 브라질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남미 및 아프리카 대륙 진출을 위한 일종의 ‘창’으로

간주된다.

중국 학계는 미국의 인프라 발전이 경제 성장에 직결된다는 트럼프의 여러 차례의 성명에 착안하여, 아직은 미국에서 수용하지 않았지만, 글로벌 인프라 현대화 부문에서 중미협력 아이디어를 더욱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셋째,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결합하여 조화롭게 발전시키려는 중국의 계획은 실크로드 구상의 새로운 발전 모멘텀이 됐다.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중국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와 연결시키고, 중국에는 파키스탄, 태국, 버마, 인도차이나를 통해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연결시켜 줄 것이다.

넷째, 실크로드 구상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2017년 중반에 자본 부족이라는 시급한 재정문제가 노출됐다. 5월에 일대일로 포럼을 개최한 이후 중국은 사실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투자전략으로 나아가고 있다. 과거 개도국에 투자할 때 중국 통제 하에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브릭스 개발은행, 중국 실크로드펀드 등을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중국이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실크로드 포맷 차원에서 선진국 자본을 유치하려고 노력한다. 그럼으로써 중국은 빈국에 대한 일방적 투자정책에서 다자간 협력을 위한 부국의 투자유치로 정책 방향을 변경시키고 있다.

이런 실크로드 구상의 ‘수정안’에서 독일의 도이치방크가 중국의 첫 파트너가 됐다. 도이치방크는 2017년 6월 중국개발은행과 30억 달러 규모의 관련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실크로드 구상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공히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5월에 개최된 일대일로 정상회담에서 EU 주요국(독일, 프랑스)과 영국은 중국이 실크로드 구상 차원에서 동유럽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고 비난했고, 중국이 제안한 공동 성명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다. 이들에 따르면, 동유럽에서 중국의 투자 활동은 'EU 주요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치적인 대응은 앞에 언급한 중국과 독일 은행 간 협정 체결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크로드 구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정치적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도는 중국이 인도양에서 전개하는 새로운 군사·정치적 활동을 국익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일대일로 포럼 참가 자체를 거부했다. 2017년 6월 인도와 파키스탄은 SCO에 가입했는데, 인도 정부가 이를 통해 중아아시아와 인도양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강화 그리고 중국과 파키스탄 간 협력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억제하려고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도와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는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중국 억제책 마련으로 중국의 군사·해양 정책에 대응하고 있다. 그런 억제책에는 스리랑카, 과다르, 오만 등지에서 해적 소탕 및 대테러 협력을 구실로 수행되는 합동 군사훈련과 러일 군사협력 강화가 포함된다.

서방이 실크로드 구상을 경제적 기회이자 정치적 리스크로 보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 구상에 실질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잠재적 주요 세력인 미국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목적은 실크로드 구

상에 대해 미국 신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즉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무분별한 조치'로 인한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다. 5~6월 중미관계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중요한 사건을 맞이한다.

- 미국은 중국에서 열리는 SCO 정상회담에 대표단을 파견한다.
- 중국과 미국은 시진핑과 트럼프가 달성한 4월 합의의 연장선상에서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이는 미국 상품 및 자본 시장에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중국의 우려를 해소해 줄 것이다.
- 양측은 북한 문제에 대해 보다 높은 수준의 협력으로 나아간다. 중국은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북한 지도부에 원유 공급 중단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는데, 그렇게 되면 북한의 에너지 부문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 6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양측은 2017년 말 트럼프의 방중 가능성을 타진하고, 4월 중미 정상회담에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합의한 외교안보대화를 시작한다. 남중국해와 북한 억지력 알고리즘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지속되는 등 이 대화가 예상처럼 진전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치대화 채널 구축이라는 사실 자체가 전당 대화를 앞두고 대미 정책에서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진핑의 대외 정치적 목적에 부합한다.

실크로드 구상 수정본에서도 중국은 여전히 러시아를 구상 이행의 중요한 방향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를 가장 중요한 방향으

로 보는 것은 아니다.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공간을 통해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결합하려는 새로운 계획에 따라 프로젝트의 우선 방향이라는 입지에서 러시아를 점차 밀어내려는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다. 실크로드 구상 차원에서 서방 자본과의 재정 협력이라는 새로운 추세 때문에, 중국이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대한 잠재적 공동 투자자라기보다는 자본 수입국으로 여기는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다.

러시아-중국-미국이 이루는 삼각형에서 힘의 비중도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제는 중미 간 경제관계가 중러 간, 나아가 러미 간 경제관계보다 규모가 더 크다. 러미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북경과 워싱턴의 정치관계는 중러 그리고 러미 정치관계보다 더 중요하고 건설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오늘날 이 지정학적 삼각형에서 미사일·핵무기 분야가 다른 두 선분보다 러미 선분이 더 중요한 유일한 분야로 남아있다.

중국의 글로벌 포지셔닝 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추세들은 러중 관계의 본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러시아의 역할이 삼류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러시아는 경제뿐 아

니라 군사·정치적 요인을 포함한 새로운 수준의 러일 협력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인도양, 그리고 향후 중동 등지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러시아의 대외 정책에서 대중 방향과 대일 방향의 균형 혹은 결합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는 문제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보았을 때, 해결책은 의혹과 불신을 해소해 줄 포맷, 이를테면 러-미-중, 러-일-미, 나아가 보다 넓은 포맷인 러-일-미-중 등과 같은 다자간 포맷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대미 관계에서 협상 입지를 강화하는 데는 여전히 러시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중미 관계는 최근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불신 잠재력이 상존하며, 이해관계와 접근법에서 이견의 여지가 크다.

그러나 현재의 세계정세, 현재 러미 관계에서 그와 같은 아이디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나아가 러시아는 다자간 콘텐츠가 없으면 중국의 실크로드 구상 및 중미 협력 발전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트렌드들에 의해 중국의 전략적 이니셔티브인 '일대일로'의 새로운 공간과 방향에서 아웃사이드가 될 수 있다.

- 바실리 미헤예프(V. V. Mikheev)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정회원, IMEMO 부소장
- 세르게이 루코닌(S. A. Lukonin) 경제학 박사, IMEMO 중국경제정치부장
- 원저: Китай: Предсездовский ракурс Шелкового Пути (IMEMO 시사 논평 2017.7)
- 번역: 강규은(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

# 북한의 위험한 핵·미사일 실험은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

올레그 다비도프

---

최근 전 세계는 북한의 또 다른 핵무기 실험 소식에 문자 그대로 충격에 휩싸였다. 아직 신빙성 있는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탄두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완벽한 수소 폭탄'을 개발해 9월 3일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다.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자료에 따르면 폭발 위력은 50~100 kt에 달하며, 이 수치는 북한이 앞서 여러 실험에서 달성한 위력보다 10배가량 상회한다.

북한 당국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실험들의 주요 목표는 광 미군기지뿐 아니라, 미국이 대북 군사적 압박에 나설 경우 그 '보복 타격대상'이 될 수 있는 미 본토의 대도시들까지 핵·미사일의 사정권 하에 놓는 것이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 올 7~8월 북측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새로운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실시했으며, 이 미사일은 북한 내부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핵탄두 운반체가 될 수 있는 '대륙 간' 미사일

로 평가된다.

이날 러시아 외교부는 매우 강력한 어조로 성명을 발표해 이번 실험은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 및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북한의 일련의 행위가 얼마 전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위기 상황의 정치·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공동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러시아와 중국의 평화 유지 노력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생각할만한 근거는 충분하다. 북한 또한 여러 당사국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중국이 마련한 '로드맵'의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시하기 위한 핵 실험이 '우연히도' 푸틴 대통령의 방중 기간 및 브릭스(BRICS) 정상회담에 맞춰 실시됐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첫 반응은 패닉에 가까웠다. 상황은 그로테스크하다. 세계 최강국의 정치 엘리트들

은 그들과 동등한 적국이 아닌, 규모도 작고 형편없는 국가로부터 무례한 군사적 도전을 받아 공포감에 휩싸였다. 몇 년 전만해도 북한이 가진 대량살상무기의 잠재력을 무시하는 반응을 보여 왔던 대부분의 미국 군사전문가들이 이제는 조만간 북한이 핵무기가 탑재된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로 미국을 실제로 공격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한다는 사실을 언급해 줄 필요가 있다. 민간 연구소와 의견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지만, 미국 정보국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최소 핵탄두 60기 보유하고, 2018년에는 완벽한 대미 공격용 미사일 운반체를 생산하고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행동이 미국에 적대적이고 위협이 되며, 이런 북측의 위협이 지속될 경우 북한은 '대규모 군사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 밝혔다. 다음 행보는 미 국방부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이 해결해야 할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였다. 첫 번째 문제는 한반도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효과적으로 군사적 대응책을 조율하는 문제다 (이는 미 전략 자원의 추가적 한국 배치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최신식 방어 및 공격 무기의 공급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응징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를 통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해 채택하는 것이다. 이 결의안은 북한을 완전히 국제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중요한 점은 미국이 '선제적'으로 대북 무력 행위를 실시할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감행할 것인지이다. 다른 의문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 새로운 강력한 제재 조치로 북한을 압박하는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그 어떠한 의문에도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해답은 없으며, 미국 전략가들의 머릿속도 마찬가지로 복잡할 것이다. 지금까지 분명한 것은 일련의 사건 이후 미국은 북한과의 그 어떠한 협상에도 나설 생각이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미 SNS를 통해 대북 '유화' 정책이 소용없다는 나름의 결론을 밝혔다. 즉, 군사작전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가 속한 동북아는 중동과 다르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곳에서 무기를 사용하는 행동은 일을 훨씬 복잡하게 만든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기득권 세력은 북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을 겨냥해 그 어떤 '쿨한 정책'을 마음 놓고 실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예컨대 어떤 군사 작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를 잠재워야 하고, 동맹국 간 강력한 연합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대북 미사일포격 시스템을 활용해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군 전력을 제압함으로써 북측의 보복 타격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실행에 앞서 신중한 사전준비 작업이 요구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반도 내에서 전쟁이나 혼란이 발생하는 상황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언급한 중국의 입장을 상기시키는 것이 적절하겠다. 러시아의 입장도 이와 유사하다.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군사적 해결책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그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북한이 자국의 안보에 대해 불안해하면 안 된다.

미국의 최우방국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 진영에도 심각한 동요가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

령은 최근 발생한 북한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는 대북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한다고 밝혔다. 일본 또한 미국의 군사 행동이 시작될 경우 북한의 공격 대상이 될 개연성이 큰 자국에 ‘불똥이 될까봐’ 우려한다. 이 모든 사실로 미루어볼 때, ‘군사적 옵션’의 실시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이 아직까지 미국에게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은 않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신규 대북제재와 관련한 문제 또한 간단하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에 대한 추가 규제를 골자로 하는 안보리의 8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뒤이어, 러시아는 보복 조치를 강화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러시아 외교부 성명에 따르면 현 단계에서 제재를 통한 압력을 행사하는 기회는 ‘완전히 소진’됐다고 본다.

물론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기존에 제시된 가혹한 보복 조치(에너지 공급 전면 중단, 경제·통상, 금융, 교통 봉쇄, 정치 관계 단절)는 대략이라도 논의조차 된 바 없다. 여기에는 인접 국가마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대북 ‘올가미’가 장기화 될 경우 결국 북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이 상황은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북한 정권이 초래한 기존의 핵·미사일 위기보다 더 큰 참사다. 러시아에게도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개최된 브릭스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비유적으로 밝힌 나름의 논리가 있다. 그 주된 내용은 미국이 러시아와 북한, 이란을 한데 묶는 제재 조치를 조만간 채택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북 제재방안 마련에 러시아가 함께 참여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것

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오늘 북한을 ‘굴복’시키고, 내일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러시아 또한 ‘굴복’시키려 시도할 것이다.

사태가 어떻게 급변할 것인지 추측하려는 시도 속에서 모두를 우려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없다. 그 질문은 주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는 김정은에게 필요한 것이 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한 가지만 살펴보자. 과거 북한 지도자 김정일은 17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 군사 로켓을 17차례 발사한 반면, 현 독재자 김정은은 올해에만 18차례 로켓을 발사했다. 김정일은 2006년부터 규모가 작은 핵 실험을 두 차례 실시한 데 비해, 그의 판박이인 김정은은 2013년부터 벌써 네 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횟수가 거듭될수록 그 강도는 높아졌다. 이제는 김정은이 자행하는 모든 행동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북한의 생존을 위한 힘겨운 싸움이라는 논거로 덮어줄 수는 없을 것 같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현 상황에서 김정은의 행동은 국제 사회에 대한 무례한 도전이자 협박이다.

북한 지도부가 바깥 세상에 내놓는 신호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핵클럽에 받아들여 달라, 제재를 전면 해제하라, 타국과 협력, 무상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라. 동의하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나, 이에 응한다면 혼란은 미미할 것이다’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북한이 스스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은(당연히 우연이라는 요소는 고려될 수 없다) 전혀 적절치 않다. 북한을 지배하는 사람은 미치광이나 ‘사상 투쟁가’들이 아닌, 죽을 생각이 전혀 없고 살고 싶어 하는, 다

른 이들을 제물로 삼아 잘 살고 싶어 하는 차  
가운 냉소가들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가 보여주려 시도했던 것처럼, 무엇  
보다도 북한이 매우 성공적으로 활용해 온 이  
웃국가 간 갈등으로 인해 지금 현재 북한의 독  
단적인 무뢰한들을 제압해 억누르기란 극히 어  
렵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반도 문  
제 해결에 가장 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주변국

가들, 즉 러시아, 중국, 미국, 한국, 일본 등 '5개  
국' 간 이해 조율과 결여된 신뢰를 어떻게 회복  
할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5개국 구성  
원들이 참여해 모든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  
하기 위한 상설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자는  
아이디어로 돌아가는 것이 공동의 건설적 행동  
노선을 모색하는 데 첫걸음이 될는지 모르겠다.

- 올레그 다비도프(O. V. Davydov) 前 러시아 외교부 특임대사
- 원제: К ЧЕМУ ВЕДУТ ОПАСНЫЕ ЭКСПЕРИМЕНТЫ КНДР В РАКЕТНО-ЯДЕРНОЙ ОБЛАСТИ  
(MEMO 시사 논평 2017.09.07)
- 번역: 강규은(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

# 한미 정상회담 결과 중 일부에 대해

---

올레그 다비도프

---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 집중됐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워싱턴 정상회담은 취임 직후부터 북핵 문제를 주요 우선과제 중 하나로 끌어 올리고, 짧은 기간 내 이 문제를 '종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주장해온 양국 신임 대통령들 간 첫 만남이었다. 이에 따라 관측통들은 양국 정상들이 이 같은 전략적 방향에서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 프로그램을 제안할지 기대를 하게 됐다.

출국 하루 전 문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강경한 성명을 쏟아냈다는 사실을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 그는 대북관계 개선과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한의 핵 야욕을 억지시키는 실질적 조치를 시도하지 않는 등 정치적으로 소극적이었던 미 전임 행정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대통령에 따르면 제재 및 압박 전개 정책은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과 생산적으로 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은 미사일이나 핵무기가 필요 없으며, 완전한 핵 폐기가 수많은 혜택을 반드시 가져다줄 것이라고 김정은을 설득하기 위해 '적절한 여건이 갖춰진다면' 방북할 용의가 있다고까지 밝혔다. 그는 실제로 북한 지도자가 '비이성적이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충고한 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합의는 다름 아닌 김정은과 해야 한다고도 밝혔는데, 한국정부에 따르면 '김정은만이 비핵화를 결정할 권력을 갖기 때문이다'.

한국 대통령의 이 같은 현실적인 입장과는 별개로 뜨거운 감자를 둘러싼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의 백악관 회담은 보다 '기본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국민도, 가장 가까운 이웃국들의 안보도 신경 쓸 생각이 없는 '난폭하고 잔인한 정권'을 상대해야 한다고 밝히며, 문 대통령을 여러 차례 옥죄었다.

이 같은 트럼프의 감정적 어조는 그로부터

불과 며칠 전 북한이 현지에서 체포된 미국 국민을 본국으로 송환했다는 사실로 충분히 설명된다. 이 미국인은 의사들의 소견에 따르면 두개골 및 뇌 외상으로 인한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고, 의식이 돌아오지 못한 채 고국에서 사망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서 격한 반응을 낳았다. 정치 엘리트들은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까지 고문하는 야만적인 정권과 대체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냐는 의문을 가지게 됐다.

정상회담 결과가 담긴 공동 성명은 심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자 동맹 메커니즘 개선이 앞으로 가장 큰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규정하는 제재 조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북한을 유도하기 위해 새롭고, 보다 더 강력한 압박 지렛대를 마련해 활용하는 것이다.

동맹국들은 기존의, 그리고 이 같은 목적으로 특별히 구축되고 있는 전략적 협의 메커니즘 차원에서도 비핵화 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문제 등 ‘공동의’ 대북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대북 억지에 대한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한국, 일본이 참여하는 3자 간 국방 및 안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함부르크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접근법 조율을 위한 ‘3국’ 정상들 간 만남이 있을 예정이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THAAD) 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전제들을 달았는데, 한국 신정부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전혀 다루지지 않았다는 사실

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대신 미국 상원의원들과의 간담회 중 질의응답 시간에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서 그 어떠한 ‘반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상기 언급된 모든 내용은 백악관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때 파트너국의 ‘목줄’을 ‘짧게’ 쥐려 할 것이며, 미 정치인들의 ‘체면을 구길’ 수 있는 그 어떠한 독자적 행동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한다.

한편, 미국은 자국의 전략적 동맹국들을 노골적으로 ‘내치려’ 들지 않는다. 정상회담 결과 조율된 일련의 원칙은 한국 정부의 자유주의적 접근법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동 성명은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며, ‘특정 여건 하’에서 이러한 회담을 제의할 수 있다(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최근까지도 비핵화가 담보될 때만 북한과의 대화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여겼다).

미국은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남북 대화를 재개하려는 한국의 계획을 지지한다(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려됨).

미국 측은 한국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뜻을 지지한다.

그밖에 한미 정상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 도입이 타당하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먼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무기한 동결을 실시한다(물론, 상대국으로부터 그 어떠한 역공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이후 핵무장 해제에 대한

회담을 실시한다(참가국 구성은 불분명하다). 여기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완전히 해체한다는 조건 하에 북한에 대한 ‘보상’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이 성공을 거둘 경우 다음 행보는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평화안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치가 될 것이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에 대한 미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이 같은 과정들이 가장 초기 단계적 성격을 띠며, 그도 핵문제 해결에 있어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행동 프로그램이 없다고 여러 차례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은 북한에 비핵화를 강요하기 위한 명료하고 신중한 행동 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전 정상회담들을 통해 잘 알려져 있던 억지, 제재, 압박 등 선호되는 조치들의 목록이 두드러졌다. 여기에 마치 북한이 회담에 참여하려 한다고 단 한 차례라도 밝히기라도 한 것처럼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보너스로나 추가됐을 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 지도부가 위험한 핵미사일 실험 지속이라는 위험한 길을 계속 걸어갈 경우, 어떠한 종류의 받아들일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을 지에 대해 분명한 신호를 결코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정상회담 참가자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못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실로 미루어보았을 때, 분명한 점은 현재 핵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접근법, 그리고 역시 적극성의 조짐이 보이는 러중 간 접근법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얼마 전 러시아 외무차관은 한 인터뷰를 통해 외무부가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동북아 지역에 굳건한 평화 메커니즘 구축을 최종 목표로 하는 나름의 ‘로드맵,’ 즉 일련의 실질적 해법들을 마련해 파트너국들과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물론 이 같은 창의적 접근법은 무조건 환영이다. 유일한 문제는 이러한 활동을 위해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 이를테면 5자회담들(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 당사국들이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관련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한반도 문제 당사국 간 조율을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지하다시피 이들 간 행동이 조율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 올레그 다비도프(O. V. Davydov) 前 러시아 외교부 특임대사
- 원제: О НЕКОТОРЫХ ИТОГАХ АМЕРИКАНО-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MEMO 시사 논평 2017.09)
- 번역: 강규은(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과 한·러 관계 현황

알렉산드르 포도롭스키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극동 실무방문과 동방경제포럼을 통해 진행된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은 의전 행사의 틀을 벗어났다. 지난 회담은 양국이 경제 및 정치 부문에서 관계를 활성화하고, 특히 많은 분야에서 양국 관계의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려는 의지를 증명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실제로 한·러 관계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에 성공적으로 발전했다. 무엇보다도 이 기간에 양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언급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후 양국 관계는 냉각기를 맞이했다.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던 정상회담에 공백기가 들어섰다. 2001년~2014년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는 매우 역동적으로 발전했으나, 2015년~2016년에는 하락을 면치 못했다. 예를 들면 2016년 양국의 교역량은 16.6% 감소했다.

물론 2017년 상반기 교역량은 50%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회복됐다.<sup>1)</sup>

이 같은 부침은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한국에 공급하는 석유 및 가스 가격이 하락해 촉발된 경기 변동성의 영향뿐만 아니라, (비록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수준이기는 하나) 한국 기업들의 대러 경제제재 참여와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러 경제 관계가 양적(표1, 표2 참고), 질적 측면에서 아직은 한국의 대외 전략의 주요 방향 밖에 있다는 사실을 언급해줄 필요가 있다.

교역 부문에서는 부가가치 사슬의 존재가 눈에 띄지 않는데, 한국의 수출은 자동차 생산과 관련한 상품이 주를 이루고, 러시아의 수출은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이 주를 이룬다. 더욱이 2007년~2015년 한국의 대러 수입에서 광물 자원의 비중은 56%에서 81%로 증가했다.<sup>2)</sup>

이와 관련해 한·러 관계의 미래는 러시아 경

1) 한·러 정상회담/<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55540>

표1. 2001년 한국의 대외 무역 중 러시아 비중

국가	한국의 수출(10억달러)	%	한국의 수입 (10억 달러)	%
중국	18.2	12	13.3	9
아세안	15.3	10	14.5	10
일본	16.5	11	26.6	19
미국	31.4	21	22.4	16
EU (27)	22.6	15	14.1	10
러시아	0.9	0,6	1.9	1.3
총계	150.4	100	141.1	100

산출 근거 : International Trade Center. Trade map /<http://trademap.org/tradestat>

표 2. 2016년 한국의 주요 대외무역 파트너 국가

국가	한국의 수출(10억달러)	%	한국의 수입(10억달러)	%
중국	124.4	25	87.0	21
아세안	79.2	16	46.8	12
일본	24.4	5	47.5	12
미국	66.8	14	43.4	11
EU (27)	50.7	10	49.2	12
러시아	4.8	1	8.6	2.1
총계	495.5	100	406.1	100

산출 근거 : International Trade Center. Trade map /<http://trademap.org/tradestat>

제의 구조적 변화 전망과 첨단기술 부문의 비중 증대, 양국 시장에서 한국과 러시아 민간 부문의 창의적 활동 제고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줄 필요가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제들의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경제적 성격의 양국관계'에 대한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의 극동지역 발전 정책과 우리 신북방정책 사이에 많은 공통점과 접점이 있다'고 밝혔다.<sup>3)</sup>

한국이 유라시아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는 차원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 정치, 경제 관계를 확

장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이 실제로 발생했다. 이 생각의 뿌리는 소련 및 중국과 공식 수교를 맺어야 한다는 노태우 대통령의 이니셔티브, 즉 북방정책(Nordpolitic)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이 용어는 1983년 이범석 외교부 장관이 처음 사용했지만, 전략적 구상으로서 북방정책이 소개된 것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서다). 북방국가들과 관계를 발전해야 한다는 기본노선은 이후 30년 동안 구체적 내용이 추가·수정됐으며, 그 정책 실현의 집중도는 다양각색이었다. 물론 북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순방향에 역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노선은 한국 대외정치 영역의 장기적인 우선과제로 자리매김했다. 더욱이 한

2) 송병직 '한국의 대러 대외무역구조' 「극동문제」 제1호. 2017. pp.56~57

3) 한-러 정상회담/<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55540>

국 외교가 추구하는 ‘유라시아 성향’(евразийск  
кость)은 냉전 시대에 대외 정책을 독점적으로  
규정한 ‘섬나라-반도적 사고방식을 거부하겠다는  
의사와 더불어 대륙의 강대국인 중국과 러  
시아에 한국은 그들과 파트너 관계를 발전시키  
려는 준비가 돼 있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2017년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전임 대  
통령의 정책과 선을 굽겠다는 발표를 여러 차  
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과거에 대외정책  
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뛰어넘는 내용이나  
방향을 개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물론 여러  
모로 미루어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현안  
해결에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은 크다.

무엇보다도 2016년~2017년 미국 미사일방어  
시스템 사드의 한국 배치 이후 발생한 중국과  
의 불화를 잠재우고, 대러 관계에서 긍정적 호  
름을 형성하려는 열망이 보인다. 둘째, 한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간 대결의 장으로 한반도가  
변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지가 보인다. 셋째, 한  
국은 대북 대화를 재개하려는 의지를 밝혔으  
나, 그렇다고 해서金正은 정권에 상당한 양보  
를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한국은 쇠약해져  
가는 북한의 전체주의 통치 시스템과 관련된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할 개연성이 크다. 넷  
째, 한국은 한편으로는 러시아와 중국 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일본 간 협상 다리를 놓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 노력할 것이다. 역내  
‘5대 강국’(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이 한반  
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합의된 접근법을 반드시  
마련하려는 과정에서 러시아와 한국 간 협  
력은 앞으로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러시아와 한국은 역내 강대국 간의 군사적,  
정치적 갈등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  
로 한반도의 상호 전략적 이익을 고려한 합의를  
달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및 인도적 지원을 보장해  
야한다는 전략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장기적으로 파트너십을 발전  
시켜 나가려는 열망이 서로에게 존재하고, 남  
북관계를 포함해 많은 국제 문제에 대한 시각  
이 일치한다고 해서 향후 한-러 파트너 관계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과  
거에 여러 차례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동등하  
게 중요한 조건들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그  
조건은 양국 간 경제-통상, 투자, 과학-기술 관  
계를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  
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기업뿐 아니라 중  
소기업 등 민간 부문 간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한국-러시아-미국-중국-일본 등 ‘5개국  
(오각형)’ 간 관계를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신뢰  
를 강화하는 것이다.

- 알렉산드르 표도롭스키(A. N. Fedorovskij) 경제학 박사, IMEMO 아태지역 부장
- 원제: Владивостокская встреча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и состояние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IMEMO 시사 논평 2017.09)
- 번역: 강규은(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

# 러·일 관계: 새로운 방향의 모색

---

비탈리 스빗코

---

2017년 러·일 관계는 불확실성의 시기에 들어섰다. 일 년 내내 과거의 타성에 젖은 노력들이 양국 관계의 주 원동력이었던 반면, 모든 새로운 이니셔티브와 행동은 새로운 현실적 목표와 방향의 부재로 인해 상당한 난관에 봉착했다. 양국 모두는 원하는바-이상에서가 아니라 상황을 고려할 때 가능한 선에서-를 더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도록 사실상 잠시 휴지기를 가졌다.

앞선 몇 년간 러·일 관계가 대외적(사실은 꾸며진)으로 활발했던 배경에는 상대방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최소한으로 양보해 주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양측의 시도가 감춰져 있었다. 러시아는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일정한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정상급 대화 개최에 지속적으로 강한 의지를 표명해주기를 원했고, 많은 부분에서 원하는 바를 성취했다. 미국은 러시아와 일본이 추진하는 정상급 대화에서 미국이 보기에 너무 과도하게 적극성을 보이

지 말 것을 일본에 주기적으로 요구했던 것이다. 게다가 일본은 서방 집단의 대러시아 제재 체제를 대외적으로는 준수하면서도,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문제를 양자 회담의 틀을 뛰어 넘어 사실상 양국의 공동 프로젝트 추진에는 협조하면서, 우크라이나 남동부 지역의 갈등 해결 문제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렸다.

한편 일본은 러시아 정부가 자국을 위해 희망적인 선언들을 제시할 가능성을 오랫동안 기대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타협을 기반으로 하는 양자 회담을 통해 양국 간의 '영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또한 현상 유지를 기반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를 표한 바 있다. 적어도 일본 측의 해석에 따르면, 후자는 북한이 핵 강대국의 지위를 획득하고 역내 세력균형이 중국에 유리하게 변화하는 데에 러시아가 반대함을 의미했다.

그러나 2016년 말경 양국이 각자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일정한 한계에 다다랐음이 드러났다. 상대방에게 호의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이 해줄 수 없는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기다려 온 러시아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서 확실해진 사실은 가까운 장래에 러시아가 영토 문제에서 일본에게 양보할 것이라 기대는 다분히 비현실적이라는 점이다. 그 결과 이 사안에 관한 회담은 영토분쟁 지역에서 '공동 경제활동' 프로젝트를 추구한다는 양측 모두에 그다지 흥미롭지 않는 주제로 그 방향이 틀어졌다. 또한 러시아는 러일 문서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완곡한 비판조차 용납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위험한 긴장 관계를 초래한 것에 동일한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 대립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다른 한편, 러시아 역시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며, 영토 문제에서 러시아의 정치적 이익에 불리한 것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러시아에 의미 있는 지정학적 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을 상대로 정치적 술책을 부리는 것은 실현 가능성도 없거니와 오히려 귀찮은 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양국이 명예와 편의를 이유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양국의 의지와 노력의 강도는 급격히 약해졌다. 정상급을 포함해 실무진의 협의와 접촉은 계속되고 있으며, 언론과 여론에는 양국 공동 경제개발의 '가능성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 대표단들이 남 쿠릴

열도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협력에 대한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활동의 결과는 완곡하게 말해서 별 소용이 없으며, 일본 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기 위해 양자 간 맺어질 법적 기반의 합의에도 어떤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이 러시아 경제 전반에 대규모로 투자할 만한 객관적 토대도 아직은 없다. 최근 10년 동안 이러한 투자의 주요 채널은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조립 및 생산의 현지화에 일본 자동차 대기업들이 투자하거나, 일본 대기업들이 러시아 영토 및 대륙붕에서 에너지 자원의 채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두 채널 모두 현재 객관적 여건으로 인해 별다른 활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 채널의 경우 최근 3년간 러시아 국내 자동차 수요가 낮기 때문이며, 두 번째 채널의 경우 기회가 제한돼 있고 러시아 에너지 기업들이 투자활동을 강화하는데 그다지 큰 의욕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러시아 에너지 영역의 성장과 팽창을 갖은 방법으로 억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 때문에 러시아와 에너지 부문에서 협력하기는 쉽지 않다.

러시아,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각오를 보이는 일본 정부는 협력 가능한 계획에 관해 대화하거나 또는 러시아 기업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보여주기식 이미지 프로젝트의 형태를 취하려고 한다. 전략적으로 일본이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을 확대 수입하는 것이 해당 러시아 기업들의 상황과 향후 발전 전망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의제로 상정되지 않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자기 기술을 활용해 러

시아 내 에너지 자원을 생산하고, 장래 실현 가능한 가공 사업의 현대화에 좀 더 폭넓게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일도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제적 위신 및 국가적 위신 제고 측면에서도 서로 만족할 만한 진전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실제 일본은 대러시아 제재 영역에서 많은 부분을 철회할 준비가 돼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어떤 국가도 대러시아 제재에 앞서 일본과 진지하게 상의하지 않았고, 둘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이 대러시아 제재의 원인이나 동기가 됐지만, 우크라이나는 일본 사회 내 여론의 변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별다른 공감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공개적으로 대립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자의적으로 조용히 제재를 철회하는 방법을 선호할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시나리오를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서방에 퍼져있는 생각과 달리 러시아는 제재 때문에 특별히 불편을 겪고 있지 않다. 그런 까닭에 제재를 조용히 철회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모종의 양보를 할 입장은 아니다.

다른 나라가 규정한 규칙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자주성을 표방하며, 오늘날 국제 사회의 주 조정자 역할을 하는 미국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러시아 대외정책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서방의 제재는 크게 방해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서방(미국)의 규칙에 굴복하지 않는 러시아의 능력을 오히려 인정하는 꼴이 된다. 따라서 러시아의 관심은 실질적으로 제재를 희석화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제재를 철회하는 데 있다. 그렇

게 될 경우, 철회 그 자체만으로도 주요 지정학적 경쟁자에 대해 러시아가 대외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일본은 자국의 국제적 명성 때문에 중국과 비교해서 자신들이 좀 더 국제적으로 중요한 국가임을 러시아로부터 인정받기 원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그럴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미국 및 서방과의 대립에서 중국과 반(半)동맹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국제안보 영역의 협력을 보면, 현재 이 영역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갖는 공통의 이해관계는 그다지 많지 않다. 오늘날 일본은 이 영역에서 두 가지 큰 걱정을 갖고 있는데, 두 가지는 주변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정치적 활동성이 증가하는 사실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다. 이 두 가지 근심거리는 공식적으로나(최신판 방위백서의 주요 주장만 봐도 충분하다), 나아가 비공식적으로나 일본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두 가지 고민거리 모두에서 러시아와 행동을 일치(공동 조치는 말할 것도 없고)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러시아에게 중국은 서방과의 대치 상황에서 유일하지는 않더라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파트너-동맹국이다. 그런 까닭에 러시아는 중국이 남중국해 및 동남아 국가들과 그리 달갑지 않은 행동들을 할 때도 그 행위를 눈감아 줄 준비가 돼 있다. 더욱이 당연히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가 충돌할 개연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세대 정치인들이나 걱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 문제를 보면, 북한의 핵 야망에 대해 내부적으로 저항이 있고, 러시아 국경에 추가

적인 불안 요소가 발생하는 것이 싫다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 취하는 미국의 극단적 성명과 행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러시아로서는 극히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최근 러시아와 일본의 협력은 테러, 마약거래 및 조직적 범죄 집단 활동의 공동

퇴치,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관리 활동 등에 관한 일반적인 공동 선언들에 국한됐다.

올해 러·일 관계가 처한 상황은 상술한 바 같다. 러시아와 일본 당국이 그들에게 새로운 의의와 활력을 더해 줄 새로운 의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시간만이 말해 줄 것이다.

- 비탈리 스빗코(V. G. Shvydko) IMEMO 일본경제·정치 부장
- 원제: РОССИЙСКО-ЯПО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ПОИСК НОВЫХ ОРИЕНТИРОВ
- 번역: 이정화(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

# 러시아의 대(大) 유라시아 정책 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

예브게니 카나예프

---

〈초록〉 본 논문은 러시아연방의 새로운 지정학적 우선 전략인 대(大)유라시아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적 대응방법을 살펴본다. 필자는 ARF의 활동 성과와 러시아 동방 회귀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면서 대(大) 유라시아 안보협력시스템 구축에 있어 ARF의 경험과 잠재력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같은 결론은 러시아로 하여금 ARF의 제도적 잠재력 활용 측면에서 ARF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키워드〉 러시아,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안보, 협력, 유라시아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이하 ARF-역자)은 아태 지역의 국제 정세를 모니터링하고 역내 안보 위협 완화에 대한 합치된 접근법을 지향하는 대화의 장이다. 비록 활동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지만 ARF는 유라시아 공간의 안보 시스템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며, 근시일 내에 새로운 초(超)과제를 얻게 될 수 있다. 오늘날 유라시아는 양극체제의 영향력 하에 있으며, 양극체제는 당분간 국제 정치를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sup>1)</sup>

유라시아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러시아연방의 우선과제는 이 같은 시나리오

---

1) S.카라가노프(2016) 동방에서 서방으로, 혹은 대 유라시아. 글로벌 정치 속 러시아. 10월 25일. URL: //http://www.globalaffairs.ru/pubcol/S-Vostoka-na-Zapad-ili-Bolshaya-Evraziya-18438 (참고일: 2017년 9월 4일)

를 환영할 것이다. 이는 ARF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을 강화하려는 논리에 객관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필자는 러시아의 대 ARF정책을 분석하고, 포럼 활동 참여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 사항과 그 정책의 주요 방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ARF의 활동성과를 분석하고, 포럼 의제 쇄신을 위한 여러 시도를 평가한다. 러시아연방 정책 중 유라시아 방향성 강화라는 맥락에서 러시아 동방 회귀 정책에 대한 내용 변화를 검토한다. 그리고 유라시아 공간 내 안보협력시스템을 구축하려는 ARF의 잠재적 기여와 같은 구체적 요소들을 정의한다.

### ARF 내 러시아 관심 요소와 정책 방향

러시아의 ARF 참여에 있어서 러시아 정부의 주요 관심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관심 사항은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ARF의 지향성이다. 아태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상의 대규모 위기는 시나리오를 막론하고 러시아가 갈등에 휘말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태지역 안보위기는 러시아 지도부가 아태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극동을 개발하려는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ARF는 러시아와 많은 아태지역 플레이어들 간 상시적 의사소통 채널이다. 협력은 컨센서스 모색과 주권국 내정 불간섭을 지향하는 아세안의 원칙들을 기반으로 실현된다.

셋째, ARF 참여는 역내 정치 및 안보의 다극성 구축에 기여하려는 러시아연방의 노력에 부합한다. 역내 안보 위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ARF는 중립적이며, 탈이데올로기적 바탕에서 회담들을 개최한다. 러시아는 ARF 등 아세안 중심의 다자간 포맷 회담에 참여하며, 회담 의제 설정에서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을 지지하고, 지역 분열 조짐을 억제한다.

러시아가 다자간 아태지역 안보 대화에 구체적인 관심을 보인 것은 1980년대 중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정표가 된 것은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아태 지역 안보 현안논의를 위해 1986년에서 1988년 사이에 추진한 다자외교기구 구성에 대한 이니셔티브들이다. 소련붕괴 후 러시아 독립 초기에 실시한 대외적 조치들이 아태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스스로를 아태 지역 개발 어젠다를 설정하는 역내 주요국 중 하나로 인식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1993년 신규 회원국 가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자 APEC의 결정은 러시아에 있어 달갑지 않은 뜻밖의 일이 됐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대안적 방향에 기반을 둔 정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지향성은 대화 파트너국들이 참가하는 기존의 외무장관확대회담을 기반으로 역내 다자간 안보 대화의 장을 구축하려는 실질적 행보에 착수한 아세안의 반응을 이끌어냈다. 아세안은 역내 전략적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많은 참가국들을 중대 사안 논의에 끌어들이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때문에 아세안은 해군무기 공급 등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왔던 옛 초강국의 계승자인 러시아를 이러한 대화로 끌어들이었다.

ARF에 참여하게 된 러시아는 국제 테러리즘

과의 전쟁, 자연재해 및 인명 피해 해결,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같은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집중했다. 2014~2017년 동남아 지역에서 국제 테러리즘 위협이 심화되고, 지역 국가들이 그 위협 완화를 위한 러시아 참여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러시아와 ARF 회원국들 간 협력에서 반테러 요소가 추가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sup>2)</sup>

그러나 이러한 계획들은 ARF가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 도구인 초 과제를 얻게 될 때만 실현 가능하다.

## ARF, 위기와 쇠퇴 시도

ARF의 형성은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아태 지역이 직면한 근본적 변화에 기인했다.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안보 대화기구의 구축 필요성은 분명했고, 이를 확인해 준 것은 유럽안보협력회의와 같은 아시아안보협력회의를 구축하자는 소련과 호주, 캐나다의 제안들이었다. 이러한 제안들에서 나온 공통적 주장은 유럽의 다자외교 경험이 아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에 대하여 실질적 이행에 나선 것은 아세안이었으며, 여기에는 동기 부여가 된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 아세안은 변화한 국제 환경조건 하에서 아태 지역 내 미군 주둔을 유지하고, 중국 정책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중국이 영해 및 접속수역법(Закон о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м море и

прилежащей зоне)을 채택한 1992년 2월 이후 특히 심각하게 요구됐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은 지정학적 지역 발전 패러다임을 가능한 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아세안에는 확대외무장관회의와 같은 관련 인프라이기 있어서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많은 참가국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대화의 장을 만들 수 있었다. 아세안 내 확대외무장관회의의 회담 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담 주제를 안보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기술적 문제에 불과했다. 아세안은 캄보디아 사태를 해결함으로써 국제적 입지를 제고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 규모의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 실질적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은 중립적 회담 의제를 지향하고 군사블록화를 거부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모두는 아니더라도 태평양 국가 다수와 그 너머의 국제 플레이어들을 다자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이상적인 후보가 됐다.

전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절대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참여하는 정례적인 역내 안보위협 논의라는 측면에서 ARF의 활동이 중요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ARF가 그러한 주요 위협을 완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가장 극명한 예가 북한이 ARF 회의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는 사실이다. 또한, ARF는 아세안 파트너들 간의 이익을 조정하는 측면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하노이 ARF 회의에

2) (2017) Rusia Sepakat Bantu Indonesia Bungkam ISIS di Asia Tenggara. CNN Indonesia. 9 Agustus. URL: <https://www.cnnindonesia.com/internasional/20170809155634-106-233529/rusia-sepakat-bantu-indonesia-bungkam-isis-di-asia-tenggara/> (참고일 : 2017년 8월 29일)

서 힐러리 클린턴이 중국이 항행의 자유를 위반한다고 비난한 후 오히려 남중국해 분쟁은 격화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중요한 점은 아세안이 ARF 활동 조정자로서 신뢰 조치와 예방 외교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지 못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아세안이 ARF 활동의 개념적 뼈대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ARF뿐 아니라 아태 지역의 협력을 기반으로 안보 시스템 전체를 조정하는 아세안에 대하여 비판적 질문을 제기하게 됐다.

ARF를 쇄신하려는 아세안의 시도 중에는 아세안이 운영하는 ARF와 비슷한 다자 외교 기구의 활동 기반인 '아세안의 길'을 수정하는 일도 포함됐다. 이는 '마지막으로 준비된' 참가국의 속도에 맞추어 결정을 내리거나 이행하지는 합의 원칙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분명한 사실은 아세안의 이해관계가 세계화되고 있다는 점이며, 아세안이 아태 지역 너머의 공간에서 영향력 있는 플레이어로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지리적 이유로 인해 이러한 공간은 당연히 유라시아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아세안의 우선 과제는 동방으로의 회귀 전략을 진행시키고 있는 러시아의 향후 대 유라시아 형성 계획과 조화를 이룬다.

## 러시아연방의 동방으로의 회귀와 유라시아 프로젝트

2007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회담 준비작업과 더불어 시작된 러시아의 동방으로의 회귀는 이후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2000년대 초부터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 대한 러시아의 재해석 노력으로 이해되는 '소(小) 유라시아' 프로젝트가 생겨났었다.<sup>3)</sup> 조지아의 뒤를 이어 우크라이나와도 관계가 악화된 러시아는 이 프로젝트의 전망이 수년 혹은 수십 년 내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동시에 시작된 러시아와 서방세력 간 '신 냉전' 구도로 인하여 러시아는 추가적인 국익 수호 메커니즘들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 러시아의 아태 및 유라시아 정책 방향성 통합 필요는 더욱 커졌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전 세계에 '일대일로'라는 메가 전략을 발표했다. 2014~2015년 북한과 일련의 협력 협정을 체결한 러시아는 중국의 글로벌 야심 및 잠재력 심화를 고려하며 러시아의 정책과 중국의 전략과의 '합선' 위험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러시아는 대중 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다른 유라시아 플레이어들과 협력 확대를 필요로 하였다.

러시아가 찾은 해답은 유라시아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한 아태 정책의 '재가동'이었다. 이러한 의견은 러시아연방 대외 정책 구상에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의 토론에 반영됐다.<sup>4)</sup> 중요한 점은 러시아연방 현 대외 정책 구상이 이전 구

3) 참조 : Trenin D. (2017) Russia's Evolving Grand Eurasia Strategy: Will It Work? Carnegie Moscow Center. 20 July. URL: //http://carnegie.ru/2017/07/20/russia-s-evolving-grand-eurasia-strategy-will-it-work-pub-71588 (참고일 : 2017년 8월 25일)

4) S카라가노프(2017), '동방으로의 회귀에서 대 유라시아로', 글로벌 정치 속 러시아, 5월 30일. URL: // http://www.globalaffairs.ru/pubcol/Otpovorota-na-Vostok-k-Bolshoi-Evrazii-18739 (참고일 : 2017년 8월 19일)

상들과 비교했을 때 유라시아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sup>5)</sup>

그러한 파트너 중 하나가 아세안이다. 러시아에 있어 아세안의 가치는 아세안이 동남아 10 개국을 통합한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아세안이 아태 지역 다자간 안보 협력체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SCO<sup>6)</sup> 및 EAEU<sup>7)</sup>와의 관계 발전에 대한 아세안의 관심은 한편으로 러시아의 유라시아 및 아태 지역 대외 정책 방향과 일치하여 서로 간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아태지역 내 SCO 및 EAEU와 같은 유라시아 거대 플레이어들의 참여는 러시아가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아태지역 내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요소들을 보면, 러시아와 아세안이 아세안, SCO, EAEU 간 협력을 증대해 나가기로 결정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세안이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ARF 등 여러 대화 포럼이 이러한 구조로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이다.

## ARF와 대 유라시아 안보

아세안-SCO-EAEU 고리에 향후 EU가 합류한다면, 이는 대 유라시아를 포괄하는 제도적 출현이 될 것이다. 여기서 ARF는 지역에 국한

하지 않고 대륙 안보 시스템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적잖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ARF 구성국 중에는 아세안이나 SCO, EAEU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동북아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과 한국이 그러한 국가들이다. 분명한 사실은 일본과 한국이 제외된다면 그 어떠한 기존의 다자 안보 협력 구상도 가동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는 대륙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ARF 메커니즘들을 통해 합류하게 될 것이다.

유라시아가 글로벌 양극체제로 고착화 되어 감에 따라 유라시아 내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완화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아태 지역 다자간 대화채널이다. 그렇기 때문에 ARF가 북한과의 상시적 의사소통 채널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요성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다.

ARF의 역할을 통해 아세안-SCO-EAEU가 미국과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중요한 목표는 '냉전'의 모습을 띤 지금의 글로벌 대치 상태가 제도화, 고착화 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은 ARF와 아세안+8 외무장관 회담, EAS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 군사, 정상급 회담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이 가동 중에 있다. 아세안-SCO-EAEU 고리

5) (2016년 11월 30일 푸틴 대통령에 의해 승인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구상. 러시아연방 외무부. 2016년 12월 1일. URL: // [http://www.mid.ru/foreign\\_policy/news/-/asset\\_publisher/ckNNonkJE02Bw/content/id/2542248](http://www.mid.ru/foreign_policy/news/-/asset_publisher/ckNNonkJE02Bw/content/id/2542248) (참고일 : 2017년 9월 2일)

6) I-Rasyid F. (2015) Ke Jakarta, Sekjen SCO Bahas Peluang Kerja Sama dengan ASEAN dan Indonesia. RBTH Indonesia. 3 Desember. URL: // [https://id.rbth.com/news/2015/12/03/ke-jakarta-sekjen-sco-bahas-peluang-kerja-sama-dengan-asean-dan-indonesia\\_547193](https://id.rbth.com/news/2015/12/03/ke-jakarta-sekjen-sco-bahas-peluang-kerja-sama-dengan-asean-dan-indonesia_547193) (참고일 : 2017년 9월 2일)

7) Wahyuni N.C. (2016) Populasi Besar, Negara Eurasia Potensial Jadi Target Pasar. Berita Satu. 4 November. URL: // <http://www.beritasatu.com/makro/397159-populasi-besar-negara-eurasia-potensial-jadi-target-pasar.html> (참고일 : 2017년 9월 2일) ; (2016) Forum Kajian Kebijakan Luar Negeri : Prospek Kerja Sama Perdagangan Bebas dengan Eurasian Economic Union (EAEU). Kementerian Luar Negeri Republik Indonesia. 4 November. URL: // <http://www.kemlu.go.id/id/berita/Pages/Prospek-Kerja-Sama-Perdagangan-Bebas-dengan-Eurasian-Economic-Union.aspx> (참고일 : 2017년 9월 2일)

는 아태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 시스템이 늘 직면해 왔던 문제들인 미국과 아태 지역과의 사이에 ‘피드백’이 부재하다는, 그리고 미국이 일방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다.

아세안과 SCO, EAEU에 ARF와 아세안+8 외무장관회담, EAS가 연결된다면 참가국들의 실질적 협력 방향은 국제 테러리즘 해결이 될 것이다. 현실은 ISIS의 행동반경이 지역 차원이 아닌, 전 대륙이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준다. 이러한 위협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이에 상응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ARF는 유라시아 공간 내 안보와 협력에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 ARF가 쌓아 놓은 경험과 잠재력은 대륙 안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필수 옵션이 될 것이다.

## 결론

유라시아가 양극체제로 고착화 되어 감에 따라 대륙 안보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은 반드시 증대될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이 시스템에 대한 ARF 등 기존의 다자 회담 기구들의 대응을 요구할 것이다.

약 사반세기 역사 동안 ARF는 그 제도와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ARF와 그 활동의 조정자인 아세안은 많은 회담 참가국들 사이의 이해관계 조율과 통합 프로젝트 실시라는 경험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러시아연방의 국익에 부합한다. 러시아는 자국의 대외정치적 우선순위로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 입지를 제고하고 ARF가 갖춘 제도적 기회들을 기반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예브게니 카니예프(E. A. Kanaev) 역사학 박사, IMEMO 아태지역연구센터 수석연구원
- 원제: РЕГИОНАЛЬНЫЙ ФОРУМ АСЕАН В ЕВРАЗИЙСКИХ ПРИОРИТЕТАХ РОССИИ
- 번역: 강규은(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

# 통제 없는 핵무장: 러·미 회담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

알렉산드르 사벨리에프

---

2010년 러시아와 미국이 서명한 전략무기감축협정이 2011년 2월 발효됐다. 그 이후 핵무장 해제의 진전과 관련한 문제들은 러·미 회담의 어젠다에서 사실상 사라졌다. 우리는 최소 4년 연속 핵무기 통제 부문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활동이 약화(사실상 부재)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 차원에서도 두드러지는 추세다.

과거에는 활발한 협의로 그 공백들이 채워졌으며, 자국 정책을 재고한다거나 상대국 입장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하는 기회로 활용됐다. 심지어 소련이 미국과 모든 핵무기 협상을 중지했던 1983년 가을부터 협상이 재개됐던 1985년 봄까지는 준비 작업이 지속됐고, 학계를 위시한 양측의 비공식적 접촉은 크게 강화됐다.

## 짧은 역사

50년 동안 미국과 소련/러시아는 핵 군비 경쟁을 지양하고 주요 핵보유국인 양국의 핵 대결 수위를 꾸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낮추는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소련과 러시아는 레오니드 브레즈네프와 미하일 고르바초프 집권 시기에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집권 1기에 당시 2단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I)이 러시아의 안보이익에 효과적이고 유용하다고 의회를 설득하며 본 협정의 비준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후 2002년 START III 체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2010년 新전략무기감축협정에 서명해 핵무장 해제의 역사에서 한 획을 긋게 됐다. 집권 기간이 짧았던 유리 안드로포프(1982.11~1984.02)와 콘스탄틴 체르넨코(1984.02~1985.03)가 재임했던 기간에만 핵무기 통제 분야에서 뚜렷한 진척이라

고 말할 게 없었다.

미국의 경우, 리처드 닉슨부터 버락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이전 8명의 대통령 모두 자신의 업무 일지에 핵무장 해제와 관련한 성과를 쓰고 있다.

예를 들면 닉슨 시절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1, 1972년 미국과 소연방 간에 체결된 전략용 공격무기 제한에 관한 잠정 협정 + ABM 협정)이 체결됐고 ABM 부속의정서가 서명됐다(1974.07). 제럴드 포드는 브레즈네프와 역사적인 블라디보스토크 회담(1974.11)을 가졌는데, 회담에서는 1979년 지미 카터 집권기에 체결된 SALT-2의 주요 파라미터가 사전 조율됐다. SALT-2가 발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미국 양국은 협정 요구사항 이행에 대한 일방적 의무를 모두 수용했다.

로널드 레이건의 주요 관련성과는 종신 협정인 중거리핵미사일폐기조약(1987)을 체결한 것인데, 이 조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조지 부시는 양국이 전략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된 START I(1991)과 연결된다. 빌 클린턴은 START II(1993)에 서명했으며, 이는 SALT-2와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발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이 발효됐다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전략적 제휴는 크게 강화됐을 것이다. 본 협정이 다탄두 재돌입 탄도탄(MRV)을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전히 금지했기 때문이다.

조지 부시 재임 시절에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전략공격무기 규모를 (탄두 1700기~2200기) 더욱 낮춘 START 협정이 체결됐다. 마지막으로 오바마와 메드베데프는 2010년 新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체결했다. 본 협

정에 따라 양국은 전략적 핵무기 규모를 탄두 1550기로 대폭 줄여야 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러한 '전통'을 깨고 싶어할지 의문은 아직 유효하다. 어쨌거나 그 결론에 유리한 논거도, 불리한 논거도 많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새로운 관련 협정 체결 의지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러시아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하지만 진지하게 낙관을 갖기에는 러시아가 아직도 그 이유를 주지 않는 것 같다.

### 대화 중단의 원인과 새로운 협정들의 문제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은 핵무기 통제 부문에서 러·미 관계가 단절된 이유를 여러 가지로 꼽는다. 그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위기로 발생한 러시아와 서방 간 관계 악화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발생했다. 2013년 3월, 즉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1년 전에 러시아 연방 세르게이 이바노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러시아가 더 이상의 군축에 관심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 그는 그 이유도 함께 밝혔는데, 바로 러시아가 전략 핵무기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했고, 얼마 전에 도입한 새로운 전략무기 시스템 폐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논거는 2012년 2월 푸틴 대통령이 밝힌 것으로, 2010년에 조인된 New START 협정 다음 단계에서 제3의 핵보유국을 핵무장 해제 과정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다. 이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비롯해 몇몇 정부 인사들은 (협정이 지시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보다 대대적인 군축으로 인해 러시

아연방과 미국의 전략 공격무기가 제3 핵보유국들과 ‘비견될만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러시아가 미국과 핵무기 통제 분야에서 새로운 합의에 도달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인 중 하나는 미사일방어체계 문제다. 이 문제는 소련 시절에도 종종 발생했는데,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이 ‘전략방위구상(SDI)’을 제안한 이후 급격히 악화됐다. SDI 때문에 START I 협상 과정이 방해받고, 다른 핵무장 해제 관련 협정들까지 조인되지 못할 뻔했다. 미사일 방어체계 부문의 공동(러.미)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 시도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이 2002년 종신 협정인 ABM 협정에서 탈퇴하고, 자국과 동맹을 체결한 국가의 영토에 방어체계를 구축.전개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나토 동맹국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략 핵무기 군축 분야에서 새로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한다.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동맹국들의 핵무기 보유는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아나톨리 안토노프 러시아 국방부 차관이 밝힌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타격’ 구상 이행과 전략 재래식 정밀 무기 배치, 우주 무기 배치 전망, 유럽에 위치한 미국의 비전략적 핵 자산, 수많은 다른 불균형들을 ‘계산에 넣자’고 제안됐다. 그 중 다수가 2015년 말 푸틴이 승인해 지금도 유효한 러시아연방의 국가안보전략에 반영됐다.

전반적으로 향후 핵무장 해제 조치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소련이 1960년대 말 견지했던 입장을 떠올리게 한다. 소련의 입장은 대립각

을 세우는 양 진영 간 힘의 균형을 결정하는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자는 ‘동등한 안보’ 원칙에 응축돼 표현됐다. 이는 소련이 미국과 전략 핵무기 관련 협정을 체결할 때 다른 종류의 무기 불균형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여겼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물론 50년 전에 ‘보상’을 가져다주는 무기의 범주는 오늘날과는 다소 달랐다. 예를 들면 이러한 범주들에는 비핵 무기가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속하는 것은 미국의 나토 동맹국들이 보유한 핵자산과 유럽에 위치한 미국의 전진기지에 배치된 핵 자산이었다. 러시아는 이제 비핵 무기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며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미국과의 상호 이해를 모색함에 있어서 추가적인 어려움들과 함께 새로운 합의 달성에 의구심이 생겨난다.

## 우려할 문제

미사일 방어체계와 정밀무기, 기타 재래식 무기들이 전략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러시아의 우려와 걱정이 원론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다. 바로 핵무장 해제 과정을 지속하겠다는 정치적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러한 우려들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러시아는 상기된 우려들이 무시된다면, 보다 대적인 핵군축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전략 공격무기와 관련한 그 어떤 협정도 전략 운반체 및 탄두의 규모 축소 이후 남은 무기의 총 수량을 동일하지 않고 다르게 설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사실은 체

결 당사국의 평등 원칙에 근거하고 협정 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국제 조약의 의미 자체에 위배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된 우려들을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들이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중후반 소련은 SDI구상과 유럽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그런 까닭에 유럽의 중거리 핵미사일, 전략공격무기, 방위 및 우주 분야 등 세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회담을 진행하자는 ‘일괄’ 타결안이 선택됐다.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는 협정이 동시에 체결돼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됐고, 미국도 원칙적으로 이 조건을 거부하지 않았다. 사실 소련은 이런 입장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했다. 먼저 유럽에 배치된 ‘핵 자산’의 개념은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만 제한됐고, 전투기는 회담 주제에서 배제됐다. 이후 소련은 기존의 일괄 타결 협상 중 탄도 및 순항 미사일에 대한 협정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고, 그 결과 1987년 종신 협정인 중단거리미사일폐기조약(IRINF)이 조인됐다.

소련은 START I 협정의 대다수 조항들이 조율될 때까지, 오랫동안 전략공격무기와 전략방어무기를 결부시켰다. 이 연결고리는 관련된 공식 성명뿐 아니라, 소련 회담 대표단의 구조를 통해서도 강화됐다. 소련 지도부는 앞서 언급된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는 단일 대표단을 조직했다. 방위 및 우주 관련 회담은 단일 대표단 하의 개별 그룹에서 진행됐다. 미국은 회담에 개별 대표단 두 팀을 파견했다. 한 팀은 START I 협정문을 마련했고, 다른 한 팀은 방위 및 우주 부문의 협의를 진행했다. 방위 협상은 실패할 개연성이 높았지만 START I 협정

은 사실상 준비가 완료됐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어쨌거나 소련은 개별 협정에 서명했고, START I의 이행 조건인 ABM 협정을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경험에 입각해 보았을 때 구체적으로 ‘우려할 문제’는 미사일방어체계와 장거리 정밀 무기, 우주 무기를 포함하는 안보 현안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협정을 체결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가 2017년에 발표한 글로벌 전망 보고서 ‘세계 2035’의 저자들 또한 그러한 가능성을 인정한다. 사실 이 시나리오는 해당 기간 동안 네 가지 군사·정치적 상황의 전개 가능성 중 가장 개연성이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구체적인 ‘우려’의 쟁점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미사일방어체계와 정밀무기, 우주무기가 러·미 간 전략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대략이라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한 가지 흥미로운 상황에 대해 말해보겠다.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영향력 평가에 찬성하는 러시아인들은 그 이유를 모르지만 대공방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전략공격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은 전반적인 힘의 균형 차원에서 고려돼야 하며, 이 수단들이 ICBM, 전략폭격기, SLBM 등 3대 전략무기라면 더욱 그렇다. 이쯤 언급해두고 싶은 사실은 대공방어 문제를 배제하는 것은 전략적 균형을 강화하려는 노력과는 다소 다른 이유로 설명된다는 점이다.

## 우주 무기, 정밀 무기, 미사일방어체계

러시아 지도부에 따르면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무기 중 협정 체결의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우주 무기다. 주지하다시피 문제는 그러한 무기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 무기는 현재 전략적 균형에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1980년대 중후반 소련이 미국의 SDI와 대립각을 세웠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도 ‘공격용 우주 무기’가 조만간 개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장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 회담 참가자들은 공격용 우주 무기 시스템은 적어도 20년~25년 후에나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약 30년이 흘렀지만 이러한 무기(우주 레이저, 우주 전자기 발사기, 기타 독특한 무기 시스템)는 전혀 없다. 신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향후 20년~30년 내 우주 무기가 미국 등 여러 국가의 전략 무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주장할만한 타당성 있는 근거도 아직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주 무기의 가격과 효율성 문제, 무기의 취약성, 자국 내 반대 세력과 개별국가 및 국제 사회 전반의 대응 가능성 등의 문제가 논의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주 군사화를 제지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다.

우주 분야에서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는 ‘무기’와 ‘군비’라는 용어 자체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힐 필요가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2008년 군축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2014년에 개정됨) 우주 공간의 무기 배치, 우주 물체에 대한 무력 사용 또는 무력 사용 위협 방지에 대한 조약의 초안이

상기한 협정의 기반이 될 개연성은 낮다고 본다. 이 초안에는 우주에서의 무기 배치를 예방한다는 내용만 담겨있다. 우주 무기 개발이나 우주에서의 무기 실험 금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지구상에 배치돼 우주 물체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본 협정의 초안에 대한 불만들을 끝도 없이 제기할 수 있지만, 모든 당사국들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보인다면, 중요한 문제는 우주 무기가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이에 대한 제한이나 전면 금지에 대한 검증된 협정 체결 자체가 가능한 일인간다.

이와 못지않게 흥미로운 문제는 장거리 재래식 정밀 무기와 전략적 균형에 대한 그 영향력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기로 지상 및 공중 발사 순항미사일과 재래식 탄두가 탑재된 ICBM, 미래에 개발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초음속 항공 미사일 시스템 등과 같은) 기타 무기 시스템을 꼽는다. 통상 이러한 무기들이 전략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직까지 평가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략적 안정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무기 시스템들을 공격력 강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들은 위력 면에서 핵무기에 비교되지 않는다. 정밀타격 시스템들은 여러 이유로 인해 선제공격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다.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ICBM에 대해 말하자면, 그 명중률은 핵탄두가 탑재된 ICBM보다 최소 10배는 높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테면 지하격납고와 같은) 은폐된 표적

을 공격할 수 없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현대식 ICBM은 수십 km의 목표물 오차범위를 보인다. 은폐된 표적을 재래식 탄두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목표물 오차범위가 수 km 이하여야 하며, 오늘날 무기 시스템의 발전 정도로 미루어 보아 이 목표는 달성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아니다. 침략국이 상대국에 대한 기습 공격과 다수의 핵무기를 파괴하겠다는 목적으로 정밀무기(재래식 탄두 ICBM)를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침략국은 대규모공격을 계획할 수밖에 없다. 양측이 미사일 경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러한 공격은 눈에 띌 수밖에 없다. 공격을 받는 측이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입수한 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전혀 없다. 이처럼 공격 대상에게 날아오는 ICBM의 탄두가 핵탄두인지 재래식탄두인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분명한 것은 이후의 보복은 여러 가지 파장을 불러일으킬 핵무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논거가 하나 더 있다. 러시아나 미국이 재래식 탄두가 탑재된 ICBM을 다량으로 배치하겠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양국은 자국이 갖춘 전략적 핵 수단을 통해서 이를 실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New START 협정의 효력이 유지되고 연장된다면 (유효기간 2021년, 연장될 경우에는 2026년), ICBM은 종류를 막론하고 전략적 운반수단(각국 700기)으로 계산될 것이다. 협정 차원에서 재래식 탄두가 탑재된 ICBM을 계산에서 빼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 운반체를 구축해서 이 무기 시스템이 기존 협정의 효력 범위 밖에 있다는 사실

을 증명해야 한다. 러·미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런 작업은 현실 불가능하다. 누군가의 일방적 행동으로 이 협정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밀무기 중 하나인 순항미사일에 대해 말하자면, 우선 무엇보다도 적잖게 중요한 문제를 미리 밝혀야 한다. 가동 중인 New START 협정에 따라 양측은 장거리 핵 순항미사일(사거리 600km이상)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다시 말해 러시아와 미국은 이 미사일이 전략 무기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공중 발사용 핵 순항미사일을 운반하는 중(重) 폭격기들은 실제로 몇 기의 미사일을 운반하든지 하나의 운반체와 하나의 탄두로 계산된다. 해상 발사용 순항 미사일은 본 협정 대상에서 아예 배제됐다. '장거리 핵 순항미사일'이라는 용어는 심지어 협정문에 없다. 쉽게 말해 러시아와 미국 양국은 이러한 핵 무기시스템이 전략적 균형을 해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런 까닭에 이러한 무기들을 협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왜 장거리 핵 순항미사일이 양측의 전략적 균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러시아와 미국이 상기 협정에서 무엇을 합의했는지, 그렇다면 유사한 재래식 무기 시스템은 전략적 안정을 해친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더욱이 일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래식 탄두가 탑재된 순항 미사일은 아주 잘 은폐된 표적인 전략 공격무기를 파괴할 능력이 안 된다.

러시아는 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전략적 안정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실제로 입증된 증거보다는 불확실성이 훨씬 높다. 무엇보다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논할 때면, 많은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정상적인 안보

인식과는 괴리가 큰 다소 이상한 논리를 따른다. 예를 들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가 러시아의 전략적 잠재력에 '위협을 조성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은 러시아가 탄도미사일로 공격을 가한 이후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탄도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는 미사일방어체계가 이들을 위협하지 않는다. 그리고 미사일방어체계가 누군가의 핵 잠재력에 위협을 조성한다는 주장은 공사 인부의 안전모가 그의 머리로 떨어질 수 있는 벽돌을 위협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미사일방어체계를 반대하는 진영은 이에 대해 나름의 반박 논거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미사일방어체계가 적국이 상대국의 전략 시설에 선제 타격을 가한 이후에야 가동될 것이라고 한다. 그런 까닭에 보복 타격의 위력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 같은 생각은 다분히 추상적이고, 상식이 결여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방어체계의 구축과 배치를 비난하는 반대 진영의 기본 논리로 작동한다. 이러한 행위는 군사적 우월성을 성취하고 핵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간주된다. 그리고 전략적 안정에 대한 기본 구상은 선제공격의 파장과 상대방의 보복 타격을 무력화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마련된다.

미사일방어체계가 전략적 안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논쟁은 60년이 넘도록 이어오고 있고, 그렇게 때문에 방대한 출간 자료에 서술된 모든 근거를 제시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논쟁은 주로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소련과 러시아에서는 대다수 전문가들이 하나의 관점을 견지했다. 즉 미사일방어체계의 개발은 특정 위기 상황에서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높이고, 여러 영역에서 전략 군비 경쟁을 심화시키며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의견이다. 통상적으로 논의 대상이 된 것은 미사일방어체계의 효율성 평가와 신규 시스템의 배치 기간이었다.

이제 '전면적 핵공격'에 대한 계획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미국이 이러한 공격 이후 어떤 수단을 통해서 러시아의 '보복 타격'을 무력화할 것인지 살펴보자. 먼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을 보자. 미국의 주요 과제가 러시아의 보복 타격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미국은 가장 먼저 국경 인근 지역과 자국 중심부에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했을 것이다. 이 경우, 적어도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소 10개~12개 지역에 요격미사일을 수십 기씩 배치해야 한다. 잘 알고 있듯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프로그램조차 존재하지 않으며, 유사한 제안이 단 한 차례도 나온 적이 없다. 2017년 말 무렵에 미국 영토 내에 지상발사요격미사일 GBI가 총 44기 (알래스카 40기, 캘리포니아 4기) 배치될 것이다. 2025년에는 이러한 요격미사일의 수가 56기까지 늘어날 계획이다.

여기에서 (미국이 2002년 탈퇴한) ABM 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 ICBM의 탄두를 격추시킬 수 있는 요격미사일의 개수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ABM 협정에 따라 러시아와 미국은 최대 요격미사일 200기를 (두 군데 지역에) 배치할 권리가 있었고, 1974년에 조인된 그 부속 의정서에 따르면 한 지역에 최대 100기까지 배치할 수 있었다. 즉, 미국은 ABM 협정에 명시된 선을 아직 넘지 않았으며, 당분간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미사일방어체계 반대파들이 이

해하는 것처럼 전략적 균형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가 크게 우려하고 있는 바는 유럽에 배치된 미사일방어체계다. 중동과 일부 아시아 국가에 배치된 방어시스템도 소홀히 다룰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들은 배치 지역 뿐 아니라 기술 및 기술적 성격 측면에서도 전략 시스템이 아니다. 물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중 스탠다드 시리즈와 사드 시스템, 기타 방어체계들 모두 전략적 탄도미사일을 처리할 수 있는 특정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스템이 처음부터 전술한 과제에 맞춰 개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ICBM의 탄두가 요격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우연일 것이다. 앞서 언급된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전략미사일(탄두) 요격 실험이 단 한 차례도 실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보복 타격으로 날아오는 전략미사일을 요격하는 수단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게다가 미사일 요격시스템이 배치된 지리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시스템은 러시아의 전략적 잠재력을 절대로 위협할 수 없다. 이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2차원에서 3차원적 지리로 눈을 돌려야 한다. 쉽게 말해 세계지도가 아니라, 지구본을 봐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다소 다르게 눈에 들어올 수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가는 최단 경로는 암스테르담이나 파리를 통과하는 길이 아닌, 북극을 경유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 러·미 관계 개선의 길, 새로운 전략공격무기 협상

러시아와 미국이 전략공격무기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데 심각한 군사·전략적 방해요인은 없다. 정밀 무기와 우주 무기가 양측의 전략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력은 분명 과장됐다. 조만간 그러한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최소화 될 것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약화된 전략적 무기만 가지고도 치명적인 보복 타격을 가할 수 있는데, 미국의 미사일방어프로그램들은 러시아의 이 같은 능력에 대한 영향력 측면에서 볼 때, 극히 제한돼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공격은 매우 의심스러운 전략적 구상임에도 불구하고, 안보 및 전략적 균형 강화 방안에 기본 기저로 작동하고 있다. 미사일방어체계는 이미 많은 실험에서 실패를 경험했고, 타격 방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상대방은 충분히 이를 피할 수 있다. 따라서 상식을 갖춘 국가 지도자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같이 매우 불안정한 미사일방어체계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회담을 가로막는 정치적 장애요인에 대해 말하자면, 이러한 방해요소는 러·미 관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서방 간의 관계 전반에도 많이 축적됐다. 이러한 요인들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여기에는 막대한 노력과 긴 시간이 요구될 것이다. 보다 대대적인 전략공격무기 감축 회담은 양측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거나 혹은 관계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보인 다음에나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핵을 보유한 각 국가에게 전략 탄두를

최대 1000기까지만 보유하도록 새로우면서도  
파격적인 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이 목표  
가 성공을 거둘 경우 새로운 협정은 다른 영역  
에서도 상호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는 모범적인 협력 사례가 될 수 있다.

러시아가 우려하고 있는 문제들을 포함해 안보  
문제의 모든 스펙트럼을 폭넓게 협의하는 작업  
을 시작하는 행위는 앞서 제기한 목표의 달성  
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 알렉산드르 사벨리에프(A. G. Saveliev), IMEMO 수석연구원
- 원제: Ядерное вооружение без контроля (РОССИЯ В ГЛОБАЛЬНОЙ ПОЛИТИКЕ)
- 번역: 강규은(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

#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정치체제적 대응 (I)

---

바실리 미헤예프 외 (토론)

---

최근 몇 년 간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정치체제 변화 비교분석에 관한 토론 자료를 공개한다. 토론 참가자들은 중국, 대한민국, 북한, 일본, 아세안(ASEAN) 국가 전반, 또한 태국과 베트남의 경험을 검토했다.

2017년 2월 28일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지 편집부에서 진행된 원탁회의의 자료를 독자들에게 제공한다. 토론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토론은 두 개 호에 걸쳐 게재된다.)

## 라보프

이번 원탁회의의 주제는 여러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다양한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 도전의 영향 아래 겪고 있는 정치체제상의 중대한 변화들과 관련해 정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의 형태 또한 다양합니다. 대한민국처럼 정치 엘리트 전반이 예기치 못하게 전대미문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국처럼 변화의 과정이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처럼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안으로는 극히 복잡하고 모순적인 조정이

일어나는, 즉 빠르게 변화하는 삶의 조건에 정치체제가 적응하고 있는 제3의 경우도 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역내 국가들의 정치체제에는 또 다른 변화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성질과 방향은 어떠한가?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정치체제가 비록 복잡한 궤도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어떤 서방식 표준모델을 향해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변화가 겉치레에 불과하며 이들 시스템의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

음을 의미하는가? 개별 국가들의 변화는 어떤 특징을 갖는가? 그리고 진행 중인 변화들의 결과 이 지역이 미래에 조건적으로 민주주의 연합과 독재주의 연합으로 분열될 가능성이 있는가? 먼저 지역 전반의 상황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후 국가별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 마지막에 종합적 결론을 내 보고자 합니다.

### 다비도프

아태지역의 정치적 진화 전망은 이 지역에 위치한 개발도상국 및 신흥공업국들과 이들을 대표하는 체제들이 정치적 자기발전을 할 수 있는냐는 중요한 문제와 결부돼 있습니다.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경제 잠재력의 끊임없는 증대는 아직 이에 상응하는 상부구조, 즉 정치관계의 성숙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존재의 조건이 충분히 편안해서 역내 국가 지배층이 더욱 진지한 '정치적 제' 형성에 관해 심사숙고하도록 일깨우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근거는 이러합니다. 지난 독재정권으로부터 전반적으로 벗어났고, 사회경제적 과제들을 해결하고 있고, 역내 제도의 구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내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없고, 대외적 도전은 최소화됐습니다. 이리하여, 급속한 산업발전의 길에 들어섰던 국가 대부분은 주요 특징에서 강력한 경제 프로세스 운영 메커니즘과 '좁은', 즉 유연하지 못한 정치체제와 덜 발전된 시민사회를 가진 '경제 기계'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장기적 지속은 앞으로 국내 발전에 정치적 '제한기'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물론, 아태지역에 심각한 대외정치적 긴장 및 다른 긴장이 갑자기 나타날 경우 역내 국가들의

적절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도 잠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 미헤에프

시장의 발전, 통합과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권위주의와 '아시아적 가치'에 대해 이들이 세계 공통 기준에 맞게 변화되고 희석돼야 한다는 압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완전한 보편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나라들 사이에 국가적 차이와 역사적 차이는 존속될 것입니다.

### 레온티에바

국가의 정치구조 모델은 경제여건에 좌우되는 면이 적지 않습니다. 아태지역 국가들의 경제여건은 서로 매우 이질적입니다. 그러나 경제통합의 방향은 이러한 여건의 상대적 균등화를 지향합니다. 20세기의 유럽 통합 과정은 국제조약, 경제법제 표준화, 공동 통화정책 조건(유럽의 로마조약, 마스트리흐트 조약) 마련을 기반으로 한 경쟁조건 균등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시아-태평양의 경제활동 여건 균등화는 일부는 직접 투자를 통해, 일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부터 시장접근 장벽을 낮추고 있는 덕분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의 균등화는 양자 간 협정 및 다자간 협정 수준에서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시경제 수준에서는 무역, 직접투자, 기술 및 경영노하우 이전, 노동이민 및 초국가적 체제에서의 금융 시장 작동을 통해 더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비노그라도프

현재 이 지역 정치체제 분석에서는 보통 민주주의 경향은 물론 독재주의 경향을 구분합니다. 이러한 경향 사이의 관계는 민주화, 혹은 경쟁의 개념으로도 묘사할 수 있는데, 10~15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입니다.

## 라보프

이제 이러한 가정들을 특정 국가들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역내 가장 큰 국가인 중국부터 시작해 보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사건들과 중국의 향후 현대화와 관련된 문제들, 마지막으로 집권당 중국공산당의 제19차 공산당 전당대회가 가까워 오는 것은 중국 정치체제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 로마노프

세계, 특히 주요 국가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말할 것도 없이 중국 정치체제 발전 전망 논의에 영향을 미칩니다. 2017년 초 '홍치문고(紅旗文稿)'지에는 2016년 중국에서 있었던 핵심적인 사상·이론적 논의들에 관한 비평이 실렸는데, 이 중에는 '서방식 민주주의의 위기' 논의도 언급됐습니다. 서방식 민주주의가 '무질서한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만큼, 중국 전문가들은 서방식 민주주의의 '허위성', 정권교체 및 삼권분립 메커니즘의 심각한 단점, 선거가 국가 발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치게임'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논의 참가자들은 '정치적 교훈을 얻을 것'과 개혁기간에 선포된 '발전 - 불변의 원칙'과 '안정이 모든 것을 압도한다'라는 구호의 유효성을 더 깊이 인

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이 '인류 보편적 가치'의 요소로서 전 세계에 제안한 글로벌리즘 이념의 패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브렉시트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국민투표에서 나라의 미래에 관한 결정을 전 사회에 강요할 수 있는 실례를 목격했습니다. 홍치문고에서는 이 사건들을 두고 '서방식 민주주의체제의 한계에 대한 집중 폭로', 그 '비합리성'과 '근시안성', 사회의 원심적 경향들에 자유를 주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위기도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2006년 영향력 있는 사회연구가 유케핑은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라는 책을 발표했는데, 이 책은 중국 정치체제 개혁을 향한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0년이 흘러 2016년 가을 권위 있는 정치학자 장슈화(Чжан Шухуа)는 서방이 민주주의를 '나쁜 것'으로 만들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색깔 혁명'의 도움과 국제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깃발 아래에서 민주주의 진전은 국제정세의 급격한 악화, 지정학적 충돌의 첨예화, 민족 간 긴장과 종교 간 긴장 증가, 정치적 혼돈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장슈화(Чжан Шухуа)의 의견에 따르면, '서방식 민주주의의 본질이 변화해 나쁜 것이 됐으며', 잘못된 서방 정치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비용'은 미국 대선 캠페인 결과나 준비 중에 있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관한 의식만이 아니라, 대만과 홍콩에서 일어난 '지역적' 성격의 사건들과도 관련해 중국 당국을 불안하게 합니다. 대만에서는 2014년 3월 청년들이 당시 집권당인 국민당이 대륙 중국과 서비스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항거의 표시로 입법원(국회) 건물을 점령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협정의 내용이 불투명하고 대만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정 기준은 무산됐으며, 청년층의 '해바라기 운동'은 중국과 대만의 경제적 대화에 큰 충격을 가했습니다.

대만의 민주주의는 기능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경제발전에 이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의 GDP는 2015년에는 0.8%, 2016년에는 1.5% 성장했습니다. 중국 개혁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된 '대만의 기적'은 과거에 남았고, 대만은 더 이상 '아시아의 용'이 아닙니다. 경제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있고, 정치적 분쟁은 상태를 심화시킬 뿐입니다. 집권당 교체는 매번 노선 교체로 이어지고, 이는 투자자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당은 대만보다 발전 속도가 훨씬 빠른 중국과 경제적으로 가까워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대만 섬 독립에 찬성하는 민주진보당(DPP)은 '해바라기 운동'의 손을 빌어 이 노선을 묻어버렸고, 미국과 경제적으로 가까워지기 위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참여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트럼프의 TPP 탈퇴 결정은 대만의 모든 계획을 허물어버렸습니다.

2016년 DPP 후보가 총통선거에서 승리한 후 양안 간의 상호 이해는 더 적어졌습니다. DPP는 '하나의 중국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각자 한다'는 국민당의 '92공식'의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중국 분석가들은 DPP가 중국 문화를 밀어내고 대안적 역사기억을 만들어 대만 독립을 위한 토대를 준비한다고 생각하며 DPP의 활동에 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륙 중국이 '대만 민

주주의의 경험'을 연구해야 한다는 대만의 모든 호소는 위선적이고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우산 혁명'이라는 명칭을 얻은 2014년 가을의 홍콩 대학생 시위는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최악의 우려를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정치적 저항의 결과로 분리주의 세력이 활성화된 것이죠. 처음에 대학생들은 홍콩 행정장관 선거 시스템 민주화를 요구하며 나섰습니다. 중국 당국은 타협할 각오가 돼 있었으나, 홍콩의 민주주의자들은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선거개혁 문제는 결정되지 못한 채로 남았습니다. 중국은 홍콩에서 '단계적' 민주화를 추진하고, 정치와 사회 간에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통해 사회적 불만의 온도를 낮출 생각이었습니다.

홍콩 '우산혁명'의 물결에서 2047년 영토 지위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여론을 준비하는 세력들이 등장했습니다. 1997년에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됐을 때, 중국은 50년 동안 사회제도를 바꾸지 않고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 원칙의 유효기간 종료는 심지어 홍콩의 '체제'가 사라지더라도 '일국'은 유지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홍콩의 일부 열성분자들은 이 날짜를 기회의 창구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중국은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 지지자들은 홍콩 주민들도 30년 후면 사회주의를 건설해야만 할 것이라며 겁을 주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중국 신문 '인민일보' 해외판에는 '대만 독립' 운동과 '홍콩 독립' 운동은 닮아 있는데, 두 운동은 하나의 막다른 골목으로 향하

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자유의 깃발 아래 국가에 가난을 가져오고 국민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국양제' 원칙은 홍콩의 번영을 위한 전제조건을 만들어 주며, '92공식' 차원에서 대만은 자국 발전에 힘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지만, 독립 지지자들은 사람들의 이익을 희생하는 쪽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2016년 가을 두 홍콩 의회선거 승리자의 추문이 중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들은 의원 선거식을 중국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과 홍콩 독립 선언을 동반한 익살극으로 만들었습니다. 반중국적 정체성의 조성은 늘어나는 경제 문제와 함께 대륙의 중국인들에게 있어 홍콩과 대만의 '민주주의의 등대'로서의 매력을 완전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총체적인 중국적 정체성 파괴를 가져올 수 있는 서방식 민주주의 모델의 해악성에 대해 어렵지 않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적 애국심과의 충돌에서 민주주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실패입니다.

### 라보프

이는 중국 지도부가 중국 정치 모델과 서방 정치체제의 근접 가능성에 대한 조심스러운 탐색조차 거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현재 이 문제에서는 정황적 판단들이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 카르네에프

실제로, 서방 전문가 일각에서 시진핑의 정책은 장쩌민과 후진타오 시대의 좀 더 관대하고 온건한 정책으로부터의 후퇴라며 비난받고

있습니다. 장쩌민과 후진타오 체제에서는 사회에 토론을 위한 공간이 등장했고 정부의 이런저런 정책을 포함해 반대론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가 생겼습니다. 시진핑의 통치에서 일종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것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사회적 삶을 '동결시키려는' 의지, 이데올로기 부문에 대한 훨씬 더 주의 깊은 관심, 대학 캠퍼스에서의 이데올로기 작업 강화 지시, 가상공간상 토론에 대한 중대한 제한 조치, '당의 메가폰'이 되라는 공식 언론에 대한 가혹한 요구 등입니다. 그리고 이 모두는 실제로 중국을 서방식 정치모델 방향으로의 진화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국의 행동 이면에 있는 동기는 분명합니다. 이는 상황 교란의 위협입니다. 한편으로 지도부의 의식 속에는 (유명한 '색깔 혁명'과 '아랍의 봄' 이후에 발생한) 악명 높은 '재스민 혁명'이 위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2012년에 활발한 대중활동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던 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시 일반 사용자들도 접근할 수 있었던 다양한 부류의 정론가와 지식인, 이념적 대립관계 진영들의 논쟁은 선택된 정치노선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이미 불러넣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중국은 중요한 정치적 행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가을에 예정된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입니다. 예상에 따르면, 이번 당대회에서 개혁과 개방 정책 심화에 관한 새로운 조치들이 공표되고, 지배 엘리트의 대대적 쇄신이 있을 것이며, 시진핑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 보로흐

중국은 선택된 발전의 길에 따른 자국의 확산에 찬 움직임을 더욱 현저히 드러나는 서방의 세계 경제 성장과 국제관계 안정 유지에서의 무능력과 대비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에 준비된 ‘모델’을 제안하지는 않지만, 자국의 성공담을 기꺼이 공유하고 결코 외국의 방식을 복제하지 않은 자국 발전 방식만의 고유한 특성을 강조합니다. 중국의 선전은 시진핑이 중국 발전의 특색, ‘중국의 꿈’의 매력적 측면들, 국가운영에 관한 중국의 지혜, 중국 문화의 풍부함과 중국인의 전통적인 평화애호에 관한 ‘중국 이야기’를 잘 한다는 이유로 그를 칭송합니다.

2013년 3월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 연설에서 시 주석은 “구두가 발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신어본 다음에만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발전의 길이 나라에 맞는지는 그 나라 국민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시진핑은 중국이 현재 가고 있는 발전의 길은 오랜 역사적 모색, 시행착오 방식에 의한 행동의 결과로 찾아진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2014년 4월 브뤼헤 유럽대학교(College of Europe)에서는 중국인들이 입헌군주제와 군주제 복고를 거쳤으며, 의회제, 다당제와 대통령제를 시험했고, 그 후 실제에서 이들의 적용 불가능성을 확인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20세기 전반 중화민국 시기에 이 모색들이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조는 중국식 발전의 길과 서방 모델의 상관관계에 대한 규범적 해석에 영향을 미칩니다. 2017년 1월 다보스에서 시진핑은 중국이 자국 문화로부터 지혜를 얻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경직되는 것을 피하고, 동방과 서방의 성취를 차용하나 복제하지는 않으며, 끊임없는 모색 과정에서 자국만의 발전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개혁 40년 동안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으며, 중국인 6억 명이 가난을 벗어났고, 1인당 GDP는 7,000달러를 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선진국들이 수백 년 동안 지나온 길을 통과했습니다. 이 모두는 중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자주 ‘역사의 종말’이라는 서방의 개념은 논거가 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인류가 다양한 문명, 발전방식과 정치체제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중국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양각색의 조화라는 전통적 사상이 자유주의 모델 작용영역을 최대한 확대하려는 서방의 열망보다 시대의 요구에 더 잘 부합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식 경험의 보편성에 관한 입증은 피하면서, 중국 정부는 ‘담론적 권력’ 증대를 향한 의지와 세계 발전이 ‘공동의 이익’과 ‘인류 운명의 공통성’ 형성을 목표로 하는 더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자국의 고유한 세계발전관을 외부 세계로 진출시키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합니다.

## 비노그라도프

인구수에서 서방 세계 전체를 능가하는 중국은 이미 자국의 규모를 이유로 들어 보편성의 통용적 기준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중국의 경제적 성공은 권위주의의 개선 잠재력과 생존 능력에 관해 이야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현대화되고 있는 중국에서 모든 정치적 사건은 권

력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 따른 현재 과정의 일부로서는 물론, 국가·정치적 건설 과정의 일부로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카르네예프

많은 관측통은 정치·이데올로기 부문의 경향이 현 중국 지도부의 경제 정책, 특히 경제개혁의 '전면적 심화'에 대한 요구, 소위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에서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 요소를 활용할 것에 대한 요구, 또한 최근 중국 지도자들의 입을 통해 자주 나오는 이슈인 경제 세계화 과정 옹호와 대조된다는 점을 언급합니다. 얼마 전 열린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시진핑이 한 연설은 이와 같은 수사의 뚜렷한 예시입니다.

### 보로흐

시진핑 수중으로 정치권력 집중이 강화되는 데에서 오히려 경제적 변화에 대한 정치체제의 반응이 발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권한의 집중은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여건에 적응할 필요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배리 노턴(Barry Naughton, 캘리포니아대학교)과 천링(칭화대학교)은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에서 개혁 시기 중국의 성공적인 발전은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공동 진화'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중국식 모델'을 변화하기 쉽고 역동적인 것으로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정치권력과 경제의 관계를 두 종류로 분류한 더글라스 노스(Douglass North)와 배리 와인갯트(Barry Weingast)를 인용했습니다. 서방은 통치자의 탈선을 막는 외부적 제한기를 수용하는 쪽을 택하고 입헌제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책임 있는 행동' 전략을 선택해 외부 규약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변화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두 번째 길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 방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정치와 경제 간 새로운 균형의 모색을 보여줍니다. 위기적 경향의 발생에 대응해 중국 당국이 제한된 경제 자유화를 추진하고, 그 후 정치체제가 변화에 적응해 새로운 균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중국식 '모델 1.0'은 1980년대 개혁 최초 10년 동안 구축됐습니다. 당시 농업생산책임제, 향진기업 발전, 국유기업 권리 확대와 관련된 아래로부터 시작된 경제적 변화는 정치적 적응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경제를 우선적인 것으로 공표했고, 당과 국가의 기능 분배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으며, 경영자 책임제가 등장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모델 2.0'이 등장해 2010년대 시작 전까지 효과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 노선의 선포에 이어 국가공무원 제도 개혁이 뒤따랐고 중국의 공무원들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정부의 경제적 기능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모델인 '모델 3.0'으로의 이행은 시진핑 통치의 시작과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채 증가 및 투자 효율성 저하에 대응하여 2013년 당국은 경제자유화 노선을 택하고 자원분배에서의 '결정적 역할'을 시장에 부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 발전단계의 어려움은 개혁 기간 동안 약 10%대 지표를 보였던 경제 성장보다 더 이상 권력의 정통성의 주원천이 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2016년 6.7%), 이것이 꼭 정치 체제에 대한 신뢰의 저하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 추진은 잉여 생산시설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그 결과 실직자들 사이에서는 물론 이러한 생산시설 구축에 적지 않은 노력을 들인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우선순위를 교체하는 상황에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지도부는 사상·정치적 감화 방식, 즉 중국식 사회주의의 가치, 중국 문화, 낭비와 부패 불용 선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는 개혁의 성공뿐만 아니라 이 노정의 수많은 장애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어려움을 명시하는 것은 정치권력 강화 및 그 계승성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개혁 시기에 중국공산당은 개인생산자가 된 농민, 지식인, 소기업가, 다음으로는 대기업가를 당의 편으로 포섭하면서 계속해서 당의 사회적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공산당은 기업가들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건설자’라고 공표하고, 당 스스로를 민간의 손에 맡겨져 있던 ‘선진 생산력’의 발전 요구의 대표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부작용 중 하나는 기업과 정치 엘리트의 이해가 융합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경제정치 관계 모델을 향한 움직임은 포섭하는 협력자를 늘리는 일보다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수준 공직자의 행동 규범을 제한하는 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호랑이든 파리든 가리지 않고 같이 잡는다’라는 부패척결 공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권력 간의 비공식적

관계의 와해는 장래에 경쟁의 발전 및 경제에서 시장 역할의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습니다.

2017년 가을로 예정된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시진핑을 필두로 한 중국의 지도자들은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경제개혁이 진전되고 있으며, 빈곤극복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세계무대에서 중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노력합니다. 적당히 높은 GDP 성장률과 경제 안정의 유지는 대회에 앞서 당 지도부가 입지를 강화하고 대회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비노그라도프

시진핑이 선출될 당시, 중국이 성장 둔화 및 수출주도형 경제모델 교체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분명했습니다. 과제의 규모는 복잡성 면에서 1980년대 문턱에서 덩샤오핑이 개혁을 시작했을 때와 비할만 합니다. 이러한 규모로 인해 모델 교체를 보장하고 사회·정치적 과정을 통제하에 붙잡아 둘 수 있는 특별한 정치적 여건이 필요했습니다.

선출 직후 시진핑에게 완전한 전권을 부여하는 당 최고 지도부의 단합된 결정은 최고 직급의 단계적 승진 관행을 위반하는 것이었으나, 당시 상황에서는 정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신임 총서기의 손에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총서기는 인기는 없을지라도 필요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들은 개혁 시기에 만들어진 기본적인 권력 조직 원칙과 어긋났습니다. 세대 간 및 세대 내 책임 분배

시스템이 최고 권력자의 급진주의(및 주의주의)를 억제했던 것과 반대로, 권한 집중은 그가 결단력 있게 행동하도록 추동했습니다.

기존 관행에 따라 중국 지도자 각 세대는 부패척결 활성화 및 '군중노선' 구현 운동 추진으로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부패척결은 당국가기구에 새로운 전권적 책임자가 등장했음을 보여주며 권력 기관에서 새 지도부에 정통성을 부여했습니다. 군중노선 구현은 새 지도부가 국민의 이익에 충성함을 보여주면서 사회에서 새 지도부에 정통성을 부여했습니다. 시행되는 조치들은 체계적 성격을 갖지 못하고 권력 정화와 건전성 회복을 위한 상황적 조치들의 모음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 뒤 1년 또는 1년을 조금 넘어 종료됐고, 새로운 이익 균형을 정착시켰습니다. 시진핑에게는 부패척결이 처음부터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부패척결은 권력 확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됐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선출 이후 전통적 방식으로 자기 입지를 계속 강화했습니다. 2013년에는 국가안전위원회,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및 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2014년 2월 창설 - 역주)를 창설하고 지휘했습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2016년)에서는 '당 중앙의 핵심'으로 지명됐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기대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부패척결에서는 큰 진전이 없었는데, 시진핑에게 전혀 없이 폭넓은 권한이 부여된 상황에서 이는 더욱 눈에 띄었고 관련 조치들이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부패척결은 일반적 기간을 벗어났고 사회·정치 캠페인의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부패척결이 해

결하고 있는 과제가 부분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당의 이익 측면에서 보면, 부패척결의 급성기는 2016년 말에 대회 전 결산선거 캠페인이 시작되기 전에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패척결의 신속한 종결이 발표되지 않음으로써 설정된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으며, 존재하는 문제들이 현재 형태로 당대회에서 제기될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1978년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 로마노프

시진핑이 취임 후 1년~1년 반이 지나도록 부패척결을 종료하지 못한 이유에 관한 가능한 설명 중 하나는 대만과 홍콩의 사건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대만과 홍콩에서 청년들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 청년들은 소셜네트워크와 메신저를 통해 행동을 일치시키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당국은 대륙 중국에서 이와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는 바람으로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고 이데올로기 작업을 눈에 띄게 활성화 했습니다. 2015년부터 대학생의 애국심, 중국 공산당과 중국식 사회주의 과업에 대한 충성심 함양에 많은 노력이 투입됐습니다. 부패척결은 집권당을 중심으로 한 사회단결 캠페인의 일부가 됐습니다.

### 비노그라도프

현대 중국 정부의 문제는 정부가 시장 개혁을 추진해 경제에서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축

소하고 비즈니스가 정부에 미치는 역효과, 즉 공직자의 이익에 대한 비즈니스의 종속을 촉진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그 성질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부장적, 전능적 정부에서 다양한 사회집단 및 전체 사회의 이익을 도모하는 현대 서방식 정부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진핑이 취한 조치들은 이러한 갈등의 본질을 전혀 바꾸지 못했습니다. 경제모델 교체는 경제에서 국가의 핵심적 역할이 복구되고 계획 경제 방식이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013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경제모델 전환 기능을 시장제도에 두었고, 이로써 시장경제와 국가 간의 핵심적 대립을 존속시켰습니다. 동시에 당국가기구의 대규모 숙청은 아주 중요한 역효과를 낳았는데, 기구를 결합시킨 것이 아니라 기구의 불안정화를 촉진한 것입니다.

시진핑이 개인권력을 강화하면서 처음부터 자신을 당기구 대부분과 대립시키지 않았더라면, 통상적인 엘리트 내부의 타협은 다시 달성될 수 있었을 것이며, 권위주의적 국가와 시장경제의 상관관계는 그 파괴적 잠재력을 계속해서 축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 성과의 부재를 직면한 후 상황은 다른 시나리오에 따라 진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계율에 따라 사상·정치 캠페인이 종료되어야 했던 2014년 6월, 시진핑은 처음으로 ‘정치 환경’ 정화 과제를 공개적으로 설정하고 ‘시진핑, 국정운동을 말하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2014년 12월에는 ‘4개 전면(四個全面)’ 원칙을 제시했는데, 바로 ‘전면적 소강(小康) 사회 건설, 전면적 개혁 심화, 전면적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에 따른 통치), 전면적

중엄치당(從嚴治黨, 엄정하게 당을 다스림)’입니다. 마지막 항목을 덧붙이고 나서 시진핑은 중국의 정치적 삶에서 불안감을 주는 현상들의 주 이유를 지적했는데, 바로 당이 스스로 맡은 정치적 의무와 역사적 의무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경제모델 교체 여건 마련을 목표로 하던 시진핑은 중국 역사의 핵심적 문제인 국가기구의 도덕적 타락과 직면했습니다. 국가기구가 공익이념 수호를 그만두고 그것을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맞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권위주의 국가가 성공적으로 개혁될 수 있음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앞선 38년간 중국공산당의 주요 과제는 시장경제 구축과 최고 지도부 시스템의 제도화를 통한 사회주의 국가 효율성의 제고였습니다. 현재 분명해진 사실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권력과 사회의 새로운 관계를 구축할 능력이 없는 국가 자체이며, 당의 주 과제는 이미 사회주의 국가의 계획과 시장이 아니라 국가와 새로운 사회경제적 현실의 체계적 관계 구축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기구의 일회적인 건전성 회복으로는 부족하며, 부패척결의 제도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 상황에서 시진핑은 권위주의 체제의 전통적인 효율성 제고 모델로 돌아섰습니다. 이 모델은 지도부 내 권력 분배가 아니라 최고 지도자의 권한 집중 및 그가 효율적 통치를 하는데 필요한 통제 및 감시 기능의 강화를 기반으로 합니다. 아마도, 시진핑 체제에서 중국공산당은 중국 역사의 핵심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즉 ‘집권 왕조의 교체 없이 국가의 도덕적 기반을 재건하려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 미헤예프

제 생각에 현재 중국은 첫째, 정치체제 모델 변경이라는 점에서는 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중국 공산당은 권력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토론에 참가하신 중국학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모두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심화되는 대립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라보프

그런 대립들은 중국의 현대 정치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 로마노프

중국 사회 내에는 다양한 사상적 조류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강렬한 선거 캠페인은 일부 중국 청년 사이에서 '신우파'가 부상하게 했습니다. 이들 청년은 미국에서의 삶을 잘 알고 있으며, 소수의 권리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미국의 '정치적 올바름' 이데올로기에 비판적입니다. 중국 '신우파'가 매력을 느끼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및 보수주의 이념이 대양 너머에서 명료하게 구현된 것입니다.

## 미헤예프

중국인들은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를 미국 정치체제의 위기로 해석해 중국을 위해 서방식 정치 모델을 차용하는 것의 불필요성은 물론 그 위험성을 입증하려 합니다. "그들의 모델이 무엇을 초래하는지 보라!"라는 것이죠. 이 모두는 중국공산당의 손에 권력을 보존하는 것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이용됩니다.

## 로마노프

그럼에도 중국의 '트럼프 마니아'는 러시아의 경우와는 현저히 다릅니다. 중국에서 트럼프 마니아는 인터넷에서만 퍼졌죠. 당국도 사회도 대선 캠페인에서 중국을 엄격하게 대하겠다는 약속한 트럼프가 승리한 이후에 양국 관계가 개선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신우파'는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에 대한 호감을 드러냈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그의 약속을 중국의 미래에 마음대로 끼워 맞췄으며, 그의 보호주의와 이민제한 정책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중국의 노동력은 계속 비싸지고 있고, 중국 기업가들은 생산시설을 외국으로 이전하고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중국은 빈국 출신 노동이민자들에게 매혹적인 장소로 변하겠지요. 미국 산업 부흥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가 제안한 반세계화 처방이 중국 보수주의자들의 사기를 북돋아 준 것입니다.

## 카르네예프

하지만 중국 최고 지도부가 어느 한 이데올로기 진영이 너무 현저하게 강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필요한 균형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의 여러 사건들은 정치 스펙트럼의 좌파 민족주의 부분의 영향력이 중국에서 부활하고 있는 반면(참고로 2012년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 이후 기간 동안에 좌익조직들에 모종의 압박이 뒤따랐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최근 연달아 타격을 받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자유주의와의 상황이 더 나빠지는 데에는 좌파 전체가 소위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허무주의'의 해로운 영향에 대항하는 문제에서 대대적인 '당 지도부 지

지' 전술을 택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와 관계된 사건들로 지난 해 대표적인 자유주의 잡지 '염황춘추(炎黃春秋)'가 사실상 폐간된 일(두다오정(杜導正, 93세) 발행인, 쉬칭취안(徐慶全) 총편집장, 후더핑(胡德華) 부편집장(후야오방(胡耀邦) 전 공산당 총서기의 아들)을 비롯한 경영진 완전 교체), 자유주의 사이트 공스왕(共識網) 폐쇄, 인터넷 활동 관련 규정 엄격화 등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달 간 사회 분위기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홍콩 잡지 '쟁명(爭鳴)'은 여론의 중심에 있으며 중국 자유주의 성향 지식인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부정적인 사건들을 열거했습니다. 이는 경제성장 속도 저하, 중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출, 정치 부문의 공포와 긴장 증대, 인권변호사에 대한 당국의 탄압행위, 광둥성 우칸촌 농민 시위 지도자들에 대한 새로운 탄압, 경찰 전횡의 위험성을 사회에 추가로 보여 준 레이양 사건, '염황춘추' 잡지 폐간 및 '공스왕' 사이트 폐쇄, 홍콩 톱로완(銅鑼灣) 서점(코즈웨이베이) 관계자들이 홍콩에서 중국 정보기관원들에게 납치된 사건, 홍콩의 일부 젊은 국회의원의 권한 박탈을 둘러싼 싸움, 양안 관계 및 중국과 홍콩 관계 악화 등입니다.

중국에서 다가온 2017년의 전조가 된 것은 소위 '덩상차오(鄧相超) 사건'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참고로 덩상차오는 산둥건축대 교수이며 인터넷에 마오쩌둥을 향한 신랄한 글을 올린 이유로 해직됐습니다. 덩상차오의 글은 '자유주의', '입헌정치', '인류 공통의 가치', '시장 개혁', '법치사회', '사법권 독립' 등의 단어에 거부감이 드는 일부 인터넷 사용자들을 격분시켰습니다.

2017년 1월 4일 지난 시에 위치한 산둥건축대 건물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마오쩌둥 주석 모욕'에 대해 덩상차오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마오 지지자들의 떠들썩한 시위가 열렸습니다. 분개한 마오주의자들의 수는 100명을 넘었습니다. 시위자들은 덩상차오를 보호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후자는 더 적은 수였는데, 약 12명 정도였습니다).<sup>11</sup>

신문 및 각종 네트워크 매체도 들끓고 있습니다. 허웨이팡(賀衛方) 중국 베이징대학 교수, 장밍(張鳴) 중국 인민대학 교수, 장쉐중(張雪忠) 변호사 등 일부 자유주의 지식인들은 시위에 참가한 마오주의자들을 비판하며 덩상차오를 옹호했습니다. 이들 지식인은 덩상차오에 대한 공격은 중국 헌법으로 보호되는 언론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며, 그를 향한 마오주의자들의 위협은 형사 처벌 대상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1월 6일, 밝혀진 바에 따르면 대학교수일 뿐만 아니라 산둥성정부 고문이기도 했으며, 또한 산둥성 정치협상회의 상임위원이었던 덩상차오는 '허위 발언'으로 모든 직책과 직위를 박탈당하고 신속절차에 따라 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덩상차오 사건'의 반향은 무엇보다 좌파와 우파 간의 인터넷 논쟁이 그토록 치열한 대립이 되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당국의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경우(비록 명목상으로는 지방정부 수준의 결정이었다 할지라도)가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과 연관됩니다.

덩상차오 사건을 둘러싼 일들의 전개과정이 지난 몇 년간 전문가들의 논쟁 대상이었던 '좌선회'가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할까요?

## 로마노프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공산당 공식 이데올로기의 좌선회는 '신우파' 이념들의 인기 증가를 상쇄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카르네예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12월에 관측통들의 관심을 끈 것은 좌파 인사와 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마오쩌둥 탄생 123주년 기념일을 이용해 중국 곳곳에서 공개 행사와 행동을 벌였습니다. 이 기념일에 맞추어 베이징에서 열린 기념 좌담회에는 꽤 알려진 좌파성향 사이트 '유토피아'와 관련된 일련의 저명한 정론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반대 진영에 부정적인 올해 상황을 배경으로 관측통들은 사상·정치 부문의 균형이 크게는 아니지만 이념 스펙트럼상 좌파애국주의 쪽으로 이동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 '뒤웨이신문(多維新聞)'은 전체적으로 좌파와 우파가 당국의 조치들에 의해 현재 사실상 영향력이 미미해졌지만, 좌파가 의견을 개진할 공간이 더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중국에서 국가인터넷정보관공실이 다양한 위반 사항을 들어 유명한 중국 경제학자이자 자유주의 성향 사회인사 마오위스가 설립한 '텐저 경제연구소(Unirule Institute)'를 비롯한 17개 사이트를 폐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같은 기간에 여론의 관심을 끈 것은 중국 법조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법부 독립' 사안에 관한 저우창(周强) 중국최고인민법원장의 기고문입니다. 저우창은 '서방식' 권력분립 시스템과 사법권 독립, 또한 악명 높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반대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해외 언론의 정보에 따르면 학자, 법학자, 변호사, 기타 법조계 관계자 약 70명이 저우창의 입장에 반발했습니다. 해당 서한 서명자 중에는 마오위스도 있는데, 여러 관측통의 의견에 따르면 이는 마오위스가 운영하는 텐저 경제연구소(Unirule Institute)에 대한 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sup>2)</sup>

'덩샤오쩌우 사건'으로 돌아가서, 좌파 저자들의 글에서는 이 모두가 '민중의 힘의 승리'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해 둡시다. 이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번의 승리 또한 '량야산 오장사' 이야기 속 사건들의 진위성에 관한 논쟁, 추사 오원(6.25 전쟁 영웅) 관련 논란, '염황춘추' 잡지 폐간, 차이징의 다큐멘터리 영화 '뚝 지붕 아래서'(대기 오염 주제), 사적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오쩌둥을 모욕한 방송인 비푸젠 사건(누군가가 인터넷에 비디오를 올림) 등을 포함한 이데올로기 싸움에서의 지난 승리들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덩샤오쩌우 사건 분석'과 관련된 글에서 저자는 이번 승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산둥성 및 기타 지역 당국의 지지였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에는 '18차 당대회 전 기간에는 그런 일은 상상할 수 없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sup>3)</sup>

1) 자오딩치(赵丁琪, Чжао Динци). 邓相超辱毛事件的舆情及分析(덩샤오쩌우 마오쩌둥 모욕사건의 여론 및 분석). 홍거후이왕(红歌会网). 2017.02.08. <http://www.szgh.com/Article/opinion/zatan/2017-02-08/130322.html> (검색일: 2017.02.12)

중국 좌파에게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 현상에 관심을 가진 '뒤웨이신문'은 좌파 진영 지도자 중 하나인 장홍량(張宏良)과 상세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흥미롭게도, 그의 인터뷰에는 최고 권력이 좌파 진영을 지지할 가능성의 정도를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호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좌파에 대한 당국의 압박이 예전에는 자유주의자와 서방주의자에 대한 그것보다 더 강했지만, 이제 더 약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당국이 좌익이념 옹호자들을 지지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장홍량의 말에 따르면, 현 중국 지도부의 명함이 된 부패척결 캠페인조차 실제로는 민중의 지지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패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sup>4)</sup>

## 미헤예프

카르네예프 선생님(Андрей Ниязович Карнеев)과 비노그라도프(Андрей Владимирович Виноградов)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공산당은 현재 좌파, 즉 마오주의 이데올로기와 자유주의 우파 이데올로기 간 대립을 중지시키려 합니다. 변증법적 논리의 관점에서 보면 상황은 명확합니다. 좌파적 시각이 강해질수록 우파적 시각은 더 적극적으로 그에 대항할 것이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정치계에서는 국가의 안전과 시진핑의 개인 권력 안전 간에 대립이 나타나고 있습니

다. 오늘 여기 학자분들께서 맞게 언급하셨듯이, 부패척결은 강해지는 반작용에 부딪치고 있으며 시진핑으로 하여금 더 많은 권력을 수중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기관들의 노력은 지도자의 권력 보장과 국가의 안위 중 무엇을 가장 먼저 지향해야 하느냐는 역내 모든 국가의 공통적 문제가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중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모순은 시진핑이 얼마 전 다보스 포럼에서 명확히 천명한 세계화 주도국 및 보호주의 철폐 주도국 역할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요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문제는 경쟁자일지라도 현재의 글로벌 강국들 및 그들을 지향하는 다른 국가들과의 대립이 아니라 협력에서만 그 리더십을 실현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성공하려면 나머지 세계가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들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런 이념들을 시장 민주주의 범위 밖에서 찾지는 못할 것입니다.

네, 현재 중국 지도부는 아직 정치 개혁을 할 때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 개혁 없이는 자국의 글로벌 리더십 야망을 실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현대적 민주정치체제의 부재는 다른 국가들과의 리더십 경쟁에서 중국이 가진 일종의 '부정적' 우위 또는 약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 전망에서 중국은 민주주의적 전환이나, 글로벌 리더십 야망의 포기냐는 딜레마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 위안웨이징(袁瑋婧). 慎防左的干擾阻礙中國發展(좌파의 영향이 중국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아주주간(亞洲週刊), 2017.03.05. [http://www.wyzzk.com/cfm/content\\_archive.cfm?id=1487821669326&docissue=2017-09](http://www.wyzzk.com/cfm/content_archive.cfm?id=1487821669326&docissue=2017-09) (검색일: 2017.03.07).

## • 토론 참가자

보로흐 (Борох О.Н.), 경제학 박사,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책임연구원

비노그라도프 (Виноградов А.В.), 정치학 박사,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책임연구원

다비도프 (Давыдов О.В.),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선임연구원

카나예프 (Канаев Е.А.), 역사학 박사, 고등경제대학교 교수

카르네예프 (Карнеев А.Н.), 역사학 박사, 모스크바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연구소 부소장

레온티예바 (Леонтьева Е.Л.), 경제학 박사,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수석연구원

록신 (Локшин Г.М.), 경제학 박사,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책임연구원

로마노프 (Ломанов А.В.), 역사학 박사,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수석연구원

미헤예프 (Михеев В.В.),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정회원,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

로고지나 (Рогожина Н.Г.), 정치학 박사,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책임연구원

랴보프 (Рябов А.В.), 역사학 박사, '세계경제와 국제관계' 학술지 편집장

표도롭스키 (Федоровский А.Н.), 경제학 박사,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부장

시빅코 (Швыдко В.Г.), 경제학 박사,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부장

· 원제: РЕАКЦИЯ ПОЛИТИЧЕСКИХ СИСТЕМ СТРАН ТИХООКЕАНСКОЙ АЗИИ НА ПРОИСХОДЯЩИЕ ИЗМЕНЕНИЯ И НОВЫЕ ВЫЗОВЫ(1).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Vol. 61, No. 7 (ИММО, 2017), pp. 101-111.

· 번역: 이정화(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3) 자오딩치(赵丁琪, Чжао Динци). 邓相超辱毛事件的舆情及分析(덩상차오 마오쩌둥 모욕사건의 여론 및 분석). 홍거후이왕(红歌会网), 2017.02.08. <http://www.szhgh.com/Article/opinion/zatan/2017-02-08/130322.html> (검색일: 2017.02.12).

4) 对话张宏良: 中共需要健康左派力量(장홍량과의 대화: 중국공산당에게 건강한 좌익 세력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뒤웨이신문망(多维新闻网), 2017.02.02. <http://news.dwnews.com/china/news/2017-02-02/59797473.html> (검색일: 2017.02.12).

---

#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정치체제적 대응 (II)

---

바실리 미헤예프 외 (토론)

---

최근 몇 년 간 아시아 태평양 국가 정치 시스템 변화의 비교분석에 관한 토론 자료를 공개합니다. 토론 참가자들은 중국, 대한민국과 북한, 일본, 아세안(ASEAN) 국가 전반, 또한 태국과 베트남의 경험을 검토했습니다. 2017년 2월 28일 '세계경제와 국제관계'지 편집부에서 진행된 원탁토론의 자료를 독자들에게 제공합니다.

## 라보프

이제 최근 대통령 탄핵이라는 급격한 정치적 변화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국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국가는 대한민국(남한)입니다. 이와 관련해 심지어 대한민국의 경험이 '역사적 궤도,' 즉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의 모든 개념을 뒤엎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서방 민주주의 모델을 향한 돌파구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더 복잡하고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현상이라 해야 합니까?

## 다비도프

현직 대통령의 탄핵 발표와 관련해 대한민국이 현재 겪고 있는 정치적 갈등은 개도국을 위한 최적의 모델로서 그동안 대한민국식 (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사회 발전의 길이 가진 매력에 대한 믿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부패 커넥션 및 국정 사안의 결정에서 개인적 친분관계 이용했다는 이유로 우선 박근혜에 대한 불신감으로 표출된 스캔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심각한 국가 시스템 위기로 변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 모두가 불만에 차 있습니다. 지배 엘리트는 어쨌든 대통령이 국가 체계의 근간에 있는 '보수의 가치'를 훼손해 사

회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불만입니다. 대기업을 포함한 경제계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정부가 과도하게 규제하고, 공직자, 최고 위급 인사에게 뇌물을 상납하지 않으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불만입니다. 중산층은 부패가 만연하고, '신분상승을 위한 수직적 엘리베이터'의 발전이 미약하며, 국민의 기본적인 이익을 보장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정치적 세력으로서 대중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현실에 불만입니다.

현재 첨예한 대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및 그 측근들의 권력남용과 관계된 소문들이 갖고 있는 무성한 '자극적인' 내용들과, 그 다양한 소문들 속에서 전통적으로 감정이 쉽게 격해지는 성향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에게 심각한 적대감을 품고 있으며, 국회가 탄핵한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승인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지배엘리트와 특히 군 상층부는 대통령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박근혜를 결국 해임(이 경우 신인 대통령 선거는 판결 후 60일 내에 실시)하는 행위는 정치적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북한이 대한민국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고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데 상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금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한민국이 그동안 구축한 경제 성과와 국제무역 부문에서 확보한 성공적인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치 체계는 매우 취약한 채로 남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체계는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저항력을 갖지 못한 심각한 도전이 없을 때에만 국가적 과제의 해결을 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표도롭스키

작금의 정치적 위기는 대한민국이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 사회로 이동하는 과정에 제도적 변화가 아직 미완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회 과정의 다양한 속도와 방향성이라는 문제가 등장한 것입니다.

21세기 초부터 꾸준히 경제 현대화 및 과학 기술 잠재력을 실현하려는 전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 및 학문 수준의 향상, 해외 유사 교육기관 및 학문기관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에서 중요한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수 및 학자의 권위가 높아지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 트렌드에 부합합니다.

또한 최근 20년간 대한민국에서는 세계적 문화유산을 통해 문화적 잠재력을 증강하는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인문학을 발전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인문학은 상승 기류를 타고 있으며, 아시아 및 전세계로 문화상품을 공급하는 데도 성공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 다비도프

그러나 사회·정치부문에서는 발전이 눈에 띄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의 배경은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미흡한 발전, 정확히는 정치구조 내에 광범위한 사회적 균형이 부재하다는 데 있습니다. 사회적 균형은 강하고 독립적인 구심점, 즉 사회에 영향력이 있으며 국가 기구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정치적 행위자, 예를 들어 비정부기구(NGO), 경제계, 학계, 언

론, 정치인 및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의 존재에 좌우될 것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상기한 행위자들이 모두 존재하지만 대부분 기능적인 형태로, 즉 정부, 정치권력의 전동벨트로서만 존재합니다.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은 전통사회의 산물로 남아있으며, 이 시스템은 같은 지방(지역) 출신자에 얽매인 지연, 친족을 중시하는 혈연, 출신 학교에 매여 있는 학연에 따른 친분관계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이른바 ‘정실주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백 속에서 대한민국 정치체제는 아직까지 온전하게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최근 25년 동안 체제의 진화는 많은 부분에서 극점에서 또 다른 극점으로 움직이는 진자운동과 닮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독재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등에 업고 중도좌파 체제(김대중, 노무현)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힘을 얻었습니다. 대외적 개방성, 민주주의적 외연 확대, 대북 관계의 ‘햇볕 정책’과 호호였지요. 결과는 경제의 혼돈, 사회적 동요, 수상한 북한과의 거래였습니다. 북한은 이 시기에 핵·미사일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07~2008년부터는 보수 우파의 설욕이 이어집니다. 이명박이 당선됐습니다. 군·민 관료는 내외부적 위협을 구실로 ‘나사 조이기,’ 즉 모든 정치권력 및 행정권력을 자신들에게 집중시키고 사회의 ‘친북’ 분위기를 없애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북한에 대한 접근과 그 요건도 엄격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융통성 없는 노선의 결과는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궁극적 결과는 박근혜

통치 말기의 정치적 붕괴지요.

현재는 정치적 해빙이라는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으며, ‘진자’가 역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 표도롭스키

현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치 부문 자체의 내부적 모순과 불균형의 의미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언급할 것은 2000년도에 사회적 활동에 대한 제한이 철폐된 후 활동 능력이 있는 NGO 네트워크가 활발히 확대됐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NGO의 지도자들은 권위주의 체제에 대항해 활동한 수년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활동에서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컴퓨터화 된 사회 중 하나인 대한민국의 정보력과 동원력을 활용합니다. NGO의 비타협성과 적극성은 사회에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권력의 직접적 통제 밖에 있는 전통적 언론매체도 계속해서 큰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다르게 정당들은 전혀 쇠신하지 못하고 성향 면에서도 여전히 엘리트주의적이며 새로운 사회적 추이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집단으로 남았습니다. 보스 정치, 계파나 파벌에 의존하는 것을 포함해 과거 지향적 성향이 우세합니다. 정당들의 조직이 불안정하다거나 사상이나 이념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주기적인 당명 교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 행정부는 5년 단임제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 절반이 남은 경우에 레임덕이라는 권력 약화를 부패 또는 권위주의 유산에 호소(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사회적 권제 동원 및 반대 세력과 투쟁

을 위한 도구로서의 국정 역사교과서 제작)해서 보상받으려 합니다. 정치 엘리트의 의사 결정이 은밀하고 투명하지 못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국가운영의 헌법적 메커니즘이 무력화됐거나, 혹은 그것이 오직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서만 기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국가와 대기업의 관계를 보면, 국가가 기업을 비호하는 과거의 유산이 전해져, 불투명하고 부패한 관계가 지속되고, 시장경제의 올바른 경쟁이 왜곡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대한민국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모순은, 경제, 학문, 문화는 현재의 국가적 과제와 지구적 차원의 과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21세기의 도전에 대응하고 있는 반면, 정치 엘리트와 정치 제도는 침체 단계에 있으며 기껏해야 20세기 마지막 30여년의 스테레오타입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 미헤예프

이어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1990년대 이전까지 군부독재의 성격을 지녔던 견고한 정치 시스템에 대한 일종의 시험입니다. 대통령 탄핵 문제는 권력 엘리트에 대한 도전과도 같습니다. 정치적 안정이나 정치적 혼란이나, 다시 말해 평화나 총성이 나는 것이죠.

### 라보프

그러면 가까운 미래에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의 상황 전개 및 진화 전망에 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 다비도프

현재로서 전망은 매우 불확실하며, 대한민국이 정치 스펙트럼의 좌파 자유주의로 치우칠 '틈'이 생길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최소한 대다수에게 중요한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 북한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미헤예프

박근혜에 반대하는 야당 세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앞두고 만약 탄핵이 실패하면 평화적 군중집회가 대규모 군중 소요 및 무력 충돌 형태를 포함해 심각한 결과로 끝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는 불명확한 채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까운 미래의 전망과 관련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전 시대에는 군부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부의 사정은 달라졌고, 군부의 정치적 야망은 대부분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한 단계가 끝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의 주요 특징은 정당이 리더 혹은 보스를 중심으로 형성됐다는 것이었죠. 당명은 자주 바뀌었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히 어느 리더를 중심으로 정당이 조직됐느냐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의 퇴진에는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당 형성의 이데올로기와 원칙은 지금도 여전히 그리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시스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아직 변화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라보프

이제 이웃 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 시스템은 물론 경제 시스템에서도 오랫동안 아무 변화가 없다고 인식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일부 관측통들로부터 이곳에서도 어쨌든 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가의 폐쇄성으로 인해 그 규모와 방향성에 대해서 극히 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 다비도프

북한의 정치 시스템에서는 어떤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체된 정치 시스템이 북한 정부에게는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고 균형의 파괴를 방지해주는 수단이 된다는 긍정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은 '장기(체스) 속 말의 희생,' 다시 말해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가능성, 특히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 향상 가능성을 당 전체의 이익, 즉 정권 유지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부적 현대화를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이고 복잡한 원인은 정책, 이데올로기, 경제, 사회 부문과 심지어 개인의 삶을 포함하는 정치 시스템의 모든 구성 요소가 분리되지 않는 채 하나로 압축되게 만드는 북한 정치 시스템의 특성입니다. 이 때문에 시스템에서 '벽돌' 하나, 예를 들어 경제를 빼내어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동기가 사라지거나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대안은 모든 것을 바꾸거나, 혹은 아무 것도 건들지 않고 정치 시스템의 온전성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호하는 쪽은 후자입니다. 비용이 덜 들고 모든 리

스크도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북한 경제에서 '개량적' 혁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업 및 농업협동조합의 독립성이 높고, '민간' 상업, 레스토랑, 무역회사 등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은 진전된 몇몇 추세입니다. 공업·농업 부문의 경우 앞서 언급된 독립성은 상부로부터의 개량 신호가 아니라, 국가의 행정, 자원 및 재정 기반이 직접적으로 약화된 결과이며, 이러한 이유로 국가가 실물 경제 부문에서 부득이하게 권한 행사를 포기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경제의 전략적 시설 및 군사적 시설의 핵심은 '국가의 뒤에' 있는 반면, 제2편대와 제3편대의 기업들은 그저 총체적 적자 상황에서 '단독 항해' 및 기업 자체와 직원들의 '자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자족경제의 특수한 변종입니다.

소위 말하는 사기업은 첫눈에 보면 새롭고 진보적인 시장 형태의 맹아로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현상은 결핍, 부정부패, 배급제 실패, 군·민 관료의 사업 활동 증가 속에서 중앙권력의 관리 기능 축소 같은 북한의 특수한 여건의 부산물로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언급된 기업들은 지방 엘리트가 여러 가지 반(半)불법적 방법과 그 응용을 통해 권력과 부수입을 획득할 수 있는 최적의 도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소위 '사기업'은 공식적으로 결코 합법화되지 못했으며, 그 활동이 법과 규제로 규율되지 않는 점만 말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할 경우 이런 부류의 시설을 개별적으로 없애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없앤다 해도 그 어떤

정치적 문제도, 법적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 비노그라도프

중국의 개혁 개방 경험도 북한이 변화의 시대에 이미 들어섰다고 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중국은 농가생산책임제로의 자발적인 이동을 통해 개혁이 시작됐는데, 이 제도는 일부 지방에서 당 지도부로부터 바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동시에 일부 공업기업들에는 자사 상품의 일부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권리가 실험적 형태로 제공됐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비록 크지는 않지만 경제 활동을 위한 자유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당시 외부 관찰자의 대다수는 이러한 변화들의 특성을 규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문화대혁명'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고작 1년 후에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적 근간을 파괴하는 움직임이 중국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경제개혁 성공을 촉진한 것은 정치적 여건입니다. 당시 화궈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신임 주석은 힘이 약했고, 권한은 분권화됐으며, 고령의 개혁가들은 의식적으로 국가 실무 운영 기능의 일부를 더 젊은 세대에 이양했습니다. 이렇게 경제발전을 위한 공간은 정치적 공간에 의해 보완됐고, 이로 인해 국가를 인위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즉 개혁 전의 상태로 되돌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북한의 경우 현재까지 위와 같은 정치적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변화의 본질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2010년~2011년에 경제를 엄격한 행정적 차원으로 돌려놓기 위해 시도했던 당국의 조치들은 성공하지 못했으며, 권위와

권한의 정도로 파악해보면, 만약 현 북한 지도자에게 정치적 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면밀하게 경제개혁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의 후기 사회주의적 권위주의가 새롭게 진화하는 또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 표도롭스키

북한에서 전체주의로부터 권위주의로의 이동은 여러 가지 중요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경제 부문 조치들의 개방도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혁신에 관해 상부로부터 내려온 지령은 널리 보급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려온 지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계획된 결정의 내용과 메커니즘을 공개적으로 심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개적인 경제 정책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정권은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오히려 태만한 집행자이며, 성과는 검증 없이 정권에 의해 자산으로 기입됩니다.
- 개혁에 대한 법적 보장이 부재합니다. 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전혀 법률로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민간 상업은 '회색지대'에 머무르며 유사 시장관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 유사 시장관계의 범위는 모든 경제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행위자에 대한 법적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정해집니다.
- 통치 체제와 사회 간에 명료한 정치적 합의가 없습니다. 엘리트 내에는 흐루쇼프식 권

센서스(노멘클라투라의 일원은 직책을 잃을 순 있으나 생명은 잃지 않음)도, 브레즈네프식의 '인재에 대한 세심하고 배려 깊은' 정책(정치적으로 충성하는 엘리트 내에서는 잘못이 있는 경우 '가벼운' 면직 처분을 받으며, 일정한 수의 인원이 순환됨)도 없습니다. 더욱이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와는 달리 집권당의 권력기능과 국가제도를 체계화하고, 권력에 의해 승인된 시장관계에 적응시키는 공식적 통로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권력 계층 전체에 걸쳐 개인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탄압은 어느 때 누구에게라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통성은 물리적 폭력의 성격(국내적으로는 탄압, 대외적으로는 핵 협박)을 띠고 있습니다. 배급제 시스템의 실패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에게 약화된 계획경제를 이용해 자신에게 최소한의 물질적 만족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선택된 자는 '힘 있는 자'(силовики) 및 지배관료와 협동해 '돈을 버는 것이' 허락된다.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북한은 현재 1인 권력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지배 체제 및 그 지배하에 있는 사회 계층은 정세의 변화에 따라 상황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경제, 법과 정치의 불균형 때문에 현재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불안정이 지속되고 외부적 대외적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경제 및 유사 시장관계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계층은 내부적 상황의 예측가능성과 안전 여부, 외부 세계를 향한 개방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는 내부적 소통은 물론이

고 대외적 개방 차원에서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소통과 개방의 폭은 제한적, 선택적이며 특정 계층의 이익에 유리한 개방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지적 개방은 주민 대부분을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킬 것입니다.

## 미헤에프

북한의 정치 모델은 스스로를 소진했습니다. 경제는 시스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상황은 붕괴 직전 소련의 상황과 닮았습니다. 배급제를 통해 주민에게 식량을 공급해 줄 수도, 산업을 돌아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시장은 창궐합니다. 당국은 기업 간의 거래를 포함해 식량과 상품의 불법적 거래와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여기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모든 사적 활동이 불법적입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부패구조를 통해 스스로가 그러한 불법적이고 사적 사업 활동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때 불법거래는 국내에서 조차 강화된 자유로운 이동 금지로 인해 억제됩니다. 하지만 '암시장 사업가들' 층으로부터 이러한 이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동에 대한 대가로 허가를 내주는 당국이 받는 뇌물도 배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그 결과 북한에는 불법적이고 부패한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권력은 주민뿐만 아니라 소위 '북한의 신흥 자본가들'에 대해서도 완전한 통제권을 갖습니다. 개혁 시점에 경제의 주 산업이 농업분야였던 중국 및 베트남과 달리, 북한의 경우는 군수산업이 주 산업입니다. 개혁을 향한 정치적 의지도 없

습니다. 이 모든 이유로 북한 시스템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소련 붕괴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치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기 위해서는 일종의 정치적 ‘방아쇠’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알려져 있듯이, 소련의 경우에는 1991년 8월 쿠데타와 보리스 옐친이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 표도롭스키

북한과 남한 모두에서 내부적으로 정치적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상은 결국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다는 우려를 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내 강대국 및 국제기구들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는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 라보프

이제 가장 발전한 강대국 중 하나이며, 동시에 부류를 만큼 민주정치의 시스템이 안정적인 나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일본은 주변의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 현재에도 그렇게 변함이 없습니까?

### 시밋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일본의 정치 시스템은 미국 및 유럽 모델과 비교해 볼 때 여러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의심할 바 없이 경쟁적이고 다원적인 일본의 정치 시스템은 사실상 실제로 조종할 수 있는 권한을 좁은 범위의 후보에게만 한정

적으로 제공합니다. 이 후보들은 규모가 작고 다분히 세습적인 정치 엘리트 내부의 핵심에 속합니다. 경제계와 시민운동가들이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들도 대부분 엘리트 내부 수준에서 진행되는 제도화된 정치 경쟁에는 통상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둘째, 일본의 다당제는 제한적 기능을 갖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다수당 당내 경쟁의 결과가 중요하며, 현재 다수당의 역할은 거의 계속해서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들도 정치 무대에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이들은 단독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할 수 없는 여러 주변 계층과 세력을 대표할 뿐입니다. 이들의 활동 목적은 특정 사안 및 법안에 관해 다수당과 혹은 다른 정당과 연립하는 정치적 묘수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 정치적 틈새에 불안정한 군소정당들과 함께 몇몇 전통적이고 견실한 정당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일본 사회의 ‘메인스트림’에 포함되지 못한 인물 및 집단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 공산당, 공명당, 사회주의자들이 이 부류에 속합니다. 첫 번째 부류와 달리, 두 번째 부류는 자신들의 활동을 위해 상당한 재원을 끌어들이 수 있으며, 다양한 수준에서 의회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들은 파벌주의 특징이 강한 조직입니다. ‘열렬한’ 지지자 및 열성분자로 구성된 고정적 기반 계층이 있는 반면, 비호감 세력도 많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앞으로 이들이 대다수의 지지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본의 ‘거리’ 정치에서는 급진적 민족주의 야당도 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분산돼

있고 시스템 밖에 위치하기 때문에 의회 제도에 진출한 경우는 극히 미약합니다.

셋째, 일본 정치 시스템에서 이데올로기적 동기는 유럽의 경우보다 훨씬 그 역할이 작습니다. ‘메인스트림’ 내에도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이 있긴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완성돼 있지 않으며 정치 의제의 대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데올로기적 구분은 ‘군소’ 정당들의 경우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군소 정당들은 정쟁 간의 중요한 균열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현재의 시스템이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대한 변화를 겪는 현실 정치와 함께 변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시스템상의 변화는 첫째, 극적이지 않고, 둘째, 매우 점진적입니다. 그래서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이 예상치 못하게 패배함으로써, 일본 정치의 기본적인 패턴이 붕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고전적’ 양당제로의 이행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촉발된 것이 사실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평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

다. 앞서 기술한 일본 정치시스템의 주요 특질들은 아직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와 야권 인사들은 일본의 정치 시스템을 좀 더 엘리트주의적으로, 권위주의적으로,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그 어떤 총체적 기류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류의 징후로서 그들이 지적하고 있는 모든 사례들, 예컨대 집권 세력의 주요 언론매체에 대한 간접적 통제, 정보기관 및 군의 역할 강화, 취업자의 노동권리 및 보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의 압력

등은 정치시스템의 질적 변화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포퓰리즘의 방향으로 정치적 기류가 흐른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없습니다. 어쨌든, 인터넷과 SNS의 확산 현상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아직은 사회의 정치적 삶과 정치 시스템의 작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변화는 정치제도 시스템의 기능과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그 정치적 의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눈에 띄는 세 가지 변화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본 사회에서 사회·경제적 개혁이라는 주제는 2순위로 물러났습니다. 이를 대신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 것은 경제와 사회의 기술적 기반에 나타나고 있는 미래의 혁명적인 변화라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되는 것은 로봇화, 인공지능, ‘스마트,’(여기서 스마트는 자동화되고 자가 학습이 가능한) 시스템, ‘사물인터넷’ 등으로, 이들은 기존의 많은 사회 문제, 예를 들어 사회 ‘고령화’, 일본 경제의 국제 경쟁력 저하, 과거 일부 자족 지역의 쇠퇴를 포함해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격차’ 확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법한 것들입니다.

둘째, 일본의 국제적 역할과 지위라는 주제가 정치 의제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 및 제도의 질서 속에서 일본의 자리와 역할이 무엇이라는 문제는 현재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그 속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유증을 극복할 필요성과 주제도 상기한 주제의 한 측면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패전국으로서 일본에게 부과된 군사정치 부문의 제

한 및 자기 제한으로부터의 구제도 포함돼 있습니다.

셋째, 국가방위에 대한 주제가 새롭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미일동맹이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다나가 자국의 안보와 국방 차원에서 일본이 자체 능력과 그 능력 향상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 되고, 그것이 다양한 정치 토론에서 더욱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토론에서 일본을 위한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은 일본이 ‘일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런 까닭에 국제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더욱 중요성이 강대국의 나가요 한다는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이때의 강대국은 자체적으로 막강한 군사적 잠재력을 가지고, 자국 방어에 대해 가장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 라보프

오늘 원탁토론 프로그램의 마지막 지점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입니다. 이들 나라의 정치적 변화는 다중 방향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지역에 속한 모든 국가들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겠지만, 한편으로 동남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노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국가의 변화에 관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 카나예프

유럽 통합 프로젝트의 위기,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기의 점증적 확대, ‘통제된 혼돈’ 관행의 확산 및 체제 전환을 포함하는 오늘날의 세계화 과정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

ASEAN)에 속한 국가들에게 적합한 반응을 하도록 재촉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기존 정치 제도의 급진적 수정이 아니라, 엘리트층과 일반 시민 사이에서 변화에 대한 요구가 무르익는 것으로 구현됐습니다.

모든 아세안 국가의 엘리트층에서 정치적 통치력을 유지하는 핵심 조건으로서의 ‘건설적 권위주의’의 요소를 강화하자는 요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가 된 것은 브렉시트, 이슬람 국가(IS)의 활동 및 2014년~2016년 유럽 연합 국가들에서 일어난 이민정책과 다문화주의의 실패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엘리트들은 무엇보다 정경유착 관계와 권력의 의인화 같은 전통적 정치 문화 요소에 더욱 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 대의 정치 제도의 약화를 초래합니다. 모든 수준의 사법 시스템이 입법권 및 행정권에 더욱 종속돼 가고 있으며, 권력분립 원칙은 점점 더 문서 상으로만 존재하는 허구가 돼 가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에 정경유착 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는 것은 영국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2014년~2016년 ‘정실 자본주의 순위(Crony Capitalism Index)’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권력 기구와 가까운 경제 부문들에 의해 생산되는 GDP의 비율을 자료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이 각각 2위, 3위, 4위, 7위,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관심 대상으로서 ‘유익한 거버넌스’는 1997년~1998년 이후 더욱 눈에 띄게 인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진자가 ‘아시아적 가치’의 방향으로 움직인 것입

니다. 자유민주주의 패러다임은 경쟁력이 없으며 인도주의적 개입만 촉진한다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이렇듯 한편으로는 ‘나사 조이기’ 원칙에 따른 동남아 정치 공간의 수평화가 진행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남아 발전 모델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모델과 의도적으로 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낮은 경제 기반’과 엘리트층에 의해 추가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2015년 4.7%(이중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및 미얀마가 6.9%)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는 등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10개국의 총 GDP는 프랑스의 GDP를 조금 넘을 뿐이며 독일과 영국의 GDP보다 적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가까운 몇 년 안에 또 한 차례의 현대화 도약을 실현하고, 유럽 국가들과의 격차를 줄이려 노력할 것입니다. 자원 동원은 ‘아시아적 가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민사회 수준에서는 상반되는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도록’ 진두지휘하는 ‘강한 손’에 대한 요구보다는 제대로 가동하는 사회적 엘리베이터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유권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동남아 국가 인구의 평균 연령은 29세)과 도시화의 과정과 관련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 덕분에 사람들은 정경유착이라는 익숙한 관계에서 벗어나 새롭고, 재정적, 사회적 전망에서 더 매력적인 관계로 편입되는 것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사람들의 교육적 지

평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에게 변화는 커다란 사회적 동요와 동일하게 여겨지지만, 동남아 국가의 젊은 청년층에게는 변화에 대한 공포가 그리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사회적 분열은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도 일어납니다. ‘전 국민의 지지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들이 절대적 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와 일반 시민이 바라는 변화에 대한 요구가 일치한 유일한 예는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필리핀 대선에서 승리한 경우입니다. 두테르테는 ‘강한 손’에 대한 유권자들의 향수를 포착해 ‘국가 구원’ 이슈를 중심으로 대선 캠페인을 조직하고, 자신이 금융계 거물 및 사건과 관계되지 않았으며 그렇게 때문에, 필리핀을 위해 놀랄만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로 포지셔닝했습니다. 두테르테는 소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그 덕분에 노동 이민자와 대도시권 주민의 표를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능력 있는 관리자를 위해 사회적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정부패 및 정실인사를 연상시키는 필리핀의 경직된 정치 시스템에 국민들이 과도하게 피로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의 예는 동남아 국가의 엘리트들이 무르익은 개혁을 자국에서 연이어 시행하도록 추동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무르익은 개혁 중 하나는 차기 선거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전망에서 안정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사회 문제, 민족 간 문제 및 종교 간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의식 있는 차세대 정치 지도자를 육

성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과제는 하급 행정기관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 발생 수준에서 합리적 수단을 바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국가의 대기업과 관련해 다국적 대기업이 동남아에 관심을 보이는 동안, 동남아 국가들은 자국의 투자매력도를 높여야 하는 역할도 있지만, 사업 운영을 위해 정치적 행정적 여건을 최적화 하는 등 종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경유착 관행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적 제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동기가 정치적 개혁의 대전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에서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이 보장될 수 없으며, 따라서 동남아 국가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변방지역의 민족 분리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필요한 개혁을 연기하거나, 엘리트의 변화 의지와 미래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 사이에 나타나는 불일치는 지배엘리트가 새로운 발전을 위한 어젠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의식이 성장하고 구성원의 요구가 증대하는 가운데 단순히 '나사를 조이고' 과거의 공적에 호소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엘리트의 아이디어나 그들의 실제적 행동 수준에서 아직까지 매력적인 사회·정치 프로젝트가 유권자들에게 제시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로고지나

이러한 결론은 태국에도 온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50년간 태국의 정치적 발전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경향이 상호

갈등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다시 일어난 군사쿠데타는 태국에 권위주의 체제가 또다시 수립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태국의 현 정치 상황은 전통적 정치 엘리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활용하는 정경유착 관계의 사회·경제적 맥락과 전통적 사회조직의 생존 가능성을 외면한 채 검토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관료 지배체제'라고 불리는 태국의 이 같은 정치 구조 모델은 일부 수정을 거쳤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치 시스템이 안정됐다고 해서 정치 시스템의 발전에 역동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역동성은 무엇보다 자본주의적 현대화와 세계화라는 공간적 경계가 확대되는 상황 하에서 일어나는 사회 구조상의 변화에 기인합니다.

군부독재에 마침표를 찍은 1973년~1976년 태국의 '민주주의 실험'은 민간 기업의 경제적 지위 강화 및 군부 지도부를 의사결정 수준에서 몰아내려는 민간 기업의 노력과 연관돼 있습니다.

자유화를 향한 정치 시스템 변화의 두 번째 단계는 1980년~1990년대에 해당하며 도시 중산층 및 국가 부르주아의 형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치적 결과는 정당 시스템과 권력의 제도로서 견고화된 의회의 출현입니다.

이제 태국의 정치적 상황은 권위주의 경향과 민주주의 경향의 공존에 의해 결정됩니다. 권위주의적 통치 형태의 유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관료와 군부, 그리고 정치 제도의 자유화를 갈망하는 신흥세력 부르주아, 이 두 세력의 상

대적 균형에 기반한 소위 절충적 정치 발전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 권력의 형태는 그 내적 균형이 무너질 경우 정치적 상황의 불안을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 탁신 친나왓이 그가 속한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해 그가 태국의 총리 자리를 차지하게 됐을 때가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그의 손에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이 지나치게 많이 집중되자, 기존 정치 엘리트의 권력, 나아가 군사관료적 온정주의 집단들의 경쟁을 통해 유지돼 온 태국 정치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 군사쿠데타로 탁신 친나왓이 경질되고 그가 국외로 추방됐지만, 태국 사회에서 그의 영향력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와 연관된 정당들은 이전에는 정치 과정에 포함되지 못했던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모든 의원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들은 태국 북동부와 북부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 있는 소위 '최하위 중산층', 또는 '농민 중간계층'인데, 바로 경제 현대화와 세계화의 산물입니다.

대의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이 같은 새로운 계층이 형성됐다는 사실로 인해 태국 정치 세력의 전체 지형도는 바뀌었고, 그 결과 태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나타났습니다. 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사실은 사회 구성원들의 이데올로기가 분열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분열은 인구 대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제 민주주의가 강화된 결과인가 혹은 기존 정치 엘리트 중 소수가 나라를 통치하는 현상 유지의 결과인가라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상

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미래의 전망은 어떨까요? 기존의 정치 권력기구를 위해 현상유지를 강화하는 여러 조항을 담고 있는 새로운 헌법개정안에 대해 찬반 국민투표(2016년 8월 시행)의 결과로 놓고 보면, 향후 태국 정치 발전이라는 선택의 길에서 승리한 측은 '교조 민주주의' 지지자들입니다.

태국 총선은 2017년 말로 예정돼 있지만, 새 법에 따르면 민정 이양을 위해 5년의 과도기를 거치도록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군부가 국가를 통제합니다. 군부가 약속한 것처럼 새 헌법이 태국 사회의 정치적 화해로 이어질까요?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정치적 여건에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사회 내 반대 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치체제가 가진 기회가 훨씬 우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입니다.

필시 태국에서는 앞으로 5년 내에 권위주의 쪽으로 크게 편향된 절충적 정치발전 모델이 등장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축소된 형태로 존재하겠지요. 실제로 태국식 정치 모델은 1990년대 출발했던 지점으로 회귀하고 있지만, 그때와 단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정치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소위 '최하위 중산층'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향후 시행되는 정책의 개방성과 사회적 지향성을 기존 권력층에 더 많이 요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정치적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 특신

역내 다른 국가들에는 심각한 정치적 '난기류'가 있는 데 비해, 베트남의 정치 시스템은 안

정태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스스로를 사회주의 국가로 칭하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5개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쿠바와 북한, 라오스처럼 침체된 국가에는 분명 포함되지 않습니다. 1986년 12월 집권당 베트남 공산당의 제6차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결정에 따라 '사회주의 지향의 시장경제' 건설이라는 역사적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이는 당시 선포된 '개방과 쇄신'(도이머이 정책 - 역주) 정책에 표현돼 있으며, 이 정책은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힘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실험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쇄신을 통해 베트남은 세계 최빈국에서 벗어나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중간 소득을 가진 국가의 대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베트남에서 자본주의 발전 모델과 사회주의 발전 모델이 융합되는 것을 목격했고, 다른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실험에서 모종의 '인간의 얼굴을 가진 유교적 자본주의'의 건설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을 만든 베트남의 이론가들은 그들이 추진하는 모든 개혁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주의의 건설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실제로 이 정책을 관통하는 핵심은 '민부, 강국, 공평·민주·문명 사회'라는 쇄신 정책의 기본 좌우명에 표현돼 있습니다.

세계화와 정보혁명의 영향 하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대외 개방이 진행되면서 베트남 공산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권위주의적 정치 시스템도 자연스럽게 정치 체제의 민주화와 자유화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야당은 여전히 금지돼 있습니다. 공산당의 유일

한 영도적 역할이 2013년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타 집단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탄압은 없습니다. 베트남 집권당인 공산당은 사회 내 개방과 상호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베트남 사회가 혼합 시장경제의 부산물과 함께 소득 불평등, 부자와 빈자의 구분, 다양한 계급과 계층의 이해 충돌을 함께 수용하는 것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 눈에 띄는 성공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권위주의적 정치 제도가 조금 민주화됐으나, 결코 서방식 민주주의의 구축을 위한 제도도 아니고, 이른바 부분적 민주화는 현 체제와 공산당의 영도적 역할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산당 지도자들이 민주주의라는 단어 자체를 서방에서 통용되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나, 이들은 권력기관에서는 물론 당 조직에서도 선거과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법원(사법부)의 독립에 찬성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 정치 문화의 영향 하에 있는 나라 전체에서 일당체제는 이상한 점이 전혀 없는 체제입니다. 유교적 전통에서 사회적 조화는 올바르게 구축된 사회적 합의에 의해 달성됩니다. 이 합의에 반대하는 자는 변절자로 여겨집니다. 권력의 정통성은 그 출신이 아니라,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효율성에 의해 좌우됩니다. 공산당이 사회 평화와 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한, 공산당에게는 베트남 국민 대다수가 정당하게 여기는 '천명'이 있을 것입니다. 공산당의 정치 독점과 혼합 시장경제는 아직 대척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베트남 지도자들은 중국 지도

자들의 뒤를 이어 낡은 개념들을 무시하고 절대적 진리의 핵심 기준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세계화와 정보혁명, '지식기반 경제'에 그들은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공적일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당 스스로도 변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 신자, 민간 기업의 관리자 및 심지어 소유자에게도 문을 열어주었고,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의 수단이라는 당의 역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그 누구도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지도자는 당, 주인은 국민, 관리자는 국가라는 공식에 따라 통치와 행정의 메커니즘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공산당 정치 지도부는 전체 당 조직 및 국가 조직을 통솔하는 몇몇 사람의 손에 집중돼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당내 권력 집중이 공산당이 과거와 현재에 거둔 성공 때문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베트남의 여론에서 볼 때 일당체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부패, 관료주의와 정실주의입니다.

2015년부터 베트남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중앙위)는 임기 중 중앙위 정치국 및 서기국 위원에 대해 신뢰도 측정 순위투표를 시행합니다. 순위투표는 베트남 국회 및 기타 관리기관의 관행으로 더욱 폭넓게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50% 이상의 반대표를 2회 받은 모든 당국자는 자동적으로 해임됩니다.

공산당 지도부는 법에 의해 움직이는 엄격한 '사회주의 법치국가'의 건설 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도부는 정치적 다원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부정합니다. 서방식 민주주의의 속한 이러한 기본 요소들은 베트남의 현 권력 시스템과 맞지 않으며, 정치적 안정, 국가의 문화 및 정체성을 파괴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실제 '토론의 장'이 된 국회는 확연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의 역할과 권한이 증대했고, 의원 대부분이 이미 상근직 의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거 시스템이 진일보하고 있으며, 한 자리의 공직을 두고 최소 3인의 후보가 서로 경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면서 이미 약 20%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공산당원이 아닙니다. 국회의 대정부 질문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됩니다. 각 의원이 본인의 인터넷 사이트를 갖고 있고, 유권자들은 이곳에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은 의무입니다.

쇄신과 함께 베트남에 새로운 엘리트 계층인 '붉은 자본가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미 백만장자도 있습니다. 이들이 권력층과 함께 적지 않은 수익을 벌어들일 뿐만 아니라 서로 경쟁하면서 '이익 다원주의'라는 새로운 환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력은 협소한 정치체제의 틀과 권한이 없는 당 지도자들에 의해 이뤄지는 통제를 벗어나려 더욱 노력합니다. 이 모두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난 시점은 2016년 1월 제12차 전당대회에서 베트남 공산당 내 다양한 정치집단이 첨예하게 충돌한 사건입니다. 전당대회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지자들보다 보수 측이 우위를 점하면서 끝났습니다. 전당대회에서 지도부는 엄격하게 계산된 민주화 과정의 실현을 공산당이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 국가적 갈등 및 기타

갈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정치 발전 모델을 계속해서 모색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관련해 베트남에서는 ‘돌을 더듬으며 강을 건넌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공산당 추진하는 노선은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으며, 당은 국내 상황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매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 라보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슬람 급진주의 세력으로부터 예상되는 심각한 위협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슬람 요소는 역내 국가들의 정치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 로그지나

동남아시아에는 약 2억 5천만 명의 이슬람교도(전 세계 이슬람교도의 15%)가 살고 있으며, 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입니다(전체 인구 2억 5천 7백만 명 중 이슬람교도 수가 2억 2천만 명을 넘음). 이슬람 분리주의 집단에 의해 이슬람교가 반정부 투쟁의 슬로건이 된 태국 및 필리핀 남부 지역과 달리,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교가 지배적 종교이며 민주주의와 적절하게 양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 세속적 체제들이 유지하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은 이슬람화 과정에 의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슬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은 다국적 테러입니다.

이 국가들의 발전에 미치는 IS의 영향은 직접적으로는 극단주의 이슬람 증가와 테러 위협이 고조된다는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정치적 운동에서 이슬람 과격주의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역내 IS 영향력의 확산 위협은 일차적으로 국제 테러 조직과 오래 전부터 접촉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 칼리프에 충성을 맹세할 준비가 돼 있는 강력한 지도자들이 가진 조직들이며, 이차적으로는 이러한 이념에 영향을 받기 쉬운 IS 전투원들이 각자의 조국으로 복귀해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에 따라 IS 지지자의 수가 증가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이곳 동남아시아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2016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났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는 사전에 테러가 방지됐습니다.

한편 중동에서 IS가 ‘승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패배’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가 계산되고 있습니다. 승리든 패배든, 높은 수준의 테러 위협을 동반하는 동남아의 근본주의 운동에 IS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가장 큰 위협은 IS의 이데올로기에 고무된 소위 ‘외로운 늑대들’로부터 발생합니다. 이들은 전직 IS 전투원일 수 있고, 개별적인 급진주의를 지향하는 이슬람교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단결시키는 것은 살라피즘(이슬람 근본주의 - 역주), 이데올로기적 맹신, 세속적 민주주의 거부입니다. 그리고 ‘다울라 이슬라미야 누산타라(Daulah Islamiyah Nusantara)’라는 명칭 하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과 필리핀 남부에 이슬람 칼리프 국가를 수립하겠다는 투쟁 목표입니다. 이는 이 지

역에 자신들의 거점을 강화하려는 IS의 계획과 부합합니다. 그리고 비록 동남아시아에 칼리프 국가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테러가 확산되면서 이슬람 공동체가 빠르게 급진화 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이슬람 국가들에게 이러한 위험성은 심각한 정치적 후유증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런 후유증 때문에 사회 내 종교적 편협성이 발현될 때 나타나는 사회적 분열, 취약한 민주주의 체제의 파괴라는 부정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로 외부로부터 촉발돼 동남아 이슬람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급진주의 위험은 다른 종교의 신자와 타민족에게 적대적인 수니파 공동체의 보수파가 갖고 있는 이념적·정치적 입장이 강화되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물론 말레이시아에서 (시아파 박해 및 다른 종교 신자 탄압에도 불구하고) 온건 이슬람교의 바탕이 되는 관용사상은 세속 국가가 존재하는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용사상이 배타적인 이슬람 정체성을 표방하는 이념의 영향 하에서 변형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민주주의의 국가 건설의 기본 원리로서 작용하는 국적이라는 개념이 바뀌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말레이시아에서도 외부적 요인(중동 국가들의 이슬람 근본주의 이데올로기 수출)은 물론, 내부적 요인(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내부 정책의 실패)의 영향 하에서 이슬람교의 정치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몇몇 살라피즘 원리가 집권당 통일 말레이국민조직(The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UMNO)의 정책에 포함되는 것

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UMNO는 말레이시아 이슬람교도의 이익을 다른 종교 및 민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슬로건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교도를 종교적 배타성이라는 이슈에 관심을 두게 만들면, UMNO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나온 이유는 사회 내 민족·종교 간 긴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이러한 긴장이 극단주의적 형태로 표출되지는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다릅니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 시기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온건 이슬람교의 힘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유도요노는 이슬람주의 조직들의 활동을 위한 정치적 공간을 부분적으로 개방했기 현재 이 조직들은 대표적 온건파 이슬람교 기구들(나흐다툴 울라마(Nahdlatul Ulama)와 무함마디야(Muhammadiyah)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 내 IS 영향력 확산을 저지하는 전쟁에서 이들에게 기대를 걸면서, IS의 이데올로기를 인도네시아 종교인 이슬람 누산타라와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동남아의 이슬람 국가들은 입헌주의 기반의 세속 정부 지지자들과 다원주의적 민주국가와 투쟁을 위해 이슬람교를 이용하는 세력으로 분열되는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국적 테러가 확산되면서 사회 내 이러한 정치적·종교적 분리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형성되는 종교적 불관용 분위기는 오히려 IS 이데올로기의 대중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 라보프

이제 종합적으로 몇 가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토론이 소결론을 위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가정 하에 말입니다. 제 생각에 오늘 우리의 토론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 정치 체제의 다양성과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아태지역 국가들이 서방식 민주주의 모델로 확실하게 전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방향에서 어떤 역동성이 탐지되지만,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전환에 가장 가까워진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의 정치 시스템이 더 멀리 '서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내재돼 있는 심각한 제도적,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대한 대한민국의 발전 전망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토론 참가자들께서 생각하시듯이, 북한의 정치 시스템은 진화와 개혁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점들' 사이에 국내정치 변동 속도가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나머지 역내 국가들이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이 갖는 핵심 문제는 현재 추진하는 경제 개혁을 사회·정치적 안정 유지 및 집권 공산당의 권력 보존과 양립시키는 것입니다. 태국의 경우는 새로운 사회 계층을 전통적 정치 과정 구조 속으로 포함시키는 과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경우는 현존 정치 기구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감을 어떻게 풀어가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배열 속에서 다소 홀로 떨어져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역내 국가 중 발전된 민

주주의가 자리잡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치적 문제는 오히려 다른 측면, 기술적 지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미헤에프

저는 장기적 전망에서 서방식 정치 체제의 민주주의 모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공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및 기타 요인들에 기인한 국가별 특성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타났듯이, 일본과 대한민국 같은 '서방식' 국가들조차 나름의 국가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도, 아세안 국가들도, 나아가 북한도 첫째, 시장개혁에 따라 정부 당국과 다른 정치적 요구를 가진 독립적인 경제 이니셔티브가 증가하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둘째, 그렇다고 국가가 국제적 정치 및 경제 지형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조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치 모델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토론의 시작에서 제기된 역내 독재주의 및 민주주의 연합 가능성에 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위주의와 '아시아적 가치'는 먼저 각 나라가 자신들의 국내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장기적으로 동맹할 수 있는 객관적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시장이 발전하고 대외적으로 통합과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권위주의와 '아시아적 가치'에는 시나리오에 따라 변화하고 희석되는 방향으로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논의했듯이, 향후 독재와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발전에서 완전한 보편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국가

적 차이와 역사적 차이는 존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비춰 볼 때 제 생각에는 아태지역에서 독재 동맹은 있을 수 없으며, ‘아시아적 가

치’는 비록 부분적으로 역행과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보편화된 문명적 방향으로 점차 변화할 것입니다.

## • 토론 참가자

보로호 (Борох О.Н.), 경제학 박사,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책임연구원

비노그라도프 (Виноградов А.В.), 정치학 박사,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책임연구원

다비도프 (Давыдов О.В.),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선임연구원

카나예프 (Канаев Е.А.), 역사학 박사, 고등경제대학교 교수

카르네예프 (Карнеев А.Н.), 역사학 박사, 모스크바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 국가연구소 부소장

레온티예바 (Леонтьева Е.Л.), 경제학 박사,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수석연구원

록신 (Локшин Г.М.), 경제학 박사,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책임연구원

로마노프 (Ломанов А.В.), 역사학 박사,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수석연구원

미헤예프 (Михеев В.В.),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정회원,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

로고지나 (Рогожина Н.Г.), 정치학 박사,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책임연구원

랴보프 (Рябов А.В.), 역사학 박사, ‘세계경제와 국제관계’ 학술지 편집장

표도롭스키 (Федоровский А.Н.), 경제학 박사,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부장

시빗코 (Швыдко В.Г.), 경제학 박사,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부장

· 원제: РЕАКЦИЯ ПОЛИТИЧЕСКИХ СИСТЕМ СТРАН ТИХООКЕАНСКОЙ АЗИИ НА ПРОИСХОДЯЩИЕ ИЗМЕНЕНИЯ И НОВЫЕ ВЫЗОВЫ(2).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Vol. 61, No. 8 (ИМЕМО, 2017), pp. 115-127.

· 번역: 이정화(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

#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한·러 국민 인식의 변화: 뜨는 러시아와 지는 중국

---

최우익

---

한국의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는 러시아여론조사센터(ВЦИОМ(프치옴))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2017년 7월 19~30일 한국과 러시아 양국 국민 상호인식조사를 벌였다. 이 설문조사는 양국의 설문조사 전문 기관을 통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는데, 2016년 1회가 시작됐고 올해 2회째를 맞이하였다. 2017년 설문조사는 인터넷과 전화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대상 규모는 러시아 국민 1,200명, 한국 국민 1,000명이었다. 응답자 선정은 성별, 연령별, 교육 수준 및 거주지에 따른 층위별, 무작위 방식에 따랐다. 설문조사의 주요 목적은 한국과 러시아 양국 간 협력 잠재력, 협력의 장애 요인, 향후 협력 방향 등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 주변국인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상대 국가에 대한 한·러 양 국민의 1년간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설문 문항 전체 중 한국 국민과 러시아 국민의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인식 내용을 담고 있는 문항은 모두 세 개가 있다. 3개 문항의 내용과 초점은 각기 조금씩 다른데, 각 문항의 응답 내용에서 2016년과 2017년 사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표 1>은 한국 국민과 다른 나라 국민이 신뢰(호감) 관계인지 불신(반감) 관계인지 한국 국민에게 묻는 질문이다. 2016년과 2017년 한국 국민과 신뢰 관계라고 여기는 비율이 높은 국

민의 순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순이다. 또한, 반대로 불신 관계라고 여기는 비율이 높은 국민은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순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한국 국민이 중

<표 1> 한국 국민과 아래 국가 국민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선택, 단위: %)

국가	긍정적이며 신뢰와 호감이 있는 관계		부정적이며 불신과 반감이 있는 관계		신뢰도 없고 반감도 없는 중립적 관계		잘 모르겠다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러시아	13.4	7.7	15.0	18.3	59.6	59.7	12.1	14.3
미국	73.8	65.0	7.0	8.4	14.9	21.8	4.3	4.8
중국	25.5	8.0	31.1	48.5	37.4	37.4	6.0	6.1
일본	11.8	6.2	64.6	72.5	19.4	18.1	4.2	3.3

국 국민과 불신 관계라고 여기는 비율이(2017년 48.5%) 러시아보다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점이다(2017년 18.3%). 그런데 이것은 한국 국민이 러시아 국민과 중립적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꽤 높다 보니(2017년 59.7%) 러시아 국민을 부정적 관계로 보는 비율이 낮아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순서들은 1년 사이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1년 사이 다른 중요한 변화가 생겼는데, 한국 국민이 한반도 주변국 국민과 신뢰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모두 낮아졌고, 동시에 불신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모두 높아졌다는 점이다. 중국 국민과 신뢰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낮아졌으며(18%p 감소), 중국 국민과 불신 관계라고 생각

하는 비율은 반대로 가장 큰 폭으로 높아졌다(17%p 증가). 미국, 일본 국민과 신뢰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도 낮아졌다(각각 9%p, 6%p 감소). 러시아 국민에 대해서도 6%p 감소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하락 폭에 속한다. 러시아 국민과 중립적 관계라고 생각하는 한국 국민의 비율은 2016년과 2017년 모두 60%에 달하는데 이점은 다른 국민들에 대한 인식과 비교할 때 큰 차이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설문 응답 내용에서 무엇보다도 1년 사이 가장 큰 변화를 지적한다면 그것은 바로 중국 국민과 신뢰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낮아졌고, 불신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반대로 가장 큰 폭으로 높아진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아래에는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경제 영역에서 이 국가들이 각각 한국과 경쟁 관계인지, 아니면 협력 관계인지 표시해주세요.

(단수 선택, 단위: %)

국가	경쟁 관계다		협력 관계다		잘 모르겠다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러시아	26.8	24.4	40.6	37.8	32.6	37.8
미국	13.0	22.4	82.8	73.3	4.2	4.3
중국	44.8	70.0	47.0	25.3	8.2	4.8
일본	69.5	79.7	21.9	16.9	8.5	3.4

<표 2>는 경제 영역에서 한반도 주변 국가가 한국과 경쟁 관계인지, 협력 관계인지를 한국 국민에게 묻는 질문이다. 2016년 한국 국민이 경제영역에서 협력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의 순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순이며, 반대로 경쟁 관계로 보는 비율이 높은 국가의 순서는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순이다. 이것은 <표 1>의 양상과 유사하다.

그런데 2017년에는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한국과 협력 관계로 보는 비율이 높은 국가의 순서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2016년에는 중국과(47.0%) 협력 관계로 보는 비율이 러시아보다(40.6%) 높았지만, 2017년에는 러시아와(37.8%) 협력 관계로 보는 비율이 중국보다(25.3%) 높은 것이다. 물론 2017년에도 한국 국민이 경제 영역에서 협력 관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여전히 미국(73.3%)이지만, 러시아를 협력 관계로 보는 한국 국민의 비율은 37.8%로 이것은 중국(25.3%), 일본(16.9%)보다 꽤 높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표 1>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한국 국민의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체적으로 강해진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2017년 미국을 경제 영역에서

서 경쟁 관계로 보는 비율은 9%p, 중국은 무려 25%p, 일본은 10%p 증가했고, 반면 협력 관계로 보는 비율은 미국은 10%p, 중국은 무려 22%p, 일본은 5%p 감소했다. 한편 러시아를 경쟁 관계로 보는 비율은 오히려 2%p 감소했고, 협력 관계로 보는 비율은 3%p만 감소해 미국·중국·일본에 대한 인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무엇보다도 중국을 경쟁 관계로 보는 인식이 가장 강해졌고, 협력 관계로 보는 인식이 가장 약해졌기 때문에 이 틈새에서 러시아를 협력 관계로 보는 한국 국민의 비율이 중국보다 더 높아진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표 2>에서 1년 사이 일어난 중대한 변화를 꼽자면 경제 영역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심리가 매우 커졌지만, 한국 국민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뚜렷한 인식의 변화를 보이지 않아 상대적으로 러시아를 협력 관계로 보는 비율의 순위가 높아진 점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 중 주목할 것은 러시아가 한국과 어떠한 관계인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6년과 2017년 모두 약 1/3로서 한국 국민은 다른 나라에 비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다는 점이다.

<표 3> 다음 국가들과의 협력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부합하지 않나요?

(단수 선택, 단위: %)

국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러시아와의 협력	71.7	64.8	7.6	16.9	20.7	18.3
일본과의 협력	55.8	41.5	27.3	47.2	16.9	11.4
중국과의 협력	78.4	71.2	11.9	20.2	9.7	8.6
미국과의 협력	82.1	77.6	8.2	15.0	9.7	7.4

<표 3>은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한국 국민에게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특정한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 차원에서 이들 국가와의 협력이 한국에 이익인지 아닌지를 한국 국민에게 타진하고 있다. 한국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2016년과 2017년 모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순이다.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높은 국가의 순서는 2016년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순이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러시아보다(2016년 7.6%) 미국을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나라로 보는 한국 국민의 비율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2016년 8.2%). 그런데 이 경우 역시 정말 미국이 미덥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러시아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 비율이 20.7%로 높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협력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낮아져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7년에는 이 비율의 순서가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순으로 미국과의 협력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왔다.

<표 3> 역시 <표 1>, <표 2>와 유사하게 2017년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강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들 국가와의 협력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비율은 모두 낮아졌으며, 반대로 이들 국가와의 협력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모두 높아졌다. 일본과의 협력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016년에 비해 2017년 20%p나 증가했고 러시아는 9%p, 중국은 8%p, 미국은 7%p 증가

해, 이 질문에서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가장 강해졌다.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 폭은 중국과 미국보다 조금 큰 편이다. 하지만 절대 수치 면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7%, 중국은 20%, 러시아는 17%, 미국은 15%로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미국 수준으로 약한 편이다.

위 세 문항의 응답 내용을 종합할 때 2016년과 2017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 문항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이 꽤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이유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사드 한국 배치, 중국의 한국 경제 제재와 한-중 관계 악화, 일본 아베 신조 총리 내각의 보수화, 북한의 계속된 도발 등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매우 복잡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복잡한 긴장 국면 속에서는 한국 국민의 주변국들을 경계하고 견제하는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 폭은 다른 나라들보다 꽤 작은 편이다. 이것은 러시아가 미국, 중국, 일본보다 한반도 주변 정세에 상대적으로 덜 개입해서일 수도 있지만,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원하는 양국 국민 정서가 배경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더 상세히 밝힌다.

한편,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 폭이 작은 또 다른 이유는 러시아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이 아직 뚜렷하게 자리 잡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세 문항 모두에서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보다 러시아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한국 국민에게 러시아는 아직 정체가 불분명한 국가임을 보여주는 징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부정적 요소라기보다 한국 국민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래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여지를 바탕으로 한·러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한반도 주변국에 대한 한국의 다양한 대처 방식을 늘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위의 세 문항과 관련한 러시아 국민의 한국, 일본, 중국에 대한 인식은 2016년과 2017년 사이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강해졌고, 부정적 인식이 약해졌다는 점이 비교적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편이다.

‘러시아 국민과 한국 국민이 긍정적이며 신뢰와 호감이 있는 관계’라고 응답한 러시아 국민의 비율은 2016년 35%, 2017년 37%이다. 이 문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러시아 국민의 응답은 ‘신뢰도 없고 반감도 없는 중립적 관계’로 2016년 54%, 2017년 49%이다. 한국 국민

의 이 비율은 <표 1>에서 본 것처럼 약 60%인데, 이처럼 양국 국민의 과반수 정도가 양국 관계를 ‘중립적 관계’로 여기고 있다.

‘경제 영역에서 한국은 러시아와 협력 관계’라고 생각하는 러시아 국민의 비율은 2016년 55%, 2017년 49%이다. ‘한국과의 협력이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러시아 국민의 비율은 2016년 56%, 2017년 59%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적어도 러시아 국민의 과반수는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문항 모두에서 부정적인 응답 비율은 20% 이하로 나타난다.

따라서 위 세 문항에서 나타나는 한국 국민과 러시아 국민의 응답 내용을 모두 종합할 때 양국 국민은 상대를 긍정적인 파트너로 인식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위 세 문항은 여러 국가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긍정적인 반응은 한국과 러시아 양국만을 제시하면서 답변토록 하는 몇몇 다른 문항들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표 4>에 따르면 2017년 한·러 관계를 ‘우호적’, ‘우호적인 편’으로 보는 한국 국민의 비율은 44%, ‘비우호적인 편’으로 보는 비율은 33%로

<표 4>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단수 선택, 단위: %)

	한국 국민	러시아 국민
	2017년	
우호적이다	4	21
우호적인 편이다	40	40
비우호적인 편이다	33	5
완전히 비우호적이다	0	1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15	28
잘 모르겠다	8	5

<표 5> 최근 1~2년 사이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가 전체적으로 좋아졌다고 보나요, 나빠졌나요, 변함 없나요?

(단수 선택, 단위: %)

	한국 국민		러시아 국민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좋아진 편이다	17	18	24	28
나빠진 편이다	15	17	5	7
변함이 없다	44	45	46	46
잘 모르겠다	24	19	25	19

양국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더 높다. 러시아 국민의 '우호적', '우호적인 편'은 61%, '비우호적', '완전히 비우호적'은 6%로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표 5>에 따르면 최근 1~2년 사이 양국 관계에 변함이 없다고 보는 한국 국민의 비율은 2016년 44%, 2017년 45%, 러시아 국민은 두 해 모두 46%로 양국 국민 모두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이렇게 응답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가 복잡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에 대한 국민 인식에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좋아진 편'이라고 답하는 양국 국민의 비율이 '나빠진 편'이라고 답한 비율보다 높은 것도 양국 관계를 바라보는 양 국민의 긍정적 시각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6> 한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정치 경제 등 주요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수 선택, 단위: %)

<표 6>을 보면 한국과 러시아가 '이미 전략적 동반자'이거나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6년에 비해 2017년 조금 낮아졌지만(한국 국민 3%p 감소, 러시아 국민도 3%p 감소), 두 해 평균 한국 국민은 약 75%, 러시아 국민은 약 65%가 이러한 생각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의견은 두 해 양국 국민의 평균치가 12%에 불과하다.

<표 7>을 보면 한-러 FTA 체결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 '지지하는 편'이라고 긍정적으로 여기는 한국 국민은 61%이며, 러시아 국민은 85%에 달한다. 이 표 외에 유사한 또 다른 문항들에서도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필요

<표 6> 한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정치 경제 등 주요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단수 선택, 단위: %)

	한국 국민		러시아 국민	
	2016년	2017년	2016년	2017년
두 나라는 이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다.	8	10	13	12
아직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	69	64	53	51
그렇게 될 수 없다.	7	11	14	16
잘 모르겠다	16	16	21	21

<표 7> 귀하께서는 한국과 러시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지지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단수 선택, 단위: %)

	한국 국민	러시아 국민
	2017년	2017년
전적으로 지지한다	13	35
지지하는 편이다	48	50
반대하는 편이다	7	4
완전히 반대한다	0	3
잘 모르겠다	32	7

하며 바람직하다는 양국 국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한국 국민의 비율은 2016년 75%, 2017년 78%에 달한다. 러시아 정부가 주도하는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어느 나라 기업과 투자 유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러시아 국민은 2016년과 2017년 모두 중국, 일본 다음으로 한국을 꼽는다. 비록 한국이 세 번째 국가로 지목되지만, 이것은 유럽 국가들과 미국보다 앞선 순위이다. 이처럼 한·러 국민은 양국 경제협력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

반면 양국 관계 발전에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으로는 한국 국민과 러시아 국민 모두 ‘국제정치 상황’을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목했다. ‘양국 관계의 발전에 무엇이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2개 이하 선택)?’라는 질문에 한국 국민은 2016년 58%, 2017년 52%가 ‘국제정치 상황’이라고 답했다. 러시아 국민은 2016년 31%, 2017년 35%가 이렇게 답했다. 이러한 인식들을 종합할 때 대체로 한·러 양국 국민은 양국의 경제협력이 서로 필요하지만, 국제정치 상황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서도 본 것처럼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서로에 대한 양 국민의 긍정적 인식이 유지되는 양상을 볼 때, 국제정치 상황이 양국 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절대 요인은 아닐 것이다. 양국 국민의 신뢰와 호감은 이러한 복잡한 국제정세의 난관을 헤쳐 나가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9월 6~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3차 동방경제포럼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한·러 정상회담도 열렸는데 양국 간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포럼이 개최되기 전 9월 4~5일 이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이 한국과 러시아 언론을 통해 보도됐는데, 이것이 양국 정상회담을 위한 유익한 자료가 됐기를 바란다. 문 대통령은 신 북방정책을 천명하면서 남북 관계와 상관없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그 자체를 목표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한·유라시아 FTA 체결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도 이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 외에도 양국이 극동지역에서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남북관계에 막혀 한·러 협력을 진행하지 못했던 과거와 달리 역으로 한·러 협력을 먼저 추진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참

여를 견인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한·러 관계가 정상 궤도에 진입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정상회담의 내용은 상당 수준 양국 국민의 여론과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이어서 그 길이 험난해 보이지만은 않다.

한국 국민이 중요하게 여기는 국가를 꼽을 때 러시아는 미국, 중국, 심지어는 일본보다도

뒤편일 때가 많았지만, 일정한 국면 변화에 따라 러시아를 바라보는 국민 인식도 변화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발견한 점이 이번 설문조사 의 가장 큰 의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가 수행하는 이 설문조사가 한·러 관계 발전뿐 아니라 한국이 주변국과 대응하는 새로운 대안과 맥을 찾는 데에도 기여하기 바란다.

· 최우익,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교수

---

# 러시아 문화와 문화 정책의 특수성 - 러시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함영준

---

## I. 들어가는 말

과연 우리는 러시아를 알고 있는가? 미국의 2배 가까이 되는 광대한 영토를 지닌 유라시아 제국, 160여 민족이 모여 사는 다민족 국가, 무엇든 뿌리 채 뒤집어 놓는 혁명의 나라 러시아! 어쩌면 러시아는 세상에서 가장 모순적이며 불가사의한 나라일 것이다. 실제로 영토의 3/4이 동양에 위치하지만 서양을 지향하는 나라, 250 여년 간 몽골의 지배하에서 체득한 아시아적 전제와 유럽 문화의 세례를 동시에 받고 자라온 나라, 세계 최대 군사 대국이며 동시에 예술 없이는 살수 없는 나라, 당장 먹을 빵이 없어도 꽃을 사는 나라, 거리에서 아무도 미소 짓지 않지만 동시에 유머 없이는 견딜 수 없는 나라, 솔직함을 삶의 가치로 여기면서 동시에 그 속을 알 수 없는 음흉함을 지닌 나라, 우정을 위해 목숨을 내 놓지만 타자를 향한 보복은 잔인한 나라 러시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

할 수 있는가?

“러시아는 이성으로 이해 할 수 없다...  
러시아를 단지 믿을 수 있을 뿐이다.” (츄체프)

“빌어먹을, 벌써 오래전에 이성으로 러시아를 이해 할 수 있었어...  
러시아를 믿을 수는 있지만, 신뢰한다는 건 위험한 일이지” (구베르만)

러시아에 대한 이 두개의 극단적인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첫번째는 러시아 내부에서 혹은 러시아 연구자들에게서 자주 인용되는 저 유명한 19세기 중반의 시인 츄체프의 시이다. 시인은 늘 혼란스러운 유럽 문화를 구원할 노아의 방주로서 러시아를 바라보았다. 이 시는 20세기 내내 러시아의 메시아적 역할에 대한 슬로건으로 도입됐으며 푸틴이 외국 정상을 만나면 즐겨 암송

하는 구절이기도 하다.<sup>1)</sup>

두번째 시는 러시아 현대 시인인 이고리 구베르만의 시이다. 1992년 그의 ‘매일매일의 4행시’ 2권 9장에 나오는 이 시에서<sup>2)</sup> 그는 추체프적 러시아를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의 촌철살인과 거친 저항의 시들은 인터넷을 통해 발표하며 러시아의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있는데 특히 현대 러시아 진보적 지성인들의 지지와 러시아를 믿지 못하는 서구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추체프와 구베르만 사이의 간극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러시아를 이해하지 말고 믿어야 하는가? 아니면 믿지 말고 이성적으로 파악해야 하는가? 이미 이 두편의 시 속에서 마치 도스토예프스키가 밝힌 러시아 영혼의 모순과 이율배반성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이 두 시인들의 의식 속에서 러시아의 비합리성과 러시아적 광기의 냄새를 동시에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문화라는 패러다임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문화야말로 한 민족, 혹은 국가의 모습을 규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러시아를 바라보는 이 극단적인 견해들을 문화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는 우리는 한발자국도 러시아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21세기를 문화의 시대이며 문화 전쟁의 시기라고 규정한다면 러시아와의 운명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러시아와 소통을 위한 준비와, 만남을 위한 노력 그리고 사궤

을 위한 전략은 필요해 보인다. 우리는 먼저 러시아의 문화의 특징과 독창성을 살펴본 후에 러시아 문화 정책의 함의들을 분석해 보고자 할 것이다.

## II. 몸 말

### 1. 러시아에서 문화란 무엇인가? - 경작과 숭배!

먼저 ‘문화’라는 언어의 어원과 그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문화는 라틴어 *colere*(정착하다, 경작하다, 개간하다)를 어원으로 ‘영혼의 경작’(*cultura animi*)이라는 전통 속에서 ‘문화=경작’이라는 공식을 얻게 됐다. 경작에서 출발한 ‘Culture’라는 서양의 이 단어는 그후 유럽은 물론 한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전 지구적인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문화는 이러한 서양의 보편 개념에 자신만의 의미론을 더한다. 사실 이것이 서구와는 또 다른 러시아 문화의 차별성이며 또한 러시아를 이해하기 위한 최초의 걸음인 것이다.

러시아에서 문화에 대한 용어는 흥미로운 과정을 겪는다. 러시아어로 ‘문화’(культура)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30년대가 지나면서이다. 실제로 ‘러시아의 모든 것’이라는 푸쉬킨에게서 조차 문화(culture)라는 단어는 발견되지 않는다.<sup>3)</sup> 푸쉬킨의 뒤를 이어 고골의 저작 속에서

1) 2007년 푸틴은 “러시아를 잘 알고 싶다”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시를 읽어 주었다. 2017년 4월 미디어포럼에서도 푸틴은 인터넷 통제에 대한 질문에 이 시로 대답하기도 하였다.

2) 사실 이 시는 구베르만 이전에 러시아 작가 유리 알레쉬쿱스키의 “아아, 친구야, 이성으로 러시아를 이해할 수 있어” (1981, 파리 잡지<구문론>)라는 문장을 변형시킨 것이었다.

도 ‘문화’라는 단어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때까지는 ‘문화’ 대신 우리가 흔히 ‘계몽(просвещение)’이라고 번역하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고틀은 이 개념의 러시아적 독창성에 대해 언급한다.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계몽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른 채 말이다. 이 단어는 다른 어느 나라 언어에도 없다. 단지 우리에게만 있다. 계몽하다(просветить: 러시아어로 직역하면 ‘빛이 통과 되는 것’- 필자 강조)는 가르치거나, 교육하고, 심지어 밝게 한다는 뜻이 아니다. (……) 이 단어는 우리 교회에서 천 년을 내려오며 사용되는 단어이다. 이는 계몽의 빛이며 그리스도의 빛이 모든 이를 비춘다는 의미이다.”<sup>4)</sup>

그러므로 ‘계몽’이라 번역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사실상 유럽에서 사용하는 ‘문화’와 ‘종교’, ‘교육’이 포함된 러시아적 특수성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단어인 것이다. 고틀이 바라본 문화로서 계몽이 ‘종교적 빛’이라는 개념은 이후 20 세기에 와서 새로운 영적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고틀의 이 개념에 주목한 이들은 러시아의 종교 철학자 베르자예프(Н. Бердяев)와 플로렌스키(П. А. Флоренский)이다. 이들은 ‘영적 문화’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문화라는 단어의 어원이 ‘colere-cultura(경작)’이 아니라 ‘cultus-

cultura(숭배)’라는 주장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이는 문화를 종교와 영적 세계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이들에 의하면 “문화는 그 어원인 ‘cultus-cultura(숭배)’에서 즉, 종교의 근원에서 나왔다.”<sup>5)</sup>

이렇듯 러시아에서 문화는 서구적 개념의 ‘경작’ 보다는 영적인 ‘숭배(cult)’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의 차이는 단순하지 않다. 만일 문화를 이해하는 방점이 ‘문화-숭배’에 적히게 될 때 이는 러시아를 이해하는 우리의 시점에 강한 시사점을 준다. 왜냐하면 문화가 숭배에 닿아 있을 때 그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이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공동의 ‘공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종교적 의식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미에 다름 아니며, 이 공감이야말로 러시아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뒤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 2. 러시아의 문화정책은 무엇인가? - 특수성과 절충주의!

러시아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플로렌스키는 언젠가 “인류의 21 세기는 문화라는 언어로 통합될 것이다”라고 예견한 바 있다. 실제로 그의 예견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온통 ‘문화’와 함께 하는 것 같다. 특히 세계화 시대를 이

3) См.: *Словарь языка Пушкина*(М, 1959), Т. 3. с. 836-837. 푸쉬킨은 이 말을 ‘계몽(просвещение)’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푸쉬킨은 이를 광범위하게 사용했는데 계몽이라는 단어 이외에도 ‘교양(образованность)’ 혹은 ‘문명(цивилизация)’도 사용했다.

4) Н. В. Гоголь,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9 т(М.: 1994), Т. 6. с. 71.

5) Н. А. Бердяев, *Смысл истории*(М.: 1990), с. 166. “문화라는 개념 속에 고대 문화도, 유럽 문화도 계몽의 과정을 통해 문화의 종교적 근원과 단절되고, 문화의 상징을 파멸시킨다. 여기에 문화의 운명적 변증법이 있다”고 베르자예프는 지적했다.

끌고 있는 미국은 '소프트 파워'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시키고 오랜 문화 선진국인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 역시 문화 국가<sup>6)</sup>라는 정책을 육성하고 있다. 당연히 소프트 파워로서 문화에 대한 관심은 러시아는 물론이고 자원이 부족하고 수출을 국가의 근간으로 삼아 '국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야 할 한국에게도 지상 최대 명령 중 하나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 지상 명령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문화 정책이다. 정책이란 본디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고 정책에는 전술과 전략이 뒤따른다. 그렇다면 문화 정책이란 문화적 우선순위, 즉 제도적 실천이다. 이는 마치 연출가 브레히트의 격언처럼 "진리를 쓰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쓰일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 정책은 권력의 문제이며 이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국가, 그 중에서 문화부이며, 그러므로 이 정책의 대상은 문화부의 업무로 규정된다고 볼 수 있다.

1) 문화 정책을 수행한 최초의 문화부는 어디서 시작됐을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최초의 공식적인 독립적 문화부는 2차 세계 대전 이후인 1959년 프랑스 드골 대통령 시대이며, 최초의 문화부 장관은 저명한 작가 앙드레 말로라고 전해준다. 실제로 앙드레 말로의 문화부와 문화 정책은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해 수 많은 나라의 전범이 된 것이 사실이다. 1959년부터 10년간 문화부 장관직을 수행한 앙드레 말로는 "국가는 예술을 감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술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sup>7)</sup>

2차 세계 대전 이후 문화정책의 또 다른 축은 미국이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기치 아래 문화 제국주의적 팽창 정책을 펴게 되는 미국은 아이러니하게도 정부 조직상 문화부가 없다. 문화부가 없다는 것이 문화 정책이 부재하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대부분의 유럽의 문화 정책이 중앙 집권적인데 반해서 미국의 문화 정책은 주정부의 선택에 의해 그리고 개인들의 후원에 의해 진행된다. 미국에서는 경제와 문화는 동일한 전쟁터이고 미국에서 정부는 문화의 '영감자' 역할만 수행한다.<sup>8)</sup>

6) 문화국가라는 용어는 <독일 국민에게 고향>으로 널리 알려진 독일 철학자 피히테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건전한 문화 육성과 실질적인 문화 향유권 실현의 책임을 다하는 국가로 요약할 수 있다.

7) 과거 교육부 일부에 속해있던 문화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앙드레 말로는 "대학, 즉 교육부는 가르친다. 라신을 알게 하는 것은 대학의 몫이다. 문화부의 역할은 라신의 작품을 사랑하게 하는데 있다" (앙드레 말로의 1959년 12월 8일 하원 연설) 고 천명하면서 이후 감수성 개발이 프랑스 문화 정책의 중요한 의제가 되기도 했다. 앙드레 말로는 '문화 민주화'를 모토로 프랑스 전역에 '문화의 집'을 건설했다. 이후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미테랑 정부의 문화부 장관인 자크 랑이 1981년부터 93년까지 12년간 문화수장으로 재직하면서 '문화 대중화', '문화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문화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면서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됐다.

8) 그러한 미국의 문화를 이끄는 것은 '자본력'이었다. "미국은 국가가 아니라 비즈니스다. (America's not a country. It's just a business!)"라고 앤드루 도미니 감독의 영화 '킬링 소프트웨어'에서 말한다. 이와 반대로 영국은 문화 정책에서 '국가 패턴' 모델을 지향한다. 특히 영국 황실을 통한 '아트 카운슬'은 영국 문화의 희망이라 할 수 있다.

## 2) 세계 최초의 문화부 - 러시아 문화부!

우리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앞에서 본 최초의 문화부는 프랑스가 아니라 러시아에서 시작됐다는 점이다. 1959년 프랑스에서 문화부가 창설되기 6년 전인 1953년 당시 소련에서는 독립적인 '러시아-소비에트 문화부'가 창설됐다. P. 포노마렌코를 초대 장관으로 하는 문화부는 이전의 '전 소비에트 예술 위원회'(1936-1953)의 업무를 계승했다.

소련의 문화부는 연극, 영화, 음악, 출판 등 문화의 전 영역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면서 스탈린의 죽음 이후 특히 소위 '해빙기'의 소비에트 문화 정책을 주도하면서 새로운 국가 조직으로 거듭나게 됐다. 러시아-소비에트 문화부는 소련의 몰락 이후 러시아 연방이 탄생한 직후인 1992년까지 존속되다가 '러시아 문화 관광부'(1992-2004), '문화 및 대중커뮤니케이션부'(2004-2008)에서 2008년 오늘날의 '러시아 연방 문화부'로 명칭만 바뀌면서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문화부는 그 명칭으로서 원조임을 주장하자는 것만은 아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업무와 정책으로서 훨씬 이전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다. 1917년 혁명 이후 루나차르스키를 수장으로 하는 '소비에트 인민 계몽 위원회'가 그것이다. 혁명 이후부터 1946년까지 존속하면서 문화 업무를 수행한 이 조직의 명칭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계몽(просвещение)'이라는 단어이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러시아에서 '계몽

=문화'라는 전통을 생각할 때 인민계몽위원회가 소비에트 문화 정책의 근간을 이끌어 갔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sup>9)</sup> 계몽으로서 문화 정책의 개념은 이에 앞서 제정 러시아의 전통 과도 맥이 닿아있다. 알렉산더 1세 황제 시기 1802년 러시아는 '국민 계몽부'(Министерство народного просвещения)를 설립하고 러시아의 문화와 교육 그리고 종교를 총괄하게 했다. 그리고 이는 1917년 혁명 후 소비에트 계몽(문화) 위원회로 이관됐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앙드레 말로가 프랑스 전역에 야심차게 건설한 '문화의 집' 정책이 소련에서는 이미 1920년대부터 '문화의 집,' '문화 궁전'이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사실이다. 앙드레 말로 자신이 작가 시절 좌파 지식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소련 체류기간에 러시아 문화에 관심을 가졌더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프랑스의 '문화부' 설립과 동시에 이 문화 정책의 원류는 러시아에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3) 러시아 문화정책의 특징

관제국민주주의의 그림자!

19세기 초 제정러시아 문화정책의 핵심은 국민 계몽부 장관인 우바로프의 "관제국민주주의"이다. 비록 이 정책의 보수성과 반동성에 대해 오늘날 많은 비판을 가하고는 있지만 우바로프가 제시한 정교신앙, 전제정치, 국민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강요하는 정책은 러시아의

9) 물론 1936년부터 예술 업무는 문화부의 전신인 '소비에트 예술위원회'로 이관됐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10) Elise Kimerling Wirtschaffer, *Russia's Age of Serfdom 1649-1861* (London: Blackwell, 2008), p. 212.

“문화 메타포이자 정치적 이념으로서”<sup>11)</sup> 제정 러시아의 중요한 문화 정책이자 지배 이데올로기였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는 향후 러시아 문화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sup>11)</sup>

사실 이 이론은 러시아 천년 역사 속에서 지속됐다고 말할 수 있다. 저 옛날 블라디미르 대공에서 피터 대제로 이어지면서 개별적으로 존재해 오던 러시아 역사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들을 우바로프가 하나로 묶은 것에 다름 아니라 볼 수 있다. 문제는 바로 이 3가지 현상이 향후 러시아 문화 정책을 이해하는 핵심이었는데 있다.

실제로 혁명 후 소비에트 시기 이 관제국민주의의 내용은 다시 등장한다. 제정 러시아에 관제국민주의가 있다면 소비에트 문화 정책의 기본 골조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 할 수 있다. 문예 비평가인 그로이스가 ‘스탈린 스타일’ 이라고 명명한 이 이념은 소비에트의 가장 주도적인 문화정책이 된다.<sup>12)</sup> 흥미롭게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3가지 중요한 요소인 ‘당파성’, ‘인민성’, ‘계급성’은 우바로프의 관제국민주의가 포함한 3요소와 이름만 바뀐 채 그대로 오버랩 된다. 다시 말해 정교신앙은 사회주의 계급이념으로, 전제정치는 당파성으로 그리고 국민성은 인민성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사회주의 몰락 이후 러시아 연방으로 바뀐 현대 푸틴 정부에서도 이러한 관제국민주의적 내용들이 그대로 전승된

다는 사실이다. 푸틴의 정책 역시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정교신앙 이념은 구원자이자로서 러시아 역할론으로, 전제정치는 독재적 권위주의로 그리고 국민성은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로 옷을 바꾸어 입은 듯 보인다. 현재 푸틴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관료제와 검열 그리고 지원금을 통한 통제와 길들이기는 러시아적 역사성을 무시하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2014년 공표된 «러시아 문화 정책 기본법»의 주요 내용이 “문화는 국가 정책과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문화가 국가에 봉사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볼 때 관제국민주의적 이념의 뿌리는 깊고도 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3)</sup>

#### 절충주의 문화 정책!

이러한 관제국민주의적 기본 골격 아래에서 러시아 문화 정책의 특징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서구의 모델들과 섞이는 절충주의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19세기말 20세기 초 제정 러시아의 문화를 이끌었던 모습은 마치 미국식 모델을 떠오르게 한다. 이 시기 만일 국가, 황제 권력이 국가주의적 정책을 펴며 민중 계몽으로서 문화 영역을 대하였다면, 개인은 러시아 문화 확립과 고양을 이끌었다. 무수한 예들 중에 디아길레프의 ‘러시아 시즌’, 트레치야콥프의 미술 컬렉션, 모로조프의 모스크바 예술극장

11) 특히 필로페이의 «모스크바 제3 로마론»의 추종자이자 상속자를 자처했던 그는 러시아 문화의 독창성과 우월성 그리고 선택 받은 러시아 민족의 감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12) 이 정책은 이미 1906년 루나차르스키가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을 언급한 이후 1932년 문학 신문의 사설에서 처음 이 용어가 등장했고 그 후 1934년 제1차 소비에트 작가동맹회의에서 고리키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천명한 후 공식화 된다.

13) 최근 이러한 검열과 통제에 반대하는 연출가 키릴 세레브렌니코프를 횡령 혐의로 기소하고 가택 연금 시킴으로써 국가에 대한 문화의 의무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연극 후원 등의 언급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다분히 미국식 문화 정책의 모델을 절충한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문화의 개인적 활동은 가장 러시아적 정신, 민족적 이념 그리고 신화를 창조하면서 20세기 초 러시아 문화의 전 영역에서 르네상스를 이끌게 됐다.

둘째, 소비에트 문화 정책 역시 절충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혁명 전 러시아 문화의 직접적인 후계자로서 소련은 서구의 모델과 사회주의 소비에트 문화의 창조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 시기 '선전 선동의 도구로서 문화'는 문화가 이데올로기의 선봉이며 문화 없이는 정치 경제 사회 현상으로 직접 진입이 되지 않는 구조임을 보여주었다. 비록 소비에트 문화현상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전체주의의 부정적 현상과, 소비에트 국민과 국가 문화의 발전이라는 긍정적인 현상 속에서 혼란스러워 하지만 냉전을 치루던 미국의 문화 정책이 소비에트의 현상을 흉내 낸 것을 보면 이중적, 절충적 의미는 분명해 보인다.<sup>14)</sup>

세번째로 현대 러시아 문화 정책 역시 절충적이다. 현대의 러시아 문화정책은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소비에트 시대의 유산을 상당부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소비에트 문화는 다시 제정 러시아로부터 그 자양분을 섭취하였다는 점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다. 소비에트에서 문화정책의 전술인 선전과 선동 메커니즘은 현대에도 국가 홍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유지되며 이는 수 많은 나라에서 국가 브랜드 강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사용되고 있

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문화 산업', 즉 문화 콘텐츠 부분이 2014년 러시아의 중요한 문화정책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점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

러시아 문화정책의 절충주의적 성격은 집요하게 불간섭 원칙을 지키는 미국이나, 국가주의적 문화 민주화를 고수하는 프랑스, 문화 산업을 놓치지 않는 영국 등과 달리 필요에 따라 언제나 유연하게 수신과 발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러시아 문화는 타 문화와 정책에 대한 수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러시아와의 교류에 있어서 유리한 지점이며, 심지어 우리의 고유 문화 정책이 개발된다면 새로운 협력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

### 3. 우리의 대응

과연 러시아 문화와 그 정책을 보면서 어떤 대응과 전략으로서 우리의 문화 정책을 펴야 할 것인가? 앞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문화가 '숭배'로부터 시작한다고 언급했다. 숭배를 어원으로 하는 문화 전통을 가진 러시아를 주로 '경작'에서 출발해 자기 계발 혹은 여가의 활용으로 바라보는 국가에서는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문화를 '문치 교화'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우리의 입장에서 러시아적 문화 개념은 낯선 상황일 수밖에 없다. 문치 교화란 무력이 아니라 글로써 세상을 교화시킨다는 뜻으로, 서구의 '문화-경작'의 보편적 의미와 비슷하게 이해할 수

14) 미국의 매카시 열풍을 기억해 보자. 또한 소비에트 문화 모델인 "건축적", 즉 전체주의적 사회에 특징적인 모델이 미국의 마천루를 비롯한 형태로 수용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있다. 다만 서구화의 영향, 일제 강점기와 전쟁 등을 거치면서 질곡의 20세기를 살아온 우리에게 문화란 자유로운 시간을 활용하는 ‘여가’의 개념으로 변형 수용됐고, ‘쉬는 것’, 또는 ‘놀이’적 측면이 강조됐다. 그리하여 문화를 고단한 삶을 위한 ‘휴식’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 러시아의 문화적 태도를 이해하는 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감’으로 문화를 받아들이는 러시아와 ‘휴식’으로 문화를 받아들이는 한국과의 이 차이는 생각보다 간극이 넓다. 물론 이는 우열의 문제가 아닌 이해의 문제이다. 만일 러시아에서 누군가를 ‘문화행사’에 초청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여가의 행위가 아니다. 이는 이 공연 공간에서 서로 ‘공감’을 하고 ‘소통’을 위한 정치적 외교적 전략임을 이해해야 한다.<sup>15)</sup>

한-러 양국의 관계 역시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독일의 철학자 마틴 부버의 지적처럼 “현대인에게 스킴만 있고 만남이 없다”는 말은 현재 한-러 간의 문화 현상이기도 한다. 부버에 따르면 진정한 만남을 위해서는 상대를 2인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수적 선결 조건이다. 상대를 3인칭 ‘그’가 아닌 2인칭의 ‘그대’로 불러줄 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공감’문화와 ‘휴식’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가 2인칭으로 만나야 하고 이렇게 어울릴 때 진정한 만남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만남을 통해서도 한국-러시아간의 교류는 더욱 늘어나고 부유해 질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마틴 부버의 이론에 미래적 대안을 하나 첨가해 본다. 이제 우리의 교제는 스킴에서 만남으로 그리고 ‘사귀’으로의 진행돼야 한다. 사귀는 함께 노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주체와 객체가 따로 없다.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이다. 이것이 21세기 한-러 문화교류의 중국적인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우리는 러시아 문화정책의 근간으로 관제국민주의와 절충주의 전통을 지적했다. 이는 러시아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틀이기도 하다. 종교성과 전제성, 국민성은 국가 우선주의에 다름 아니다. 이는 문화 정책에서 개인의 개성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따져 보고, 국가 혹은 체제를 드러내고자 하는 정책이다. 비록 관제국민주의적 현상이 현재에는 부정적 의미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긍정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측면도 있음을 간파해야 한다. 흔히 러시아의 영혼이라는 이 3가지 현상들은 종교적 관용, 지상천국에 대한 갈망, 민중에 대한 사랑 등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비에트 이래 러시아에서 문화는 국가 혹은 체제 선전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었다. 문화가 국가 정책의 아방가르드로서 포진하고 문화를 통해 다음 액션 플랜이 나오는 것이다. 그에 반하면 우리에게서 문화는 국가정책의 후순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에게 문화란 모든 것이 잘 됐을 때 치루는 뒷풀이 행사의 개념

15) 전통적으로 동양에서 문화는 ‘문+화’를 분리해서 생각해 왔다. 문이란 사람의 가슴에 무늬를 넣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고대 장례 풍습에서 시신에 무늬를 새김으로 경건함을 나타내고 신과의 소통을 의미했다. 화란 정상적인 사람이 늙어 웅크리고 있는 모습, 즉 변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붙여서 이해하자면 ‘신과의 소통을 통해 변화되는 것’으로 그 뜻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 지점은 러시아와의 대화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해 준다고 할 것이다.

이 강하다. 문화를 앞세우고 먼저 상대와 공감한 다음 시작하려는 러시아 문화와, 이 과정 없이 실질적인 문제에 직접 접근하려는 우리의 문화 차이를 이해 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폴 케네디는 《강대국의 흥망》에서 “한 나라가 세계무대에서 한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때에는 경제력, 군사력의 성장과 더불어 반드시 문화의 융성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바 있다. 우리 역시 독자적인 문화 정책을 서둘러 확립해야만 한다. 만일 문화정책에서 국가의 역할을 규정한다면 유럽에서 국가는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미국에서 국가는 ‘영감자’ 역할을 하며, 러시아에서 국가는 ‘정원사’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문화 정책 모델은 어떤 국가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당연히 세 역할을 모두 통합할 수 있는 국가의 문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일 것이다.

### III. 나가는 말

우리는 러시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해할 수 없으니 믿을 것인가? 아니면 신뢰할 수 없으니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처음에 인용한 두 편의 시, 슈체프적 러시아와 구베르만의 러시아를 둘다 동시에 바라봐야 한다. 때론 이해 하려 하지 말고 믿어야 할 부분이 있다. 때론 반드시 이해해서 위험성을 해소해야 한다. 이는 마치 러시아의 국가 문장인 쌍두독수리처럼 양쪽을 바라 봐야만 러시아를 알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우리는 러시아를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했다. 공감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한가한 휴식을 전했고, 가장 먼저 나오는 아방가르드 전위대로서 문화를 한가하다 생각해 뒷풀이로 폼하시켰다. 러시아의 문화 정책 자체에 대해 무지했고 동시에 우리 나름의 문화 정책도 없었다.

한가지 눈에 띄는 예를 들어보자. 2015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크림반도 병합으로 인해 G7의 러시아 봉쇄와 제재가 진행됐다. G7의 일원인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때 일본은 러시아 대통령 문화 특사인 전 문화부 장관 미하일 쉬베드코이를 동경으로 초청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집중적인 양국 문화 교류를 체결했다. 한쪽에서는 제재를, 다른 한쪽에서는 문화적 대화를 동시에 이끌어 나가는 일본의 정책은 당시 G7국가도 아니면 서둘러서 러시아와의 급격한 냉각화를 이끌었던 우리나라의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다. 국민과의 소통 뿐 아니라 대외 정책에 있어서 ‘소통’을 화두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막힌 대 러시아 정책의 중요한 창구로 ‘북방경제협력 위원회’를 가동시켰다. 러시아의 신 동방정책에 조응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기대해 본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잊지말아야 할 것이 있다. 경제와 안보 정치적 문제 해결의 첫 단추이자 지속 가능한 정책은 문화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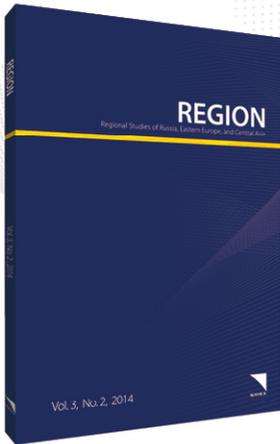
· 함영준, 단국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Russia Policy Review

러시아 폴리시 리뷰



# REGION

REGION is a peer-reviewed international journal that explores the history and current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ffairs of the entire former Soviet bloc. In particular, the journal focuses on various facets of transformation at the local and national levels in the aforementioned regions, as well as the changing character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rest of world in the context of glocalization.

## Russia·Eurasia Focus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매주 발간하는  
「주간 Russia-Eurasia Focus」는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담은 온라인 칼럼입니다.



# 2017

Vol.1 | No.2 October

## Russia Policy Review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TEL.031-330-4852 FAX.031-330-4851  
81, Oedae-ro, Mohyeon-myeon,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17035, Korea <http://www.rus.or.kr>